

혁명

정세월간지 6월

창간호

- 통합진보당 사태와 새로운 노동자당
-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본격화하자!
- 2012년 현대자동차 투쟁을 뇌관으로 총파업을 조직하자!

재능교육은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 중단하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blog.jinbo.net/wrp)

정세월간지
〈창간호〉



- 발행일 : 2012년 6월 4일
-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3가 70번지 3층
- 전화번호 : 02) 6348 - 8318
- 블로그 : [blog.jinbo.net /wrp](http://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 값 : 5,000원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재능지부의 거리농성투쟁이 1620 일을 넘어섰다. 매주 화요일마다 혜화동로타리에서 진행되는 재능지부집회에서 나란히 앉은 강종숙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위원장과 유명자 재능지부 지부장

표지사진 : 홍정운

목 차

창간호를 내며 5

통합진보당 사태와 새로운 노동자당 - 양효식 9

현 시기 남한에서 노동자당 전술을 위하여 - 양효식 23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본격화하자! - 고민택 33

통진당 사태를 계기로 등장한 쟁점에 대하여 - 고민택 41

2012년 현대자동차 투쟁을 뇌관으로 총파업을 조직하자! - 최병승 55

[JW지회] 단결로, 연대로 직장폐쇄 철회투쟁 승리

비정규직 조직화와 더욱더 과감한 투쟁이 승리의 관건! - 구재보 59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2막을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로 열어 나가자! - 임천용 67

프랑스와 그리스 선거 이후 유럽 정치정세 - 이민수 75

[그리스] 선거와 혁명전략 - 홍수천 83

[자료] 노동자정부 전술에 대하여 103

[기고] 오월동주, 1사1조직 통합과 이동우 죽이기 - 아방가르드 111

창간호 발행에 즈음하여 118

- 〈혁명〉과 함께 혁명정당 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나가자!

- 〈혁명〉, 이렇게 실천하자!!

- 정세월간지 ‘혁명’ 창간을 축하합니다.

〈혁명〉 창간호를 내며

통합진보당 사태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를 정도로 확산 일로로 치닫고 있다. 상하 좌우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모든 세력과 집단이 이 사태의 자장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하다. 좌익진보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우익 세력까지 이념공세와 공안몰이로 사태 확산

에 가세하고 있다. 워낙 많은 사안들과 쟁점들, 그리고 전선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나는 물음조차 다들 포기할 정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혁명〉 창간호 준비도 통진당 사태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 때문에 이 사태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통진당 사태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고 속 시원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창간호로서 빛이 바랄 것이다. 통진당 사태를 계급적 관점에서, 노동자혁명의 관점에서 그 ‘본질’을 캐서 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태도와 답을 마련해 보려고 했다. 〈창간호〉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겠다.

통진당 사태의 와중에서도 〈혁명〉 독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동지들이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을 막고 야만적인 정리해고를 철회시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쌍용차 투쟁 확대를 위해 분투했다. 민주노총 총파업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쌍차 투쟁을 비롯하여 장투사업장 투쟁들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야간노동 철폐, 생활임금 쟁취,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 등 현안 투쟁들을 확대하는 속에서 나올 것이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지는 총파업만이 속빈 강정이 아닌, 여러 대중투쟁들의 연결망으로 속이 꽉 찬 실질적인 총파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당면한 투쟁 과제들과 함께 정세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계급적 과제가 있다. 통진당 사태 속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종 파산이 제기하는 과제이다. 민주대연합, 야권연대 등 자본가 정치세력과 손잡기 위해 팔아넘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가 그것이다. 계급협조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진정

한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에 시급히 착수해야 할 때다.

이 투쟁과 당면 현안 투쟁, 총파업투쟁은 결합되어야 한다. 별개의 투쟁이 아니다. 통진당과 함께 민주노총이 쳐놓은 야권연대 구도를 돌파할 대안 정세구심·대안 지도력을 세우지 못하고서는 당면 투쟁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뚫고 전진할 수 없다. 노동자운동에서 계급협조의 고리를 끊어내고 잃어버린 계급적 독립을 수복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면 마땅히 그러한 대안 정세구심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반드시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면 현안 투쟁과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은 분리될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을 자본가 정치세력의 꼬리로 전락시키는 야권연대 같은 계급협조에 맞선 투쟁에서 하나로 연결된다.

〈혁명〉 창간호는 그래서 현재 투쟁의 일선에서 있는 동지들, 총파업투쟁 조직에 앞장서고 있는 동지들이 이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에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또 다시 노동자들을 표 쪼고 돈대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의회주의 정당 건설로 결말나는 것을 막고,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의 대안 지도력을 구현하는 당의 건설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보아서다.

야권연대에 반대하고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자 정당이 또 다른 의회·개량주의 정당 건설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혁명정당 대신 초기 민노당을 복원하는 수준으로, 또는 좌파 사민주의 정당 정도로 귀

결된다면 민노당 파산의 궤적을 -- 이번에는 압축적으로 급속히 -- 되풀이 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야권연대구도로 다시 빨려들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이 혁명정당 창당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은 그냥 당위가 아니라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이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담보 조건이다.

보다도 통일적으로 수행해야 할 때이다.

오늘 정식 창간하는 월간 정세지 〈혁명〉도 여기에 복무할 것이다. 창간을 계기로 〈혁명〉을 더욱 더 버려내서 거듭 동지들의 투쟁에 무기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혁명**

2012년 6월 1일

작년 8월 창간 준비호를 내기 시작하면서 〈혁명〉은 “사회주의자들·선진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량주의자들과의 지도력 다툼에서 유용한 무기로 복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 때 이래 이 과제와 임무는 계속 구체화되어 왔는데,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한 지도력 다툼을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지형 위에서 전면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빼앗긴 계급적 독립을 적들의 수중에서 되찾기 위한 투쟁과 내부에서 또 다시 계급협조에 문을 열어 놓는 개량주의와의 지도력 다툼, 이 두 투쟁을 그 어느 때



통합진보당 사태와 새로운 노동자당

양효식



1. 통진당 사태 – 평가와 전망

- 1)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종 파산 → 국민정당으로 ‘새로나기’
- 2) “재창당 수준의 혁신” – 야권연대에 더욱 목을 매다
- 3)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안정화 구도도 함께 파탄 나고 있다

2.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

- 1) 야권연대에 문을 열어놓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로는 보수우익의 공세에 맞선 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없다
- 2) 야권연대 구도를 돌파할 대안 정세구심과 대안 지도력의 문제
- 3) 계급적 독자성은 일차적으로 정치 강령의 문제다

3. 새로운 노동자당 – 전망과 과제

- 1) 계급적 독립을 수복하기 위한 대적 투쟁
- 2)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다시 전진시키기 위한 전술
- 3)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

1. 통진당 사태 - 평가와 전망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는 수면 아래서 진행되고 있던 당의 성격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모두들 전망하듯이 이번 사태를 경과하면서 통진당은 그나마 남아 있던 노동자 정당의 흔적마저 지워버리고 완전한 ‘국민정당’으로 넘어갈 태세다. 지금 수면 위에서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 당내 파벌 간 쟁투와 권력 이동은 사실 이러한 변화의 외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연초에 민노당이 국참당과 통합하여 통진당을 결성했을 때,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에서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정당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자본가 정치세력인 국참당과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민주당과 다를 바 없는 완전한 부르주아 정당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던 것이다. 민주당과는 달리 통진당이 민주노조운동에 기반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로서의 민노당에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고, 아직은 공식적으로 민주노총에, 즉 조직 노동자들 사이에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통진당 사태로 인해 그러한 역사적 뿌리가 지워져버리고 노동자 지지 기반도 대거 떨어져나갈 상황이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통칭 ‘우파’·국민과 관료들이 당장 통진당을 포기하고 독자적 길을 모색할 것 같지는 않다. 조합원들의 이탈을 부추기거나 방치할 것 같지는 않고, 자신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아직 이탈을 막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선에서 통진당과 야권연대 지지에 앞장섰던 그들로서는 자신들도 이번 통진당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따라서 조합원 대중들 사이에서 그 권위와 신망이 급격히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진당 사태가 안고 있는 거대한 파장과 폭발력을 놓고 볼 때 향후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통진당 배타적 지지나 야권연대 대세론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적 다수파의 지위조차 결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황까지 예상된다.

통진당이 설사 분당 사태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통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는 수면 아래서 진행되고 있던 당의 성격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통진당 사태는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종 파산을 확인사살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번 통진당 사태는 한 편으로 이러한 파산을 덮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진당으로는 안 된다’는 정서와 논리가 확산될 수 있는 토양이 광범위하게 형성될 것이다. 통진당이, 예컨대 노동자계급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고 다른 대안적인 노동자 정당이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는 데 그 동안 성공해 온 서유럽 사민주의 정당들 같은 지위로 안착할 가능성은 이제 결정적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제 남은 가능성은 국민정당, 즉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 안착하는 길이지만, 민주당의 존재로 인해 그러한 여지마저도 극히 협소한 조건에서 결국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민주당의 위성정당화와 나아가 흡수통합의 길이다.

1)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종 파산 → 국민정당으로 ‘새로나기’

이와 같이 통진당 사태는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종 파산을 확인사살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번 통진당 사태는 한편으론 이러한 파산을 딛고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정치지형이 형성되고 있음을 뜻한다. 통진당이 국민정당화하면서 퇴거한 자리에 노동자 정치운동의 공백 상태가 생겨났고, 이것이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긴급한 일정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통진당 사태의 본질과 함의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 당권파가 밀어붙이고 있는 “재창당 수준의 혁신”과 이에 따른 당내 권력 이동에 대해 기존 당권파는 ‘쿠데타’로 간주하여 극렬하게 저항하

고 있지만, 무대 위 배우들의 행위 그 배후에서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당의 질적 변환, 즉 부르주아 정당으로의 ‘새로나기’에 대해서는 당권파 입장에서조차 -- 그것에 대해 그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 저항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아니, 반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참당과의 통합부터 총선 야권연대까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대연합 ‘공동’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이 모든 포석이 애초부터 당권파 자신들이 발기한 사업이고 자신들이 가장 앞장서서 밀어갔던 전략적 행보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의회주의를 통한 제도권 진입 야망에 눈이 멀어 그러한 민주대연합 전략노선이 결국은 자신들을 삼켜버리고 있는 이번 사태로까지 이어질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뿐이다.

당권파에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자본가계급과 손잡는 민주대연합을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하위 전술이다. 민주대연합은 전략 목표이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그 목표를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수단이 목표와 충돌할 때는 내다버리고 다른 수단을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 중심의 야권연대 연립정부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당의 성격 변화도, 즉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버리고 국민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 당권파의 민주대연합 전략노선이다.

다만 그 과정을 자신들이 주도하고, 결과물의 최대수혜자도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내 ‘패권주의’와 ‘비민주성’은 당권파가 결코 놓아버릴 수 없는 자기 권력 근거다. 이 권력 근거가 이번 사태로 철저히 해체될 상황이다.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에서 공공연한 부

르주아 정당으로의 이행을 완성하고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정부 전략을 일관되게 밀고 갈 최적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이번 사태가 정리정돈해 준 것이다. NL 당권파보다는, 당 행사에서 애국가를 불러야 한다는 국참당계가 미션을 수행할 최적의 주체다!

당내 패권주의와 비민주성에 대한 단죄와 청산은 이러한 정리정돈을 위한 매개이다. ‘재창당 수준의 혁신’의 방향은 단순히 당내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을 명분으로 한 ‘혁신’의 실 내용은 국참당계 중심의 당내 세력 재편을 통한 국민정당/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의 이행의 완성이다. 그리고 야권연대 강화를 위한 이러한 최적의 ‘내부 정비’를 통해 민주대연합 연립정부로 거침없이 내딛는 것이다.

결국 통진당 사태의 본질은 이러한 이행을 더욱 더 순탄하게 하고 가속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긍정쿠데타다. 기존 당권파가 이행에 반대해서가 아니다. 위낙상식 이하의 패권주의와 비민주성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어 더 이상 믿고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당권 경질이 불가피한데도 평화적 당권 교체에 완강히 저항하니 ‘혁신 비대위’ 등의 기습적인 정변이 동원된 것이다. 이것이 사태의 본질이고 전말이다.

2) “재창당 수준의 혁신” – 야권연대에 더욱 목을 매다

이러한 이행과 그 이행의 축진을 위한 당내 권력이동 정변에 대해서는 통진당 밖으로부터도 강력한 지원과 옹호사격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겨레 같은 자유주의 언론과 ‘진보진영’의 자유주의 인사들이 여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들은 당권파의 비민주성과 회의장 폭력사태를 빌미로 “진보정치의 재구성이 절실하다”면서 사실상 부르주아 정당으로의 신속한 이행을 채근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가장 숨김없이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김기원 교수의 5월 17일

정리하고 철폐 요구를 버리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구부리지 않고서는 민주대연합 정부로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야권연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김기원만이 아니라 통진당 제세력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한겨레 칼럼 〈개혁적 진보는 살아 있다〉이다. 김기원은 지난 희망버스 운동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철폐는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므로 비현실적인 구호라며 비난했던 자이다. 그는 이번 통진당 사태에 대해서도 “시장과 국가의 질 향상, 즉 공정한 시장경쟁과 민주적 효율적 국가를 추구”하는 ‘개혁적 진보’를 강화시키는 것이 통진당 혁신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정리하고 철폐 요구를 사회주의와 엮어서 함께 “비현실적”이라는 악선동을 펼쳤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통진당을 아예 건전 국민정당으로 육성, 강화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기원의 주문이 뜬금없는 별종 같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 기존 당권파든 신 당권파든 통진당 제세력이 모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정리하고 철폐 요구를 버리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구부리지 않고서는 민주대연합 정부로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야권연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김기원만이 아니라 통진당 제세력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원이 무슨 영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의 주장이 통진당 입장에서 특별히 새로운 것도 아님에도 여기서 인용한 이유는 그가 정리하고 철폐 요구에 대한 비난에서부터 ‘개혁적 진보’로의 통진당 혁신 방향까지 이번 사태를 거쳐 통진당이 기착할 종착점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해 주는 미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최종 마무리되고 나서 통진당이 마침내 도달할 정체성은, “정리하고·비정규직 철폐”는 비현실적 요구라며 가장 ‘솔직하게’ 반대하고 나설 세력이 주도하는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일 것이다.

이와 같이 통진당 안팎에서 앞 다투어 주문하고 있는 ‘재창당 수준의 혁신’과 ‘진보 재구성’의 내용을 보면, 통진당 사태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더욱 더 확증시킨다. 한편, 혁신을 요구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자신이 혁신의 대상인 민주노총이 지금 조건부 지지 철회를 내세우며 통진당에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 중심’의 혁신 방향을 통진당이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평가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구 민노당 체제에서든 현 통진당 체제에서든 현장활동가들과 평조합원들의 주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노동자들을 표 찍고 돈대는 기계로 전락시키는 의회주의가 계속 지배하는 조건에서 ‘노동 중심성’은 당 내에서 단지 노조관료들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시켜 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 부르주아 정당, 국민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과 이러한 종류의 ‘노동 중심성’과는 전혀 충돌할 일이 없다.

3)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안정화 구도도 함께 파탄 나고 있다

거대한 파장을 안고 있는 통진당 사태는 지금 전 세계 대공황과 자본주의 체제 위기 심화를 배경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음을 상기하자. 남한의 경우도 지금 유럽 재정위기 격화로 인한 유럽계 자금 이탈이 본격화하면서 세계공황의 한 가운데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증시 폭락, 환율 급등, 공공부채·가계부채 위기 폭발, 은행 도산 등 금융공황 국면을 거쳐서 산업공황으로 폭발할 내적 조건이 남한 경제에도 무르익어 있다. 수백조원대

로 쌓여가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투자 대비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투자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자본의 과잉축적·과잉생산 위기가 수면 아래서 내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금융공황을 계기로 이 실물경제 위기가 폭발한다면, 작년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업도산과 직장폐쇄는 작은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 정리해고, 긴축, 민영화 등 자본의 위기 전가 공격도 전면화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함께 정치위기도 격화되고 있다. 그 동안 미국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유지해 왔던 유럽이 뒤 흔들리고 있다. 총파업과 전투적 가두시위 등 대중투쟁이 일상화하고 있고, 그와 함께 선거에서도 기존 양당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좌우 양극화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기존 사민주의 정당을 대신해서 그보다 왼쪽에 있는 세력들이 선거에서 약진하고 있다. 프랑스 대선 1라운드에서 좌파전선의 멜랑송 돌풍이나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 연합(SYRIZA)의 제2당 부상 등 모두 자본주의 정치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사례들 중 일부이다. 결선에서 승리한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후보가 긴축 반대를 전면에 내건 것도 대중투쟁의 고양과 그 여파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좌경화 물결의 압박을 받아 그 동안의 ‘사회자유주의’ 노선(블레어의 제3의 길, 슈뢰더의 신중도 등 신자유주의의 사민주의적 버전을 뒤로 물리고 좌클릭 몸짓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후보가 긴축 반대를 전면에 내건 것도 대중투쟁의 고양과 그 여파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좌경화 물결의 압박을 받아 그 동안의 ‘사회자유주의’ 노선(블레어의 제3의 길, 슈뢰더의 신중도 등 신자유주의의 사민주의적 버전을 뒤로 물리고 좌클릭 몸짓을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사민주의 정당처럼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으로 안착하지도 못한 채 파산해버리고 국참당계를 중심으로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지지 기반이 대거 떨어져나가는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남한에서도 자본주의 정치위기는 아직 초기적인 형태지만 이미 불거지고 있다. 이번 통진당 사태로 다시 확인되고 있는, ‘민노당을 통한 의회주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종 파산’이 바로 자본주의 정치위기의 한 발현이다. 이 파산과 함께 부르주아 지배체제 안정화 구도도 파탄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진당 사태를 계기로 현재 보수우익의 이념공세가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겨냥해 광란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총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서유럽처럼 남한에서도 의회주의·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을 통해 노동자들을 체제내화 시켜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안정화에 관건이 아닐 수 없다. 객관적으

로 민주노동당에게 그런 배역이 주어졌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국참당과의 통합,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강화 등을 거쳐서 이번 통진당 사태에 이르면서 그러한 역할도 끝장났다. 서구 사민주의 정당처럼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으로 안착하지도 못한 채 파산해버리고 국참당계를 중심으로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지지 기반이 대거 떨어져나가는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이 설사 통진당 사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무시하고 현재 조건부 지지철회에서 다시 지지 회복으로 입장을 선화한다 하더라도 대중적 수준에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 운동의 최종 파산과 함께 제도권 노동자 정당을 통한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안정화 가능성도 날아가 버리고 있는 것이다. 통진당이, 예를 들어 압도적인 조직노동자 기반을 가지고서 대안적인 노동자 정당을 허용치 않는 서유럽의 사민당, 노동당, 사회당 같은 지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제 결정적으로 닫혀 버렸다. 이번 사태 이후로 노선적으로도 더욱 우경화하고 노동자 지지 기반도 대거 날아가 버린 통진당에게 남은 길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에 더욱 목을 매고 민주당의 부속 정당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심지어 흡수통합의 길로 빨려드는) 것뿐이다.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총자본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락하여 노동자들의 체제내화에 별 역할을 할 수가 없는 통진당은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는 정당이다.

야권연대/민주대연합 전략이란 것도 개량주의 노동

자 정당을 통해 노동자 대중을 자본가 야당의 지지부대로 만들어 안정적인 부르주아 양당체제(한국에서는 보수정당 대 민주대연합블록)를 구축할 수 있을 때 총자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민주당의 부르주아 위성정당(민주당 별관)으로 전락해버린 통진당의 경우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민주대연합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만 있는 미국식 양당체제 같은 것이 안착될 여지도 없다. 남한의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처럼 노동조합운동의 자발적 지지를 끌어낼 정도의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계급적으로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한국노총이라면 모르겠지만 민주노조운동에 관한 한 민주당이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 어쨌든 이와 같이 노동자들, 특히 조직노동자들의 체제내화가 차질을 빚으면서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안정화 구도도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경제가 조만간 세계공황의 한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면 지배체제의 불안정과 정치위기 또한 전면화할 것이다. 그리고 개량주의의 물적 토대가 문제가 되면서 현재 유럽의 계급투쟁 상황이 더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닐 것이다.

2.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

1) 야권연대에 문을 열어놓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로는 보수우익의 공세에 맞선 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정세 조건과 이를 배경으로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종 파산 및 국참당계를 중심으로 한 통진당의 국민정당화는 이 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식 무대에서 노동자 정치운동의 공식 상태를 낳고 있다. 객관적으로 이것은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을 긴급한 일정 위에 올려놓고 있다.

현재 통진당 사태가 당장은 선진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치 기피증과 냉소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과 조중동 등 보수우익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이념공세와 공안몰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자들 사이에 정치적 위축감이 조성될 수 있다. 이를 빌미로 야권연대/민주대연합에 대한 반대전선을 뒤로 물리고, 이른바 반‘파쇼’ 전선, 반새누리당 전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운동 진영 일각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반MB 야권연대 강화론에 다른 아닌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위축을 타개하는 방향이 아니라 또 다시 노동자운동을 민주당과 야권연대의 꿈무늬 부대로 전락시켜 보수우익의 공세에 맞선 대항을 오히려 봉쇄하는 방향이다.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전선을 명확히 하는 대안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의 전면화를 통해서만이 보수우익의 공세에 대항하는 실제 전선도 형성할 수 있다.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전선을 명확히 하는 대안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정치투쟁의 전면화를 통해서만이 보수우익의 공세에 대항하는 실제 전선도 형성할 수 있다.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의 대전제이자 대원칙은 야권연대와 단절이다. 현 계급투쟁 정세에서 야권연대와 단절은 그 어떤 새로운 노동자당 프로젝트에서도 절대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통진당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관료 등 야권연대/민주대연합 지지 세력들은 자본가계급의 한 분파와 손잡는 그들의 계급협조 노선으로 인해 반새누리당, 반MB 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총선 전후로 계속 폭로되고 있다. 현재 보수우익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이고 통진당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수세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라. 야권연대와 단절하지 않고서는, 따라서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새로운 대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일관된 비타협적 투쟁을 담보할 수 없다. 설사 ‘변혁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내건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야권연대/민주대연합/인민전선에 문을 열어 놓고 추진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면 ‘변혁’은 고사하고 반MB/반새누리당 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없다.

2) 야권연대 구도를 돌파할 대안 정세구심과 대안 지도력의 문제

이와 같이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의 대전제이자 대원칙은 야권연대와의 단절이다. 현 계급투쟁 정세에서 야권연대와의 단절은 그 어떤 새로운 노동자당 프로젝트에서도 절대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투쟁들과 개별 투쟁전선들이 민주노총의 야권연대 구도를 벗어나서 전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대안 정세구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대한 기획을 담고 있지 않은 그 어떤 새로운 노동자당 프로젝트도 정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조관료들을 통해서 노동자운동에 행사되고 있는 야권연대의 정세적 규정력에 대당하는 대안 지도력이 되지 못하는 그 어떤 새로운 노동자당 프로젝트도 정세와 계급투쟁에 무가치하며 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는 이와 같이 정세적 대안 지도력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계급적 독자성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프로그램, 즉 강령의 문제이다. 강령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제1의 담보물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또 미래의 어느 시점에 결정적인 정세가 도래할 때나 명확히 하면 되는 문제도 아니다. 일차적으로는 당면 투쟁전선을 포함하는 정세 대응 프로그램의 문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폐지부터 재벌 문제, 정부 구성 문제(야권연대/민주대연합 연립정부나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노동자정부나)까지 이들 사안에 대한 노동자계급 자신의 프로그램을 갖고 대(對) 자본·대 정권 전선을 치느냐 아니면 자유주의 자본가 정치세력 주도의 야권연대와 제도정치권의 프로그램에 휩쓸리고 결국 그 꼬리로 전락하느냐의 문제다. 따라서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세상” 슬로건을 비현실적 요구라며 비난하는 악선동에 정면으로 맞서서 그 요구를 “재벌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정부” 요구로까지 연결시키는 그러한 정치 프로그램을 내걸고 투쟁하는 당만이 진정한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구현할 수 있다.

자본가 정당과 함께 하는 야권연대 연립정부(민주대연합 정부)는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요구라며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야권연대에 대한 정치적 태도 문제를 회피하면서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일관되게 밀고 갈 수 없다. 그 요구를 “비정규직 차별 축소”,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구부리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 간다면 “노동자정부” 요구를 비껴갈 수가 없다. 정부 문제에 대해서, 정치투쟁 요구에 대해서 기권하면서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비타협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요구는 고립적인 요구로서가 아니라 일련의 정치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배치되는 요구여야 한다. 이러한 정치 강령을 배제하는 종류의 새로운 노동자당 프로젝트는 현실가능성을 핑계 대며 “비정규직 차별 축소”,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야권연대 공약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결국 현재의 진보신당처럼 조직적으로는 독립적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치 내용에서는 결코 노

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라고 할 수 없는 당을 또 하나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진보신당 세력이나 또는 그 좌익을 구성하는 좌파노동자회처럼 비정규직·정리하고 철폐 요구를 이러한 정치투쟁의 요구들과 연결시키기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면, 말로는 아무리 비정규직·정리하고 철폐에 동의하는 체 하더라도 결국 강령에서는 야권연대 세력들의 공약과 다를 바 없는 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아무리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정치 내용에선 결국 민노당/통진당과 마찬가지로 계급적 독립의 과제를 배신하는 당에 불과할 것이다.

3) 계급적 독자성은 일차적으로 정치 강령의 문제다

“비정규직 차별 축소”, “정리하고 요건 강화”로 구부리지 않고 일관되게 밀고 간다면 “노동자정부” 요구를 비껴갈 수가 없다. 정부 문제에 대해서, 정치투쟁 요구에 대해서 기권하면서 정리하고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비타협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이다.

현재 <노동정치 제안자 모임>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파 세력들이 주장하는 ‘노동 중심’도 계급적 독자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이 노동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야권연대에 맞서 계급적 독자성을 위한 그 어떤 정치투쟁, 정치선동도 수행하지 않아 왔다.

이와 같이 새로운 노동자 정당이 계급적 독자성과 정세적 대안 지도력을 담보하는 당이어야 한다면, 건설될 당이 어떤 성격의 당이어야 하는지가 분명하다. 그 당은 반드시 위와 같은 혁명적 정치강령을 가진 혁명적 노동자 정당이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새로운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혁명정당 대신 또 다른 진보정당이나 애매모호한 ‘좌파정당’으로는 조직 형식만이 아니라 정치 내용에서까지 일관되게 계급적 독자성을 전지할 수 없다.

야권연대에 반대하고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자 정당이 또 다른 의회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혁명정당 대신 초기 민노당을 복원하는 수준으로, 또는 좌파 사민주의 정당 정도로 귀결된다면 민노당 파산의 궤적을 -- 이번에는 압축적으로 급속히 -- 되풀이 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야권연대 구도로 다시 빨려들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이 혁명정당 창당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은 그냥 당위가 아니라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이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담보 조건이다.

계급적 독자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당은 당연히 ‘노동 중심’이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가 말하는 ‘노동 중심’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현재 <노동정치 제안자 모임>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파 세력들이 주장하는 ‘노동 중심’도 계급적 독자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이 노동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야권연대에 맞서 계급적 독자성을 위한 그 어떤 정치투쟁, 정치선동도 수행하지 않아 왔다. 야권연대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담보할 그 어떤 정치 프로그램도 발전시켜 본 바도 없고, 그럴 의지도 보인 바 없다. 오직 민주노총 내 ‘우파’/국민파에 반대한다는 범죄파 블록으로서의 종파적 정체성 이외에 그 어떤 계급적 독립을 위한 투쟁도 회피로 일관해 온 이런 세력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노동자당이 만들어진다면 그 당은 시작부터 야권연대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상층 노조관료 중심이 아닌 설사 건강한 의미의 노동 중심이라 하더라도 정치투쟁의 프로그램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최소강령 수준으로 제한해서는 통진당과 민주노총의 야권연대 전략구도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 노동자 정당이 될 수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 위기 정세에서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요구를 노동자통제 하에 재벌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정부 같은 정치투쟁의 요구와 결합시키는 이행강령에 반대하고 최소강령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치세력화라면 아무리 노동 중심으로 조직상의 독자성을 갖추더라도 결국 내용적으로 계급적 독자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정치투쟁의 계기에서 야권연대 계급협조에 문을 열어놓을 것이다. 진정한 노동 중심성

이라면 계급적 독자성을 일관되게 견지할 수 있는 정치적 프로그램(강령)으로까지 이어지는 혁명적 노동 중심성이어야 한다.

3. 새로운 노동자당 - 전망과 과제

1) 계급적 독립을 수복하기 위한 대적 투쟁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최종 실패했다. 이번 통진당 사태는 이미 민주대연합/야권연대로 만신창이가 되어 온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최종 파산을 확인시켜 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로써 공백 상태로 남게 된 자리는 어떤 식으로든 메워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의 필요성과 의제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고,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그 백지수표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채울 것이냐이다. 즉 어떤 강령·노선으로 당의 정치적 토대를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정세 현안과 계급적 투쟁 과제들을 당 건설투쟁의 과제로 받아 안는 방식으로 주체들의 결집을 이루어낼 것인가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내용과 건설 경로의 문제를 제껴버리고, 오로지 그 공석을 차지하는 데 어떤 세력 조합이 최적의 조합이 될 것인가, 어떻게 판짜기를 해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나 관심을 두는 정치공학적인 접근방식은 냉소주의자들한테나 맡겨두자.

이 공백 상태는 누가 먼저 차지하면 되는 문제가 아

나라, 자본가 정치세력과 손잡는 통진당 결성 및 야권연대로 인해 무너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다시 세우는 문제이다.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고 말 그대로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이루어내는 문제이다. 그래서 공백을 메우는 것은 끼리끼리 모여서 새 당의 깃발을 들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팔아넘겨진 계급적 독립을 수복하기 위한 대적 투쟁을 조직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파산과 실패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지난 정치 세력화에 대한 교훈을 철저히 새기는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강령·전술·조직의 무기를 가지고서 대적투쟁에 나서야 한다. 초기의 민노당을 다시 복원하는 방식으로 계급적 독자성을 회복하는 당면 목표에서조차도 실패하고 말 것이다. 민노당이 창당하던 1990년대 말과 비교할 때 지금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팔아먹기 위해 뛰고 있는 세력이 노동운동 내에 그 때보다 몇배, 몇십배는 더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2)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다시 전진시키기 위한 전술

혁명주의 세력들은 그 동안 교착 상태에 있는 혁명정당 건설 투쟁을 다시 전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술을 이제 이러한 지형 위에서 수립해야 한다. 그러한 전술 수립의 객관적 조건이 숙성되고 있다.

혁명주의 세력들이 발휘할 선도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야권연대에 반대하여 계급적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들 속에서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을 제창하고 이 공동전선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염원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손 붙잡고 마땅히 혁명주의 세력들도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데 나서야 한다. 혁명정당 건설의 과업을 자임하고 있는 혁명주의 세력들은 현재 모든 투쟁의 계기에서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정치 내용과 방법·경로 면에서 당 건설투쟁의 구체적 전술을 내오지 못해 왔다. 이미 통진당 결성과 야권연대로 인해 지금까지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파산하면서 객관적 일정에 올라 있는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이 이번 통진당 사태로 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혁명주의 세력들은 그 동안 교착 상태에 있는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다시 전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술을 이제 이러한 지형 위에서 수립해야 한다. 그러한 전술 수립의 객관적 조건이 숙성되고 있다.

혁명주의 세력들은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노동자들과 어깨 걸고, 객관적 일정에 오른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이 혁명적 노동자 정당의 창건

으로 귀결되도록 투쟁해야 한다.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공동행동과 논의의 과정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한다. 혁명주의 세력들이 발휘할 선도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야권연대에 반대하여 계급적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모든 노동자들 속에서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을 제창하고 이 공동전선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다. 이 공동전선으로 모이는 데는,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고 계급적 독자성을 담보할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을 위해 함께 투쟁한다는 조건 외에 어떠한 전제조건도 필요 없다. 이 목적에 동의한다면 현존 개량주의 정치조직에 소속된 노동자들과도 함께 해야 한다. 공동전선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선진 노동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두루 포괄하는 틀이어야 한다.

3)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 지형 위에서 혁명정당 건설 투쟁을 전진시키기 위한 공동전선 전술은 처음에 이와 같이 ‘과도적 틀’(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체)의 건설을 수반하지만, 그러한 과도적 조직 그 자체가 물론 목적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토론과 공동행동의 과정을 통해 이 과도적 조직을 혁명적 강령 쪽으로 획득하여 이 과도적 조직이 혁명당 창건으로 귀결되도록 투쟁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을 비타협적으로 전개할 때만이 공동전선이 최종적으로 강령·노선에 따

라 갈라지더라도 공동의 틀에 참가한 많은 선진활동가들이 다시 새롭게 혁명정당 건설투쟁 쪽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다.

혁명주의 세력들은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 지형을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전진시킬 전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지형에 공동전선 전술로 개입하여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 운동이 노동자들의 계급적 독립을 위한 열망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열망에 진정으로 충실하게 부응하는 것은 공동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혁명적 이행강령이 최종 채택되도록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현 정세에서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전진시키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자,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을 진정한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라는 성공적 결말로 이끌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¹⁾

혁명주의자들은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에 참가하는 선진활동가 주체들 사이에서 새 당이 그 같은 혁명적 강령을 채택할 때만이 진정한 독자 정치세력화를 이뤄낼 수 있음을 설득하고 입증시킬 수 있다. 현 정세에서 오직 혁명적 강령에 바탕한 혁명정당 창건의 길 이외에 새로운 노동자 정당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기존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보다 왼쪽에 있는 좌파당, 또는 좌익 사민주의 정당 등으로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담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현 사민주의

1) 공동전선으로서의 새로운 노동자당 전술에 대해서는 이 창간호의 다음 글 〈현 시기 남한에서 노동자당 전술을 위하여〉를 참조할 것. ‘노동자당 전술’이 혁명적 맑스주의 전통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어떠한 전술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당들의 ‘사회자유주의’(사민당판 신자유주의) 대신 케인스주의를 선호하는 좀 더 좌익적인 부르주아 노동자당(사민당에서 왼쪽으로 떨어져 나온 프랑스·독일의 좌파당 같은)으로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특히 현 자본주의 체제 위기로 인해 그러한 좌파 개량주의의 물질 토대가 더는 과거처럼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말이다.

그러나 물론, 결말은 물질 토대가 아니라 투쟁에 의해 결정된다. 공동전선의 최종 결말, 즉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민노당 복원 수준으로 귀결되어 결국 실패하느냐는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다.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이 혁명정당 창건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함께 개입하고 투쟁하자! **혁명**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이
혁명정당 창건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함께 개입하고 투쟁하자!



현 시기 남한에서 노동자당 전술을 위하여

양효식



1. 들어가며

과거 레닌은 사민당, 노동당, 사회당 같은 서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을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이라고 규정하였다. 노동자운동의 상승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노동 조합에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주의에 빠져들면서 노동자운동 내에서 자본가 지배체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버린 정당이 이들 정당이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이해를 위해 일관되게 투쟁할 것으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운동 내 자본의 마름 역할을 하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이라는 모순적 규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은 그 정치 내용에선, 예를 들어 한국의 민주당 같은 부르주아 정당과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독립적인 노동자 정당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과는 달리 ‘은폐된 부르주아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으로서의 민노당이 그 동안 민주당에 대해 가졌던 차별성이 이것이었는데, 자본가 정치세력인 국참당과의 통합으로 결성된 통진당은 정치 내용은 물론이고 독립적인 노동자 정당의 형식마저 털어버림으로써 그러한 차별성마저 소멸되고 있다. 통진당 결성은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즉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 이행하는 시발점이다. 이후 총선에서의 야권연대에 이어 이번 통진당 사태는 그러한 이행을 결정적으로 재촉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경과하여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완료되면 통진당은 더 이상 은폐되지 않는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으로 ‘새로 나기’ 한 당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한편으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나아가 흡수통합의 길로 빨려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아무 차별성도 없어진 통진당이라면 더 이상 제도권에서 독자적으로 설 근거도 여지도 모두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계급적 독립을 팔아넘긴 민주대연합/야권연대가 문제의 본질이다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을 둘러싼 논의와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결과로 그 부르주아적 내용이 더 이상 외적 형식에 의해 은폐되지 않고 공공연해져 버림으로써 ‘저건 더 이상 노동자 정당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이제 소수 인자들 수준을 넘어 대중적으로 확산될 상황이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도래는 진정한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가져올 계기로 자리매김 될 것인가? 잃어버린 계급적 독립의 과제를 떠안고자 하는 노동자계급 정치세력이라면 기존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와 파산을 딛고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로 이 상황을 부여잡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또는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논의와 움직임은 대부분 기존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와 파산의 교훈을 올바르게 새기지 못한 채로 출발하고 있다. 실패와 파산의 원인은 민주대연합, 국참당과의 통합, 야권연대 등 자본

가 정치세력과의 계급협조를 위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팔아넘긴 데 있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의 중심 과제는 노동자운동 내에서 계급협조의 고리를 끊어내고 잃어버린 계급적 독립을 되찾는 데 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통진당 사태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패권주의와 비민주성을 노동자운동 내에서 추방하고 자체 쇄신을 이뤄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배반당한 계급적 독립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지금 막연하게 ‘혁신’이니 ‘재구성’이니 따라 외치는 것은 남의 깃발을 들고 흔드는 거나 다름없다. 그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정당화로 몰고 가고자 청산주의 캠페인에 나선 사이비 진보주의자들의 나팔소리에 따라 춤추는 어릿광대짓에 불과하다.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의 문제는 계급적 독립을 수복하는 대적 투쟁의 문제이다. 새로운 강령·전술·조직의 무기를 가지고서 적들에게 빼앗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 문제를 단지 내부의 패권주의와 비민주성을 극복하는 조직운영의 문제나 조직 내부 질서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파산과 실패의 원인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방향에서 찾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철을 되풀이 하는 식의 대안을 찾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현재 통진당 탈당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다함께〉는 “전현직 민주노총 리더들이 노동계 정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대안이다”라며, 그 당은 “공동전선적 모델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당 모

델보다는 공동전선 모델이 패권주의 폐해를 완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레프트21 82호, “통합진보당의 위기 – 올바르게 보기”)

열우당 2중대 노선, 국참당과의 통합, 야권연대/민주대연합 등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팔아넘기고 노동자운동을 민주당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의 꼬리로 전락시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내부의 패권주의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다함께〉는 새로운 노동자정당이 “참여 세력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과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전선적 모델”에 따른 연합체적인 당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위해 새 당이 필요한 것인가, “참여 세력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을 위해 새 당이 필요한 것인가?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와 계급적 독립을 되찾기 위해 야권연대/민주대연합 같은 부르주아 정치를 철저히 일소하고 노동자계급 정치에 굳건히 바탕을 두는 노동자정당을 제대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열망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잡탕 정당은 설사 당내 패권주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산과 실패의 교훈을 올바르게 찾지 못하고 계급적으로 또 다시 배신자적인 정당이 되어 민노당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다.

새 당과 관련하여 지금 필요한 공동전선은 ‘당을 참칭한 공동전선’이 아니라 정확히 ‘당 건설을 위한 공동전선’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는 공동전선조차도 최소한 야권연대와 단절하고 계급적 독자성 회복의 과제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있어도 공동전선의 최종 결말이 진정

한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로 귀결될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최종 결말은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다함께>는 아예 새 당 자체가 공동전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마저도 “참여 세력의 정치적·조직적 독자성과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만 하면 되는 수준이다. 야권연대와의 단절과 계급적 독립의 과제는 거론조차 없다. 무엇을 위한 새 당인가? 결국 공동전선이라는 허울 아래 <다함께>가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제안하는, “전현직 민주노총 리더들이 새롭게 만드는 노동계 정당”이란 계급적 독립의 과제를 내팽개치고 또 다른 계급협조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제2 민노당에 불과할 것이다.

3. “혁명정당 건설”과 정치 기권주의의 문제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은 혁명정당 창건으로 귀결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혁명정당만이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와 계급적 독자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새 당 건설이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의 창건으로, 즉 구 민노당을 복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귀결될 경우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는 실패하는 것이다. 그 경우 이름만 새 당일 뿐 ‘민노당 복원’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개량주의·의회주의 정당은 제도권 진출과 국회 입성에 목을 매면서 민노당의 전철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야권연대 같은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

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 과정은 민노당이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압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의 창건으로 귀결되면 계급적 독립의 과제는 또 다시 배신당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현재 프랑스·독일의 좌파당(좌파 사민주의 정당) 같은, 초기에는 보다 좌익적인 외관을 띠는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이라 하더라도 혁명적 강령을 거부하는 한 계급협조 야권연대 전략구도 속에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에 기반을 두고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노동자 정당의 외관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적 노선과 정책을 펴며 결정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의 계급적 모순으로 인해 그러한 좌파당 역시도 민노당처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팔아넘기는 당일 수밖에 없다.

성공이나 실패냐, 즉 계급협조 야권연대와 명확히 단절하고 계급적 독자성을 세우느냐 여부는 오직 투쟁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이 혁명적 노동자당 창건으로 귀결될 것이냐, 아니면 개량주의 노동자당 창건으로 귀결될 것이냐는 오직 정치투쟁에 의해 결판날 것이다.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새로운 노동자 정당이 개량주의 정당으로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 같은 것은 없다. 예를 들어, ‘개량주의의 물적 토대’를 이유로 대중적 노동조합운동 차원의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필연적으로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다. 개량주의의 물적 토대가 있는

지 없는지, 취약한지 굳건한지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이러한 견해의 바탕에는 계급투쟁에서 정치의 우위를 부인하는 정치 기권주의가 깔려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 기권주의는 좌파 개량주의자들이 말하는 ‘남한에서 혁명정당 불가론’을 강화시켜 준다. 좌파 개량주의자들은 현재 남한의 자본주의 발달 수준과 노동자계급의 상태, 그리고 정치 지형 등을 고려할 때 사민주의 정당 수준을 넘어서기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또는 조직 노동자들이 혁명전위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프랑스·독일의 좌파당처럼 좌파 사민주의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것 아니냐며 혁명정당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과거 레닌이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노동귀족의 형성 등 개량주의의 물질 토대를 확인했지만, 이것이 혁명정당 건설과 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가는 데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낳는다고 주장하진 않았다. 당시 노동귀족이 제일 강했던 독일에서도 노동자계급에 대한 압도적인 장악력을 가진 기존 사민당을 넘어 혁명적 공산주의 정당으로 노동자운동의 대중적 선진부위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개량주의(당시 사민당)를 겨냥한 혁명적 전술의 승리이며, 계급투쟁에서 정치의 우선성을 증명하는 주요 사례이다. 물질 토대가 무매개적으로 계급투쟁의 결말을 결정하지 않는다. 계급투쟁의 영역, 특히 당 건설투쟁의 영역에서 정치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 ‘혁명주의’ 세력은 개량주의를 강화시켜주는 무정부조합주의(아나코 생디칼리즘)로 전락한다.

안타깝게도 “혁명정당 건설”을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정치 기권주의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동지들이 많

다. 아무리 “혁명정당 건설”을 내걸어도 그 경우 혁명정당 건설은 언제나 추상적 선전의 영역에 머물 뿐 구체적 당 건설투쟁 전술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영원히 미래의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투쟁 기권주의는 그냥 기권으로 끝나지 않고 대중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개량주의 정당으로 귀결되는 데 사실상 일조한다.

한편 정치투쟁 기권주의는 대기론으로도 나타난다. 개량주의의 물질 토대가 공황으로 인해 약화되거나 소멸되고 그래서 개량주의 세력이 무력화되면 그 때 노동자들이 혁명정당 건설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지금부터 개량주의 세력을 겨냥한 ‘인위적인’ 정치투쟁을 펴는 것은 오히려 대중적으로는 고립될 것이므로 지금은 경제적 생존권 투쟁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할 때다.... 등등. 설사 이러한 수동적 대기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컨대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투쟁을 개량주의 주도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총파업투쟁으로 조직하겠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정치투쟁에서 기권하고 최소강령 수준으로 투쟁을 제한한다면 결코 개량주의 지도력에 대한 그 어떤 도전도 되지 못할 것이다. 경제위기와 세계공황이 노동자계급 지도력 문제를, 혁명정당 건설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바로 그러한 정세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체의 전술이 필요하다. 정세 대응 프로그램을 위한, 정치강령을 위한 투쟁, 지도력을 둘러싼 정치투쟁이 필요하다.

4. 개량주의를 겨냥한 공동전선 전술

새로운 노동자 당 운동에 기권하지 않고 이것이 혁명적 노동자당 창건으로 귀결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치투쟁 전술이 필요하다. 혁명정당 창건으로 귀결되는 것에 반대하는 개량주의를 겨냥한 혁명적 전술이 필요하다.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을 주장하면서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을 지향하는 개량주의 세력의 계급적 모순을 활용하는 노동자 공동전선 전술을 운용해야 한다. 당 건설투쟁 영역에서 공동전선 전술이 ‘노동자당 전술’이다.

자본가 정치세력과 손잡은 통진당 결성과 야권연대로 노동자 정치운동의 공백이 생겨났다. 나아가 이번 통진상 사태로 그 공백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진보신당 세력을 비롯하여 통진당 왼쪽에 있는 다양한 ‘좌파’ 세력들은 이렇게 통진당이 퇴거해버린 공간으로 이동할 기회를 지금 보고 있다. 한편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의해 새로운 당 건설을 위한 발의와 이니셔티브가 나오고 있다. 혁명가들은 혁명정당 건설투쟁을 전진시키기 위해 이러한 운동에 가장 원칙적이면서 비종파주의적인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레닌과 트로츠키가 발전시킨 노동자당 전술에서 우리는 종파주의적 함정과 기회주의적 함정을 모두 피하면서 이러한 운동에 개입할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노동자당 전술은 대중적 사민주의 정

당이 아직 없는 나라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지도력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초 제출되었다. 당시 미국 같은,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세력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취약한 나라들에서 노동자계급의 선진부위를 혁명정당 건설 쪽으로 획득하는 데 그 전술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 조직들, 일차적으로 노동조합들은 부르주아 정당과 단절하고 노동자 정당을 결성하라!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을 비롯한 각종 노동자 조직들에 이러한 요구를 걸어야 한다.

노동자당 전술은 대중적인 사민주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또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더라도 노동자들에 의해 정치적 파산 선고를 받고 그 대중적 영향력이 무너지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전선 전술로 적용된 것이다. 당시의 서유럽처럼 노동자계급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대규모 사민주의 정당이 존재하는 나라들에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전선은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노동자들 다수가 그러한 사민당·노동당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최근까지 민노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대표하고 있다고 노동자들이 보고 있어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움직임이 힘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레닌과 트로츠키도 대중적인 사민주의 정당이 안착해 있는 나라들에서는 노동자당 전술을 쓸 수 없다고 생각했다.

5.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전선으로서의 노동자당 전술

1930년대에 트로츠키는 이행강령을 정립하면서 체계적으로 노동자당 전술을 개념화했다. 노동자당 전술은 초기 코민테른이 사민주의 정당을 향해 적용했던 공동전선 전술의 변형판이다. 즉 그러한 사민주의 정당이 안착해 있지 않은 나라들에 맞춰 변형 적용한 공동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적인 사민당·노동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전선 전술로 설계된 것이 바로 노동자당 전술이다.

대중적 사민주의 정당으로 안착하진 못했지만, 개량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치조직들이 존재하는 지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현 단계 남한에서 펼쳐져 있는 노동자운동의 정치 지형도 그러한 경우인데, 노동자당 전술은 바로 그러한 정치 지형 위에서 개량주의 세력을 향해 적용한 공동전선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자당 건설투쟁을 위한 공동전선도 여타의 모든 노동자 공동전선처럼 해당 공동투쟁을 위한 요구 이외에 다른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 즉 강령적 지향과 조직 소속이 어떠한건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지와 단절하는 노동자계급 독자 정치세력화/ 독자적인 노동자 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해야 했고, 따라서 이 조건 이외에 어떠한 강령적 전제조건도 걸지 않았다. 이는 당연한데, 상대적으로 폭넓게 선진노동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공동전선이 되지 못한다면 공동전선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개량주의 조직에 속하거나 개량주의 조직의 영향 하에 있는 노동자들과도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 ‘계급적 독립’에 동의하면 다 같이 공동전선을 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혁명가들은 항상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즉 공동전선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새로운 노동자당은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이행강령에 바탕한 당이어야 함을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가들은 먼저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 공동전선’의 결성을 위해 투쟁하고, 결성되면 그 공동전선을 활용하여 강령을 둘러싼 투쟁을 노동자계급 선진부위 앞에서 펼친다는 계획이다. 강령을 둘러싼 투쟁은 강령 토론·논쟁을 조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전진을 위한 공동행동 속에서 어느 강령이 일관되게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지를 실천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포함했다.

이 공동전선 사업의 최적의 결말은 새 당의 다수와 지위와 지도력을 전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개량주의자들이 새 당의 다수를 장악하는 것으로 결말난다 하더라도 혁명주의 세력은 공동전선을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훨씬 더 확대 강화된 조건에 있게 될 것이다. 혁명가들은 계급적 독자 정당 건설 투쟁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혁명정당 쪽으로 의미 있는 세력을 획득할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개량주의 정당의 형성이 노동자당 전술의 목적인가? 아니다. 반대로 그 전술은 혁명적 강령을 위한 투쟁을 노동자계급 독자 정치세력화 운동 속으로 가져감으로써 개량주의 정당의 형성이라는 그러한 사태발전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슬러 올라가 맑스와 엥겔스도 19세기 당시 조건에

서 노동자계급을 정치적 지형 위로 오르도록 부추기고 고무하기 위해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 맑스와 엥겔스는 노동자계급 정당의 형성을 위해 노동조합에서 개량주의 세력들과 나란히 투쟁하는 한편, 이들 세력을 정치적으로 추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투쟁에 혁명적 지도력을 공급하고자 했다. 이 방법이 1920년대 초 코민테른에 의해 전술로 발전되었고, 나중에 이행강령과 연결되어 체계화된 노동자당 전술로 정립되었다.

레닌은 1920년대 초에 미국 공산주의자들을 위해 노동자당 전술을 권유했다. 선진 노동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코민테른 미국 지부는 이 전술을 내내 잘못 적용했다. 미국 지부에서 그 문제를 둘러싸고 맹렬한 분파 투쟁이 휘몰아쳤지만 어느 쪽도 레닌의 전술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한 분파는 소부르주아 자영농민들의 인민주의 운동과 손잡고자 계급적 독립을 위한 투쟁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버렸다. 미국 공산주의 운동의 초창기 지도부인 제임스 캐넌이 이끈 다른 한 분파는 개량주의 정당의 형성을 혁명당 창건으로 가는 필수 단계(‘전술당’)로 봤다. 어느 쪽도 새 당의 건설을 위해 혁명적 이행강령에 바탕한 독립적인 노동자계급 전망을 제출하지 못했다.

트로츠키는 양쪽 모두 기회주의라고 옳게 비판했지만, 그러나 그의 최초 결론은 일면적이고 비변증법적이었다. 그는 노동자당 전술을 캐넌의 입장(혁명정당으로 가기 위해 개량주의 정당 형성을 필수 단계로 상정하는

일종의 ‘전술당’ 노선)과 동일시했다. 따라서 트로츠키는 그 전술을 기회주의라며 통째로 거부했다. 즉 먼저 새로운 노동자당을 창건하는 데 노동자 투쟁의 대중적 고양ی 필요하다면 ‘개량주의 단계’는 불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혁명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니까. 한편 대중적 고양이 없다면 개량주의 지도자들이 새 당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기회주의적인 전술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전술은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기회주의이다.

6. 이행강령과 노동자당 전술

1938년에 트로츠키는 제3의 옵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 같은 이분법을 극복했다. 대중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개량주의 지도력을 타격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이행강령과 공동전선 전술의 결합을 더욱 구체화하는 가운데서 제3의 옵션을 찾아낼 수 있었다. 트로츠키는 당시 사민주의와 스탈린주의가 지배하는 국제 노동자운동에서 혁명가들이 고립 상태를 극복하는 데 이행요구 투쟁이 필수라고 보았다. 이행강령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구는 그 어느 요구든 노동자계급과 노동자운동 현 지도부에게 공동전선 요구(예를 들어 정리해고, 직장폐쇄에 맞선 ‘노동자 생산통제’)로 제안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노동자 정당 건설’도 그렇게 공동전선 요구로 제안될 수 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러한 요구들을 노동자 공동행동을 위한 제안으로 제기하는 것은 전체 이행강령에서 다른 요구들은 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행강령 중 단 하나의 요구나 슬로건도 버리지 않고서 특정 요구를 건 공동전선을 할 수 있다.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공동전선을 한다고 할 때 그 목적이 정치조직들의 단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 속에서 정치적 계급의식을 일깨우고 그러한 대중적 정치세력화 운동을 혁명적 강령 쪽으로 획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트로츠키는 노동자당 전술의 실행을 위해 이행강령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행강령 가운데 어느 시점에는 당면 요구가, 어느 시점에는 이행 요구가 정세와 국면에 따라 공동전선 요구로 각각 제기될 수 있다. 혁명적 코민테른 시기에 제출된 〈전술에 관한 테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매 행동, 심지어는 가장 사소한 일상적 요구를 위한 행동조차도 혁명적 각성과 혁명적 교육을 가져올 수 있다. 혁명의 불가피성과 공산주의의 역사적 중요성을 노동자들에게 확신시켜 줄 것은 바로 투쟁의 경험이다.” 이와 같이 가장 사소한 생활 요구 투쟁이라도 그 투쟁을 혁명 및 공산주의와 연결시키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 혁명가들의 임무다. 따라서 그 어느 공동전선에서든 혁명가들은 투쟁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전략·전술을 조금도 구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또한 개량주의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수준으로 투쟁을 제한하는 무원칙한 타협을 철저히 배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혁명가들은 노동자당 건설 공동행동에서 혁명적 강령만이 일관되게 계급적 독립과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를 담보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모든 공동전선이 그렇듯이 노동자당 건설 공동전선도 단지 선동적 결과물만이 아니라 조직적 결과물도 이루어내야 한다. 노동대중들 속에서 조직적 거점을 수립할 수 있는 매 기회들을 남김없이 사용해야 한다.(모든 각 정치조직의 노동자들과 무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장위원회, 평조합원 공동행동 조직 등). 아래로부터 노동자계급 투쟁기관들을 강화하는 투쟁에 공동전선이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개량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관료적 조직 형태들에 도전할 계급투쟁 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신속한 승리를 쟁취하고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대담하게 투쟁을 밀어부칠 수 있게 해 줄 무기한 총파업 같은 전투적 투쟁방법을 공동전선이 채택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본의 권력에 도전하고 나아가 노동자계급을 권력 장악으로 이끌 이행강령이 새로운 노동자당 운동에 대한 혁명적 개입을 위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 창당대회라면 이행강령이 통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공동전선 과정에서는 노동자계급이 직면한 구체적 정세와 과제에 따라 이행강령의 각 요구와 슬로건은 강조점과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창당의 전제조건과 당 건설 공동전선의 전제조건은 당연히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공동전선에서 개량주의에 맞선 투쟁은 운동 첫날부터 일어난다. 특히 개량주의 정치인들의 의회 물신주의에 맞서 혁명가들은 현장과 거리에서의 계급투쟁을 강조할 것이며, 이로써 공동전선 제1일부터 투쟁은 불가피하다.

현장과 거리의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남김

없이 붙잡아야 한다. 혁명가들에게 전술은 노동자계급 선진부위에 맞춰진다. 개량주의와 충돌하며 그 왼쪽의 대안을 찾는 선진 노동자 주체들을 기준으로 전술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상 독자 정당을 위한 노동자운동은 모두 처음에 계급의 선진부위의 운동이었다. 새로운 노동자당이라는 사상이 광범위한 노동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혁명가들은 현장과 거리에 서 자본가들에 맞선 전투를 떠맡을 태세가 되어 있는 선진 투사들한테, 계급 대중에게 전투적 지도력을 공급할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들한테 공동전선 전술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선진 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개량주의의 장악력을 끌어내고 보다 광범위한 계급 대중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전선의 모든 투쟁사업들을 배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노동자당 전술의 목적은 혁명적 강령을 중심으로 노동자계급 선진부위의 정치적 조직화를 일궈내는 데 있다. **혁명**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본격화 하자

고민택

통합진보당은 지난 총선 때까지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야권연대에 반대한다는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주장을 묵살하고 끝내 통진당 결성을 감행했으며 야권연대를 막무가내로 추진했다. 지금의 사태가 터진 뒤에도 통진당은 여전히 야권연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야권연대가 흔들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권파, 비당권파의 구분도 없다. 이석기 당선자는 현 사태에 대해 “야권연대를 흔들려는 음모”라는 주장을 하고 나오는가 하면, 강기갑 비대위장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달려가 사과하며 기다려 달라고, 야권연대를 깨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민주노총

문제는 민주노총이다. 자본가 정치세력인 국참당과 통합하는 통진당 결성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는 고사하고 끝내 총선에서 통진당을 지지했다. 민주노총은 단순히 야권연대를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넘어 김영훈 위원장 자신이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원유세에 적극 참여하기까지 했다. 통진당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민주노총은 달라진 것이 없다. 민주노총 중집은 통진당에 대한 ‘조건부 지지철회’를 결정했다. 통진당을 전면 부정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민주노총도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야권연대를 포기할 생각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 위 강기갑 비대위장의 행태에 대해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



민주노총은 통진당을 지지한지
두달만에 조건부로 지지를 철회했다

다. 민주노총은 강기갑 비대위를 지지하는 것이 마치 더 진보적인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통진당이 노동자계급 전체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통진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정도를 넘어 지금 노동자계급 전체를 아예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번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도 ‘묻지마 야권연대’로 인해 노동자계급은 이미 커다란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번, 천 번을 양보해 만약 이번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통진당에 대한 비판과 통진당을 둘러싼 쟁점은 운동진영 내부의 문제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싫든 좋든, 인정하든 부정하든 객관적으로 통진당이 노동자계급 내에서 어쨌든 다수를 대변하는 세력이라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불가피함이다.

사실은 바로 그렇기 때문이라도 통진당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시키지 않았어야 한다. 아니 사태가 터진 뒤에도 내부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부실이든, 부정이든’, 진상조사가 ‘사실이든, 과장됐든’ 외부로 알려진 상황에서는, 나아가 그것이 통진당 내부 문제를 넘어 전체 노동자계급의 문제, 전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진 마당에서는 그것이 누구의, 어떤 의도 때문이든 간에 먼저 모든 것에 앞서 최소한 노동자계급이 입을 피해와 타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모든 처리를 해 나갔어야 하는 것이 천 번, 만 번 마땅한 일이다.

부르주아 정당조차도 이런 상황에서는 지배계급 전체의 이해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을 당연히 하고 있다. 물론 이 말이 결코 부르주아 정당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배세력은 통진당을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 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행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 다만 그렇더라도 지배계급과의 전선

을 치는 것은 그 자체로 해야 한다. 또한 통진당에 대해서도 잘못을 댔으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게 아니라 기왕에 벌어진 일에 대해, 터진 사태에 대해 적어도 부르주아 정당보다는, 부르주아 정치체제 내의 수준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정당하게, 조금이라도 더 질서정연하게, 조금이라도 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태도와 노력을 보여 주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말이다.

어쨌든 지금 통진당은 지배계급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온갖 소부르주아 세력에게도 동내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서조차 자신들끼리도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이 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로 인해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씻기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통진당 사태로 인해 발생한 공백과 쟁점을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혁명주의 세력이 매울 수 있는 준비와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다. 그 때문에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음에도 우왕좌왕 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워낙 많은 쟁점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고, 나아가 지배세력이 온갖 정보력과 지배력을 동원하여 그야말로 매일매일 이슈를 만들어 내고 이슈를 주도하고 있어 거기에 대응하기에도 힘겨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혁명주의 세력이라고 해도, 통진당의 노선과 성격 등에 대해 비판하고 개입하는 것과는 별개로, 벌어지고 있는 행태나 추이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바깥에서는 오히려 알 길이 없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굴뚝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안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더는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 방침을 갖고 투쟁에 나설 때다.

지금도 이런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달라질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럼에도 통진당 사태는 계속 진행 중이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형국이 계속된다면, 아니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다면, 여전히 사태의 본질과 정국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고 우왕좌왕 한다면 지배계급이 지속적으로 이 사안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를 하루 빨리 막아야 한다. 이제 그럴 수 있는 정도로는 사태가 충분히 드러났다. 더는 사실 확인이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노동자계급,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을 포함해 혁명주의 세력이 선제적인 방침을 갖고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는 시선과 관심을 지배계급이 벌이는 행태와 통진당 내부 사정으로 인해 어지럽게 발생하는 것들에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익 세력이 통진당 사태를 맞아 가장 일차적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연말에 치를 대선을 겨냥해 야권연대를 깨거나 약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보수우익 세력은 통진당을 향해 융단폭격 하듯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주로 통진당 내 당권파(지금은 구당권파)를 집중 겨냥하여 공세를 가하고 있다. 당권파야말로 바로 통진당 결성과 야권연대를 이끈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당권파가 저지르고 있는 행태가 지배계급에게 계속해서 명분과 주도권을 충분히 쥐도록 하고 있



어서다. 지금 지배계급은 당권파를 집중 타격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도 느끼지 않고 있다. 이 점은 국면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보수세력이 단지 당권파만을 타격하는 것은 아니다. 당권파를 향해 ‘중북’, ‘주사파’ 등의 딱지를 붙이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동자계급과 혁명주의 세력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보수우익 세력은 ‘진보정당’ 자체에 대한 공격에서는 짐짓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번 기회에 ‘진보정당’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지금보다 더 순치, 순화시키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물론 이 말이 곧

당권파가 비당권파보다 덜 순치, 순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점에서 그들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벌이고 있는 투쟁은 최소한의 의미라도 있는 노선 투쟁이 아니라 오로지 정략만 난무하는 패권 다툼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끝나든 간에 그 최종 도착지는 개량주의 정당이라는 외투마저 벗어 버린 완전한 ‘국민정당’으로의 변신일 것이다. ‘국민정당’이라고 꼭 하나의 모습인 것은 아니다. 그 속에도 수많은 양태와 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야권연대와 단절하는 투쟁을 다시 시작할 때다

야권연대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다. 적어도 연말 대선 때까지는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라도 계속해서 정세적 규정력을 가지고 노동자운동을 뒤흔들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야권연대에 대한 회의론과 부정적 견해가 아무리 나온다 해도 야권연대 자체를 완전 폐기하는 데까지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야권연대가 아니고도 대선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할 수 있지 않고서는, 반대로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에서는 야권연대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무망하다. 비록 ‘안철수’ 변수가 있긴 하지만 최소 수준에서라도 야권연대가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통진당 변수다. 즉 통진당은 어떤 경우에도, 특히 상황이 지금과 같이 악화된 조건에서는 더욱 더 야권연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포기하지 않도록, 아니 포기할 수 없도록 통진당은 알아서 모든 짓을 다할 것이 분명하다. 통진당에게는 이제 와서 스스로 야권연대를 깨야 할 그 어떤 명분도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이 같은 상황은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도 분명하다. 심지어 통진당이 깨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 경우에는 깨진 두 세력 모두 더 경쟁적으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성사시

키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이미 지배계급의 한 부분으로 두 발을 모두 담근 상황에서는 그 길밖에 취할 방법이 없다.

지금 노동자계급이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투쟁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본격화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즉 단지 야권연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과 전망 때문만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에게 야권연대에 대당할 수 있는, 최소한 대당하기 위한 정세 구실을 형성해야 할 필요가 총선 전보다도 훨씬 더 절박해졌다는 점이다. 아무리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를 노동자계급 또는 혁명주의 진영 자신의 투쟁의 결과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설령 야권연대가 깨지거나 균열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정치적 효과는 결코 노동자계급이나 혁명주의 진영에게 돌아올 수 없다. 그것은 당연히 야권연대를 실질적으로 깨거나 약화시킨 세력, 지금으로서는 보수우익 세력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편 야권연대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통진당이 다시 지난 시절의 ‘진보정당’으로라도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나아갔다. 아니 설령 돌아오고 싶어 하더라도 그것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그러려면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정세 구실을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오직 이를 통해서만이 야권연대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과 동력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진당이 어떻게 되더라도 바로 그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노동자계급이 메울 수 있다. 아니 반드시 메워야 한다. 지배계급이 그 공백을 다 차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총선 전과 달리 야권연대 반대 투쟁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본격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열린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통진당과 민주노총 관료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야권연대 반대를 한 목소리로, 보다 많은 노동자계급이 힘 있게 낼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됐다. 그 공간을 지금까지는 지배계급이 가져가고 있지만 노동자계급에게도 아직 기회는 열려 있다. 민주노총 관료 지도부조차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긴 하지만, 공공연하게 통진당을 더는 지지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노총이 ‘조건부 지지철회’를 결정한 또 다른 배경이자 또 다른 이면이다. 그러나 통진당과 민주노총 관료 지도부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시간을 허용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낭비여서만이 문제가 아니다. 언제든지 야권연대는 다시 살아 날 수 있으며 그 때가서야 대처한다면 이미 또 늦기 때문이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맥락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야권연대 반대를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야권연대에 대항하는 정세 구심을 형성하는 투쟁에 지금도 나서지 않고 있는 세력이 보이는 태도다. 이런 태도는 한 마디로 정세와 동떨어져 각자의 조건과 처지를 우선적으로 사고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다. 그 각각의 이유와 주장도 각양지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 사이에 크게 두 가지 공동점이 있다. 하나는 하나 같이 무기력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야권연대에 대항할 수 있는 정세 구심을 형성할 수 있는 동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

다. 진보정당이 그러듯이 문제의 책임을 대중에게 돌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하나는 각자 내세우는 논리와 판단은 제 각각이지만 그 논리와 판단을 관통하는 것은 조직 보존주의다. 조직 보존을 우선함으로써 정세 대응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피하려 하지 않고 협소한 운동주의나 추상적 대기주의 그도 아니면 막연한 준비론으로 모두 후퇴하고 있다.

야권연대가 노동자계급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주는 직접적 원인이자 주범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 개량주의, 의회주의를 반대하는 현재적 실체는 다름 아닌 야권연대 반대 투쟁, 야권연대와의 단절을 위한 투쟁일 수밖에 없다.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이든,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이든 그를 위한 투쟁도 역시 야권연대에 대항하는 정세 구심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지어야만 비로소 그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다. 진정한 총파업 조직화든, 무슨 반자본주의 공동투쟁체 건설이든, 이러저러한 활동가모임이나 활동가대회 등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그것들을 말하려면 야권연대 반대 공동대응을 가장 우선적으로 조직하고 펼쳐야 한다. 통진당이 저 지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노동자계급 대부분은, 적어도 조직된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야권연대 영향력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들을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고 나서만 데가서 논다는 것은 허공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이래가지고는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대선 투쟁을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대선 투쟁을 우회해 가지고는, 야권연대에 맞서기 위한 대선 투쟁전선조차 형성하지 못한다면 운동은 훨씬 더 후퇴할 것이 자

명하다.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힘차게 펼치자

민주노총 중집은 통진당에 대한 ‘조건부 지지철회’와 함께 당일 회의에서 “대중적인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중단 없이 추진하며, 이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물론 이 결정을 둘러싼 해석과 정치적 의미나 맥락은 당연히 하나가 아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 특별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민주노총의 정치위원회가 존재했지만, 단순히 한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 전 조직적으로 많은 전현직 간부들의 견해를 총 망라하는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이를 전 조직적으로 가동시켜,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세상> 기사). 그런데 이 결정은 그 자체가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민주노총 중집회의 결과 중 ‘현 통합진보당에 대한 입장’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내용과 긴밀히 연결, 결합되어 있다.

“△통합진보당이 공당으로서 절차적 정당성과 자정능력이 훼손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 △통합진보당이 노동중심과 민주주의에 기초한 진정한 진보정당의 길에서 이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통합진보당이 혁신비상대책위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 신속히 혼란을 극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 △진정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전 조직적 논의에 착수하고, 통합진보당이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고 노동중심 진보정당으로 거듭나 이 논의에 합

께하기를 희망”

따라서 앞으로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 결정이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펼쳐질 지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을 민주노총에게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비록 민주노총의 결정이 통진당 사태 때문에 ‘임기응변 식’으로 제출한 측면이 강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 자체는 어쨌든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줄곧 ‘진보대통합’, 실은 ‘도로 민노당’을 만들기 위한 것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조차 이루지 못했다.(물론 그렇다고 그것을 성사시켜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가정당과 통합하는, 즉 통진당이 결성되는 상황만 불러들이고 말았다. 만약 이번 통진당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결정이나마 나올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알다시피 총선 전에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중집 결정을 통해 총선 방침을 사실상 ‘묻지마 야권연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강행했다. 비록 형식논리로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결정하지 않은 모양새를 취했지만 역시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총선 방침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통진당은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빠르게 ‘국민정당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 분명하다. 아무리 민주노총 관료 지도부가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해도



진당의 국민정당화 흐름을 박차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혁명주의 진영이 정치공백을 매꿔나가자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 그 자체까지 완전히 묵살하기는 쉽지 않은 지형이 통진당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민주노총 중집에서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특별기구 설치’를 의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미 일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거듭해서 말하지만 민주노총에게만 맡겨둬서는 용두사미로 끝나거나 혼란(분란)만 일으키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고 지난번에 시도했던 것과 같은 이른바 ‘선언운동본부’ 정도만의 운동과 대응 가지고는 그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은 ‘선언운동본부’와 같은 상층 중심의 운동이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또한 그 연장에서 이른바 ‘범죄과정당’과 같은 대안으로는 또 다른 의회주의 정당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아니 그조차도 만들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설령 만들어진다고 해도 통진당 보다 나을 것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다.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니 최소한 운동을 일관되고 끈질기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최소한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망라하여 공동대응을 펼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단지 조직 문제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정세 대응을 대중적으로 펼치는 사업과 투쟁을 최우선으로 결부시켜야 한다. 셋째는 공동대응 안에서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놓고 치열한 노선 투쟁을 벌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일차적으로는 투쟁하는 노동자, 선진노동자의

자기 요구와 주장을 우선적으로 조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특히 아래로부터의 평조합원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야권연대 반대와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긴밀히 연결, 결부되어 있다. 아니 목적의식적으로 연결, 결부 되도록 해야 한다. 비록 통진당 사태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계급과 혁명주의 진영이 투쟁한 결과와 직접적으로는 닿아 있지 않지만,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지배계급이 그 공백을 차지하려고 대거 나서고 있지만 더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통진당 사태가 낳은 정치 공백을 투쟁하는 노동자, 선진노동자 그리고 혁명주의 진영이 나서서 채워야 한다. 그럴 때에만, 그럴 수 있어야만 통진당 사태는 위기가 아니라 계기가 될 수 있다. **혁명**

통진당 사태를 계기로 등장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고민택

진실은 통진당이 더는 노동자 계급 내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진당 사태가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보수우익세력의 정치적 의도와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전에 통진당 내 당권파와 신당권파가 벌이고 있는 사생결단 식의 이전투구가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어우러짐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이 마구 뒤섞여 노동자계급에게도 일정한 혼란과 혼선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힌 ‘총체적 부실, 부정 선거’를 둘러싼 통진당 내부의 ‘진실 게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당권파와 신당권파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지금 노동자계급 전체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염원했던, 지금도 염원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뜻을 짓밟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뒤돌아보고 있지 않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자세가 잘못됐거나 정치적으로 미숙한 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 모두가 취하고 있는 의회/개량주의 노선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하다. 즉 이미 끓아 있던 것이 터진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불거질 문제가 앞당겨 등장한 것뿐이다.

그로 인해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만큼이나 수많은 쟁점들이 쏟아져 나

오고 있다. 그동안 밖에서는 대강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들 자신들의 입을 통해, 심지어 어떤 것은 지배계급의 보도를 통해 속속들이 들춰지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누가 실세라는 보도를 접해야 하는 노동자계급의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들은 결코 흥미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지배계급이 의도하는 것이자, 통진당 내 당권파와 신당권파가 노동자계급의 분노와 비판을 비껴가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노동자계급에게는 ‘진실 게임’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진실은 이미 충분히 밝혀졌다. 이 진실은 통진당이 더는 노동자계급 내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를 몇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민주주의’

지금 통진당(구당권파든, 신당권파든)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독재정권 아래에서 운동했을 당시의 습성과 잔영이 남아서가 아니다. 그 뒤 그들 운동이 노선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즉 피지배계급으로부터 벗어나 지배계급의 한 부분으로 변신하는 속에서 오히려 지배계급의 행태를 쫓고 닮아가면서 생긴 문제다.

지금 보수세력은 통진당만이 아니라 전체 피지배계급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앞세워 부르주아 정치 체제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라는 사상 공세를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금 벌이고 있는 이데올로기 공세는 어느 면에서는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을 매개로 한 공세보다도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위세를 떨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했어도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 사건 직후에 치러진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효과를 본 게 별로 없었다. 현장노동자들에게 정치적 위축이나 냉소를 불러일으키지도 않았다. 오히려 사실관계야 어찌됐든 그것들은 반MB 투쟁의 한 요소가 되기조차 했다.

그러나 지금 보수세력이 통진당을 향해 벌이는 이데올로기, 사상 공세는 간단히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위력을 떨치고 있다. 그 이유는 보수세력의 공세가 진공 속에서 교과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어이없게도 통진당이 제공하고 있는 ‘부실, 부정’ 선거, ‘민주적 절차 무시’, ‘폭력사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벌이는 사생결단식 이진투구’ 등과 같은 눈앞에서 생생히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 정황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보수

세력이 ‘도덕성’, ‘정당성’, ‘국민의 눈높이’, ‘상식’ 등과 같은 관념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들이대며 마음껏 공세의 무기로 동원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같은 관념들은 오히려 이전에는 ‘진보진영’이 보수세력을 향해 투쟁할 때 취한 ‘진보진영’의 무기 역할을 했던 것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도덕적’ 공세를 ‘진보진영’이 당하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공세가 단지 보수세력에 의해서만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대체적으로 보수세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과 태도를 취했던 ‘광의의 진보진영’에 속했던 자유주의 인사(이데올로그)들은 물론 직접적인 ‘진보진영’ 내의 논객들까지 공세에 가세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 사생결단식의 투쟁이 노선투쟁이 아니라 당의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관계로 자유주의 인사(이데올로그)들이 개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들이 실은 노동자계급의 민주주의나 당파성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아니 그것들을 오히려 부정하거나 나아가 적대시했던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점에서는 저들만이 아니라 통진당 내 당권파나 비당권파 주요 인사들도 한통속이 되어 그래왔다. 그러니 저들의 가세가 전혀 이상하게 비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보수세력의 공세를 포함한 저들의 가세가 노동자계급에게도 적지 않은 공세(부담)로 다가오고 있다는 데 있다.

지금 민주주의를 말하는 자들이, 통진당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가졌던 습성과 관행을 ‘진보진영’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지금 ‘진보진영’은 민주적 진화가 덜 된 집단이라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 ‘진보가 민주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 광의의 ‘진보진영’에 속한 저명한 학자의 입에서 버젓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저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으며 올바른 분석이나 판단도 아니다. 독재정권 시절에 운동한 모든 세력이나 개인을 그렇게 일반화하는 것은 순전히 그들의 주관적 편견과 왜곡에 불과하다.

실상은 정반대다. 독재정권 시절에 투쟁했던 사람들이야말로 동시대 어느 집단보다도 더욱 더 철저히 민주적 훈련을 쌓아왔다. 지금 통진당(구당권파든, 신당권파든)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독재정권 아래에서 운동했을 당시의 습성과 잔영이 남아서가 아니다. 그 뒤 그들 운동이 노선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즉 피지배계급으로부터 벗어나 지배계급의 한 부분으로 변신하는 속에서 오히려 지배계급의 행태를 쫓고 닮아가면서 생긴 문제다. 아직은 완전한 지배계급의 일원이 되지 못한 불충분함 때문에 미숙한 모습과 행태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신당권파가 구당권파에 비해 더 민주적인 것도 아니다. 비록 구당권파가 신당권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패권적이고 얼마나 더 비민주적이나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동시에 신당권파가 구당권파를 비판하기 위해 내세우는 기준과 논리가 실은 부르주아들의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상황이 바뀌면 신당권파와 구당권파의 위치는 언



총칼로 지탱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든지 바뀔 수 있다.

나아가 아무리 통진당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해도 기존 보수정당이 더 민주적인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한국에서 아직도 상대적으로 가장 민주적인 집단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이 절대적으로는 아무리 관료화되고 비민주적인 요소가 스며있고 그 정도와 속도가 커지고 있다 해도 아직 이 사실까지 달라진 정도는 아니다. 한국의 기존 부르주아 정당, 특히 기업집단 심지어 학교나 종교 집단조차도 어디 노동조합에 비교나 할 수

있는가? 그들 조직의 주류 집단이야말로 썩어도 한 참 썩었다. 그들이 겉으로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질차성이나 민주적 방식이라는 것도 지고지선 한 것을 그들이 추구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미 내부 권력관계에 철저히 물들고 종속된 것으로부터 취할 수밖에 없는 박제화되고 제도화된 죽은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본질적 의미에서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 어떤 것이 더 민주적이고, 덜 민주적이라는 문제를 재는 기준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그 잣대가 될 수도 없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란 본질에서 부르주아 독재(체제)를 일컫는 것일 뿐이다. 대리주의(저들이 지고지선 한 가치로 여기는 대의제 민주주의), 1인 1표에 기초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야말로 노동자계급을 철저히 해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종북(주의)’, ‘주사파’

지금 한창 ‘종북’, ‘주사파’에 대한 공세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지고 있다. 기존에는 물론 지금도 이것들은 (극우)보수세력이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국가 폭력장치, 기구 등을 앞세워 한국의 좌파 민족주의 세력(특히 이른바 NL 주사파)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는 단골 메뉴다. 그러다가 지난 민주노동당 분당 시기에 ‘진보정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전면화 되었다. 당시 분당을 주도한 세력이 ‘범NL’을 향해 패권주의와 ‘종북(주의)’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운동진영 안에서도 ‘종북(주의)’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여기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이런 것이다. 이 문제는 그 전에도 운동진영 내에서 운동노선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있어왔으며 그에 따른 대립과 투쟁도 줄곧 이어졌다. 이 점은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정치현실 때문에 ‘종북(주의)’ 문제를 수면 위에서, 즉 부르주아 사법 체제 속에서 논쟁하는 것은 불가능했거나 우회(비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다가 이러한 금기(?) 내지 암묵적 묵인을 깨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그것은 국가탄압을 인정한다는 적극적 입장에서는 아니다. 국가탄압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비공개’ 차원에서 의 논쟁이나 문제제기에 가두지 않겠다는 차원에서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정황이 존재한다.

당시 민주노동당 분당파(노심조, 진보신당)는 그 직전 있었던 대선에서의 참패 원인을 ‘범NL’ 세력의 전횡(패권주의)과 노선(민족주의) 때문으로 바라봤다. 따라서 그를 그대로 두고는 민주노동당이 ‘합법의회주의정당’ 내지 ‘대중적진보정당’으로의 발전을 계속해서 이루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랬음에도 ‘노심조’는 물론 심지어 ‘노심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비판적인 유시민(국참당)까지도 민주노동당과 함께 통진당을 결성했다. 그것도 두 세력을 모두 합해

도 한참 소수 세력인 상황에서 단행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부르주아 정치인(정치세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다. 이들에게 노선은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생존이 노선에 훨씬 앞선다. 통진당 결성시 ‘종북’ 문제는 어렵지 않게(?) 타협을 이뤘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이(‘노심조’, 유시민)이 부르주아 정치에서 차지하는 대중적 인기를 앞세운 것이다. 그들은 이미 부르주아 정치 안에서 유력한 정치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구당권파의 세력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판단했을 수 있다. ‘경기동부연합’이 지금 정도 일 줄을 절대 몰라서가 아니다. 신당권파도 지금은 사태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을 속으로는 후회할 게 뻔하다. 겉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도 말이다.

통진당 내에서는 ‘종북(주의)’는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으며 쟁점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일으킨, 적어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권파(경기동부연합)가 전면부상하면서 ‘종북(주의)’, ‘주사파’가 전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지배계급이 한편으로는 통진당을 타격함으로써 야권연대를 흔드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노동자계급 및 혁명진영을 함께 공격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슈를 만들고 주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이 들고 나올, 보수세력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공약과 의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나아가 민주당이 좌 쪽으로의 이끌리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다. 그 뿐이 아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 혁명진영이 제출하는 급진적 주장을 훼손



하고 차단하기 위함이다. 신당권파 입장에서선 굳이 손해 보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일이 시급하다고 해도 보수세력의 일방적 공세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는 커녕 소극적 차원에서나마 방어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보수세력의 공세가 무차별적인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중복(주의)’,

‘주사파’ 문제는 내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노선투쟁 문제다. 결코 지배계급에 의한 일방적 탄압이나 공세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중복(주의)’를 비판, 부정한다고 해서 국가탄압을 등한시 한다면 그 탄압의 칼날은 결국 노동자계급을 향해 날아올 게 분명하다. ‘중복(주의)’, ‘주사파’ 문제는 오직 노동자계급과 혁명진영의 투쟁과 성장에 의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중복(주의)’는 단지 그것이 잘못된 이데올로기이거나 노선 때문이어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추상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알다시피 민족주의 세력은, 특히 노동자투쟁에서 언제나 계급타협적인 태도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조합 안에서도 계급협조적 자세를 보이면서 노동자에게 오히려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투쟁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전투성 문제에서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일 뿐인 ‘비폭력’을 앞세우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부정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다. 민족주의 세력이 ‘북’에 대해 갖는 태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정작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보지 못하거나 대응할 수 없다. 신당권파가 민족주의를 향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단지 ‘북’에 대한 그들의 태도일 뿐 그 못지않게 중요한, 아니 직접적, 일상적.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혁명진영이 신당권파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북’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현실계급투쟁과 정치전략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보이고 있는 계급타협적 태도와 행태를 가차 없이 비판한다는 것이다.

신당권파도 그 점에서는 민족주의 세력과 다른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가져가야 할 노선투쟁 문제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 사회주의 혁명세력은 이미 국가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령과 정치적 입장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활동하고 있으며 투쟁하고 있다. ‘종북(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혁명진영은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투쟁해왔다. 단지 그러한 비판과 투쟁이 신당권파처럼 국가탄압 문제를 회피, 부차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배계급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는 것을 등한시 하거나 의도하지 않을 뿐이다. 혁명진영이 신당권파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북’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라 현실계급투쟁과 정치전략에서 민족주의 세력이 보이고 있는 계급타협적 태도와 행태를 가차 없이 비판한다는 것이다.

‘진성당원제’

구당권파는 사태가 건잡을 수 없이 전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번져 나가자 사태 해결(수습)을 위한 방안으로 ‘당원총투표’를 주장하고 나왔다. 또한 ‘혁신비대위’가 꾸려진 뒤에는 그에 맞서기 위한 차원에서 ‘당원비대위’를 별도로 출범시켰다. 이것들은 모두 ‘진성당원제’에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그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사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당원총투표’ 방식을 채택한 것도 ‘진성당원제’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패권주의 문제도 ‘

진성당원제’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범NL’이 다수파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동부연합’이 다수파로서의 일반적 지위, 우위를 넘어 패권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진보진영(정당)’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성당원제’를 앞세운 데 있다. ‘당원의 힘’에 기초한다는 형식이 주는 그 정당성을 통해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구당권파가 당원의 명예 보호와 당원에게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통진당이 결성될 수 있었던 배경의 하나도 ‘진성당원제’라는 공통분모가 작용을 했다. 유시민의 국참당도 ‘진성당원제’를 취하고 있었다. 유시민 자신이 과거 민주당과 결별했던 한 이유도 ‘진성당원제’에 기초한 정당을 만들고자 했던 것도 주요한 한 이유였다. 구당권파가 ‘당원총투표’를 들고 나왔을 때 유시민은 ‘당원총투표’ 그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다만 ‘당원 명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기갑 비대위원장이 한 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당원 50%, 국민50%’ 의견 반영 방안을 내비쳤던 것도 구당권파가 주장하는 ‘당원총투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기가 어려웠던 데 있다. 물론 이 제안은 양쪽 모두로부터 기각 당해 실현되지 못했다.

보수세력 일부도, 비록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부실과 부정’이 발생한 것을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도, 아래로부터의 ‘당원총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선출 방식 그 자체는, 기존 보수정당들로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앞선 민주적 제도와 방식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들도 한국의 기존 보수정당들이 당원에 기초하지 않거나 노선에 의하지 않고, 즉 노선에 의해 훈련되고 조직된 당원에 중심을 둔 정치(정당)활동을 하지 않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지나치게 기대거나 의존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로 빠지는 것이라고 비판해 온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러면 과연 ‘진보정당’이 취하고 있는 ‘진성당원제’는 위 보수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 정도의 의미를 살리면서 실제로 그렇게 구현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당원들을 투쟁과 정치의 주체로 성장, 발전시키지 않고 당비를 내는 물적 토대로만 여겼다. 더 나아가 부르주아 선거 때 표를 찍는 유권자로서만 대하면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원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모든 것을 수로 결정짓는 풍토가 완전히 굳어졌다. 이로써 ‘진성당원제’는 당원의 자발적, 능동적 참여와 활동에 기반 한, 즉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당 활동을 이끌어가는 ‘민주적 제도’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원들을 정파의 부속물이 되게 하는 ‘괴물’로 변질되었다.

그동안 ‘진보정당’은 자신들의 조직원, 즉 ‘진성당원’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조직했는가?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 당원을 모집했는가? 적어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조합에 기초한, 민주노총 산하 노동자를 중심으로 건설된 당이다. 비록 민주노동당이 의회/개량주의 정당이긴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노동자 당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범NL’ 세력이 민주노동당에 대거 입당하면서 당의 성격과 노선은 노동자 당에서 부르주아 노동자 당으로 더욱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것은 그들 세력만의 탓이 결코 아니다. 민주노동당 창당을 앞서 주도했던 이른바 PD 세력들도 ‘범NL’ 세력이 대거 입당하기 전에 이미 민주노동당을 부르주아 노동자 당으로 이끌고 있었다. ‘범NL’이 합류함으로써 그 같은 상황이 더욱 탄력을 받았을 뿐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하 각급 산별노조 및 대공장, 공공부문 사업장 등의 노조지도부도 거기에 적극 동참했다. 이들은 삼각동맹을 이뤄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면서 그들 당원들을 투쟁과 정치의 주체로 성장, 발전시키지 않고 당비를 내는 물적 토대로만 여겼다. 더 나아가 부르주아 선거 때 표를 찍는 유권자로서만 대하면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원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자연스럽게 민주노동당 내 정파들은 오직 당원, 더 정확하게는 자기 정파 숫자 늘이기 경쟁에만 매달렸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방침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모든 것을 수로 결정짓는 풍토가 완전히 굳어졌다. 이로써 ‘진성당원제’는 당원의 자발적, 능동적 참여와 활동에 기반 한, 즉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당 활동을 이끌어가는 ‘민주적 제도’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원들을 정파의 부속물이 되게 하는 ‘괴물’로 변질되었다.

전 세계 모든 의회/개량주의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정치(투쟁)와 경제(투쟁)를 분리시켜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제도)정치투쟁은 당이 담당하는 이른바 양날개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물적, 인적 수혜에 의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상층지도부가 당의 간부로, 의원단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형성된다. 노동조합 관료화, 당의 관료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형성된 관료화는 이제 개별 당원들에게는 도저히 어찌지 못하는 굳건한 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과 당의 관료화가 진행될수록 그에 비례해 당원들은 더욱 비정치화, 탈계급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에 따라 조합주의가 당연히 기승을 부리게 된다. 조합주의가 단지 노동조합이 갖는 한계 그 자체에 의해서 필연적, 운명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구체적, 실질적 과정과 결부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미 비정치화, 탈정치화된 당원들은 당의 모든 결정을 당 관료들에게 위탁하거나 의존하게 된다. 대리주의가 온존하고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과 부정'도 그 연장에서 터진 것이다. 그동안 이번과 같은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이것이 '경기동부연합'이 말하는 관행이고 '진성당원제'다. 앞서 말했듯이 신당권파(특히 지금은 신당권파로 분류되는 '범NL'에 속한 나머지 세력)도 그러한 관행을 만드는데 같이 했으며 그 자신들이 바로 그 관행의 수혜자였다. 다만 '경기동부연합'이 기존 관행에 비취도 너무 무리수(황당한 짓거리)를 저지른 것이 화근이 된 것 뿐이다.

‘국민정당화’, ‘노동중심성’

통진당 사태가 '신/구 당권파' 사이의 당권 장악을 둘러싼 단순한(?) 권력투쟁에서 최근 들어서는 '노선투쟁'으로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같은 조짐도 '신/구 당권파'가 각각 권력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노선투쟁'을 끼워 넣고 있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두 세력 모두 '분당'을 각오하거나 주도하려는 의사나 의지가 없어 전면적인 '노선투쟁'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노선투쟁'이 반드시 '분당'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특히 현재 통진당 내 '신/구 당권파' 모두는 '분당'을 무릅쓴 '노선투쟁'을 벌일 정도로 두 세력 사이에 노선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나아가 설령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당'이 각자에게 어떤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오리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두 세력 모두 통진당을 국민정당화하는 것을 '전략적 관점'에서 사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노동중심성과 관련해서는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전술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 세력 모두 각각의 입장에서 국민정당과 노동중심성을 매개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것이 마치 두 세력이 '노선투쟁'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두 세력이 말하는 국민정당화와 노동중심성에 어떤 '노선적 차이'가 있는 듯한 착시 현상을 낳고 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다.

하나는 통진당 바깥의 상황이다. 우선 가장 최근의 일로 민주노총 중집은 통진당에 대한 ‘조건부 지지철회’를 결정하면서 통진당에게 노동중심성을 회복, 강화할 것을 강하게 주문, 압박한 것을 들 수 있다. 민주노총 중집의 이 같은 태도는 정직하지 않다. 아니 자기배반(모순)적 행위다. 민주노총 자신이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앞장서 추진하고자 탄생한 통진당을 지지하기까지 했다. 야권연대와 노동중심성은 양립할 수 없다. 야권연대는 국민정당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사다리다. 야권연대를 전제로 한 노동중심성이란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정치적 독립성과 독자성을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이번 4. 11 총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부르주아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는 데에서 압력행사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주도권을 부르주아 정당에게 넘긴(맡긴) 채 유권자 압력집단으로 남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나아가 민주노총이 통진당을 향해 노동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은 통진당 내 민주노총 지분(자리)을 늘려달라는 요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통진당 당권파가 민주노총 내 ‘국민파’(범NL)를 역으로 비판하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재 민주노총 내 ‘비/반통진당’ 계열에 속한 활동가들도 역시 노동중심성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국민파와 같이 의회/개량주의 노선을 택하면서도 서구의 사민주의 정당처럼 노동자계급에 기반한 수권정당(부르주아 지배정당)을 추구하는 세력들이다. 이들은 이점에서 ‘민주대연합/야권연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현실에서 이들은 그 같은 비판이나 일관되고 끈질기게 하고 있지 않다. 이들 역시 야권연대를 전면,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이 이미 본래적 의미의 노동중심성에서 벗어나 충분히 우경화되었던 때에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국민파 못지않게 옹호했다. 이들이 지금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문제 삼는 것은 한편으로는 통진당이 국참당과 통합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회/개량주의 정당을 만들기 위한 때문이며, 이를 위해 노동중심성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노동중심성은 단지 형식적 차원의 조직적 독립성을 말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현재대로라면 그것으로는 ‘도로민노당’을 넘어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민노당’ 정도라도 만드는 것 자

야권연대와 노동중심성은 양립할 수 없다. 야권연대는 국민정당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사다리다. 야권연대를 전제로 한 노동중심성이란 노동자계급의 조직적, 정치적 독립성과 독자성을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 이번 4. 11 총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부르주아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는 데에서 압력행사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들 또한 이미 역사적으로 민주노총 안에서 노동중심성을 국민파가 말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과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다른 부류는 의회/개량주의 노선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현장활동가들이다. 이들은 나름으로는 노동중심성에 대한 진정성과 건강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한계는 있다. 이들은 아직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세력(정파)이 안고 있는 문제와는 별개로 또는 그것을 핑계로 협소한 '전투적조합주의'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지 않다. 동시에 노동중심성과 노동자주의를 혼돈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들 활동가들은 현실에서는 의회/개량주의 세력들보다 정치적으로 뒤쳐진 채 사업장 문제에 갇혀 있다. 의회/개량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중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사회주의정당과 사회주의 강령을 건설해야 한다는 점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세력(정파)이 지지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

니라 공동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럴 때만이 지금 통진당 사태를 계기로 다시 등장한 노동중심성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 어쨌든 통진당 바깥의 이런 상황으로 인해 지금 통진당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노동중심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다른 하나는 통진당 내 실정이다. 먼저 당권파가 현재 수세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앞에서 말한 '진성당원제'와 연동하여 국민정당화 문제를 새삼 꺼내두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논리와 정황은 이렇다.

통합진보당은 출범 당시 전통적 진보 노선이 주류였던 민주노동당과, 자유주의 개혁 성향의 국민참여당, 북유럽 사민주의가 다수인 진보신당 탈당그룹이 결합했다. 현재 신당권파로 통칭되는 세력을 보면 유시민 전 대표를 비롯한 참여계와, 과거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하 국민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노총 고위관료 출신들이 일련의 '재구성'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파', 즉 민주노총의 관료 출신들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자신들의 당내 지분이 크지 않다는 사실에 지속적인 불만을 나타내왔다. 이에 더해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의 사민주의 정치세력과 '인천연합'으로 대표되는 개량노선이 신당권파에 가세하고 있

다. 요컨대 진보정당의 국민정당화를 추진해 온 세력들이 총선 이후 하나의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구 당권파'를 겨누고 나선 것이다. 당의 최고 의사결정의 권한을 '당원'에 두고 있는 진성당원제는, 명망가정치의 확대와 당 고위층의 관료화 경향을 막는 장치였다. 또한 당지도부와 공직 후보들을 국민 여론조사로 뽑게 되면, 진보정당의 정치인들 역시 자연스럽게 여론주도층인 중간층을 수렴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유시민 대표는 지난 10일 전국운영위에서 애국가 제창을 포함한 국민 의례를 당 행사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사



를 밝힌 바 있다.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문제가 지난 19대 총선에서 당 득표율에 악영향을 미쳤고 “국민과 이념적 장벽이 없이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근거다.〈민중의소리, 문형구 기자 기사 중 발췌 인용〉

야권연대에 대당할 수 있는, 통진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을 광범위하게, 본격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출범시켜야 한다.

이 같은 분석이 크게 틀리다고는 보지 않는다. 문제는 위 논리와 정황대로라면 마치 당권파는 국민정당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거듭 말했듯이 당권파 역시, 아니 당권파야말로 국민정당화의 원조다. ‘진성당원제’(당권파가 말하는 노동중심성)와 ‘국민정당화’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대연합/야권연대’ 노선(전략)이야말로 국민정당으로 가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 거기에서 ‘진성당원제’의 역할은 국민정당화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다수파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신당권파도 최근 박원석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통진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당권파와의 ‘노선투쟁’을 불사하려는 전의를 보이고 있다. 신당권파는 당권파의 대응이 ‘진상조사’ 차원을 넘어 국면을 ‘노선문제’로 전환시키려고 나오자 이에 맞불을 놓을 겸, 이번 기회에 국민정당화의 기틀과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정당이라는 것도 누가 주도권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그 경로와 양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석 당선자의 말에서 알 수 있는 신당권파의 의중은 다음과 같다.

당 공식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문제와 관련, “하나의 문화로 관행으로 정착돼왔던 문제인데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통합진보당의 국가관 같은 것이 집단적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문제를 바꾸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선명한 민생정당으로, 미래지향적 현대정당으로서의 가치 노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당내 진보의 가치에 대한 이견과 논란 문제다. 남북관계나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이 변화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너무 과거의 관점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 점을 숙고하겠다”, “특위 혁신 방향은 △당내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패권주의와 정파주의를 넘어선 혁신적, 민주적 당 운영을 확립 방안 △선명한 민생정당, 다양한 진보의 가치에 조응하는 미래지향적 현대정당을 위한 당의 가치, 비전, 정책노선 재정립 △붕괴된 노동 지지 기반과 노동정치 복구하기 위한 방안 마련 △유연하고 개방적인 대국민 소통능력 제고 등”, “노동계를 비롯해 당의 근간이 되는 대중조직,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 등 각계각층의 의견그룹을 만나 통합진보당의 진로와 혁신방향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할 것”, “당의 혁신에 관해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묻고 듣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진보시즌2 등 진보정당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흐름과도 적

극 연계 협력할 것”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당권파는 당권파에 비해서도 더 노골적으로, 다만 그 각도와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국민정당화를 하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신당권파도 당권파 역시 국민정당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다만 당권파가 보이고 있는 약점(허점)을 파고들어 이 기회에 역시 자신들이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상황(약점)을 만회 내지 역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당권파가 수세에 몰리면서 노동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신당권파는 당권파에 대한 보수세력의 공격과 공세가 이루어지는 정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두 세력 모두 자신들의 행위가 노동자계급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다.

이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통진당은 이미 노동자계급의 이해와는 상관이 없는 부르주아 내 한 정당에 불과하다. 사실 이 점은 지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 싹을 키워왔다. 적어도 민주노동당 분당 시점에서 정리했어야 할 문제였다. 아니 분당 이후 ‘진보대통합/민주대통합’을 놓고 헛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라도 그랬어야 했다. 아무리 늦어도 야권연대가 기승을 부리고, 통진당이 결성될 때에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결별했어야 마땅한 문제였다. 그랬더라면 통진당 사태가 터져 나왔을 때 지금처럼 지배계

급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앞장서 주도적으로 통진당을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지배계급이 감히 지금과 같은 행태를 부리지도 못하게 했을 것이다.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정세, 정치, 대안 구심이 형성되어 있었다면 굳이 민주노총이 ‘조건부 철회’나 ‘제2 정치세력화’를 말하지 않더라도 벌써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정리되고 있지 않다. 그 핵심적 이유는 통진당 이후에 대한 정치적 대안이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여전히 통진당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면서 단호하게 결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진당 바깥의, 진보신당은 물론이고 의회/개량주의 노선에 비판적인 활동가를 포함해 사회주의 세력의 행동이 굼뜨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연대에 대당할 수 있는, 통진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을 광범위하게, 본격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출범시켜야 한다. **역명**





함께 걷자! 함께 살자! 함께 웃자!
희망의 버스 다시 만나요!

1부 '연대마당'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행진 "함께 걷자"

- 일시 : 6월 16일(토) 13시 - 18시
- 코스 : 여의도공원에서 시청광장
- 모이는 곳 : 여의도 공원
- 주최 :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 / 경향신문사 / 참세상
- 후원 : 오마이뉴스 / 프레시안 / 레디앙 / 진보네트워크 등

2부 '희망마당'

집회할 자유 연대할 권리

- 일시 : 6월 16일(토) 19시 - 17일(일) 오전 10시
- 장소 : 대한문 분향소
- 주최 :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 연대 참여 기금

- * 1만원입니다. (어린이 무료)
- * 연대기금은 기념품(목수건, 뱃지)과 행사진행비로 쓰입니다.
- * 남은 기금은 희망버스 사법탄압 공동법률기금으로 쓰입니다.
- 후원 및 연대기금 계좌 : 870301-04-035644(국민은행) 김정우



* 참가 희망자 분들은 신청과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서는 비영세 카페에서 내려받으세요. 단체, 모임, 부문, 지역별로 참가자를 모집해 접수해 주시고, '지역 희망의 버스'를 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번호 각 1000번째 분께는 홍보대사 분들의 선물을 드립니다.)

*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는 저렴한 공동식당을 마련하고, 모아진 기금은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분들께 전달됩니다.

* 견기대회와 1박 2일 희망난장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단체들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고 싶은 다양하고, 재밌고, 유익한 꺼리들을 자발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 현대자동차 투쟁을 뇌관으로 총파업을 조직하자!

최병승(현대자동차 노동자)



5월 8일 현대차지부 기자회견 모습

지난 5월 10일 2012년 현대자동차 임투 상견례가 있었다. 그리고 15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시작하면서 2012년 투쟁은 본격화되었다. 2012년은 현대자동차 투쟁 핵심은 주간연속2교대 시행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쟁취로 모아질 수 있다. 두 요구 모두 현대차 노동자뿐 아니라 작게는 자동차산업, 크게는 제조업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만든다는 점에서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차지부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단체교섭은 중간연속2교대와 월급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벌의 사회적 책임수행이라는 3대 핵심요구를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 3대 핵심요구에서 상당한 진전이 없는 한, 타결시점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는 입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두 가지 투쟁에서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어떻게 두 투쟁을 통일적으로 만들어 일괄 타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우리는 2012년 현대자동차 투쟁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의도와 무관하게 놓치고 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불법파견 정규직 쟁취와 주간연속2교대 시행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이다. 이는 불법파견은 비정규직 투쟁과제, 주간연속2교대는 정규직 투쟁과제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기인한다. 그러나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생산 특

포기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자!

이러한 사측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쟁취할 것과 방어할 것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즉, 여러 요구안 중에 핵심적으로 쟁취할 것과 합의를 이유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할 때 쟁점이 만들 수 있고,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는 노사간 힘의 역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조합이 사회적 명분과 물리력으로 사측을 최대한 압박하면 100% 요구를 쟁취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그 힘이 부족하면 50%도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즉, 100%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강화



5월 31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2012년 단체교섭 출정식'

된 조직력을 기반으로 추후에 재투쟁을 결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쟁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다.

사측은 2012년에 불법과건 문제에 대한 중지부를 찍으려 할 것이다. 반면 노동조합은 모든 사내하청을 전원 정규직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노사간 대립이 첨예할 수밖에 없는 조건속에서도, 불법과건 투쟁의 원칙을 훼손하고 서로간 명분을 찾으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시도들을 경계해야 한다.

사측은 최대한 일부 부서에 대해 진성도급을 동의 받거나 진성도급이 가능한 고용형태를 만드는 것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일부 정규직 전환과 일부 단계적 정규직 전환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사간의 교환은 우리은행이 노사가 또 다른 형태로 비정규직을 양산한 분리직군제를 수용하면서 마치 ‘정규직 전환’으로

포장한 사례에서, 철도공사가 핵심 업무를 하
위직급 전환조건으로 주변업무 외주화에 합
의하여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사례에서 확인
된다. 이는 무늬만 정규직이고, 실내용은 비
정규직 고착화, 외주화 전제 또는 추후 외주
화 추진 조건을 마련한 것임이 바로 다음해
에 확인됐다.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 쟁취 투쟁은 ‘비정규
직 없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만들기 위한 투
쟁이지 몇 명을 더 정규직 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 따라서 정규직 쟁취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
쟁하고, 딱 투쟁한 만큼 성과를 쟁취해한다. 왜냐하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사측 의도를 수용하는 순간 투
쟁으로 쟁취한 정규직 성과도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
문이다.

요구한 사수! 총파업 성사!

2008년 이후 현대자동차지부는 단 한 차례도 파업을 선언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3년 무쟁의로 실리를 얻은 것도 아니다. 사측 현장통제는 강화됐고, 노동 강도는 높아졌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을 외면하면서 사회적 의제인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 결과

■ 현대자동차지부 연도별 파업 현황 (출처 : 전현노 자료실)														
연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파업 일수	36일	15일	12일	20일	13일	25일	5일	11일	33일	13일	14일	0일	0일	0일

사측은 창립이래 최대 이윤을 뽑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첫째, ‘상당한 진전이 없는’이라는 애매한 주장이 아니라 ‘핵심 요구 쟁취 없이 2012년 단체협약 종결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이는 조합원에게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쟁취해야 할 목표를 확인시켜 2012년 투쟁 쟁점을 만들뿐만 아니라 사측에 강력한 압력 수단이 된다.

둘째, 요구안과 교섭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된다. 요구안은 8+8 직도입을 제출하면서 실제 논의는 지난 합의서를 기준으로 논의하거나, 모든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실 대상은 축소해서 심의하는 것은 요구안을 중심으로 투쟁하겠다는 지도부 의지를 의심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사측이 아무리 현실적인 이유로 요구안 변경을 요구한다 해도 요구안의 기본 정신과 원칙을 수수하면서 사측 제시안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실질적인 원·하청 공동투쟁 조직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집단가입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지회 조직력(파업 능력)과 적극적 공동투쟁에 대한 태도가 없으면 원·하청 공동투쟁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회 조직력이 무너져 현대차지부가 현대차와 실무교섭 한 내용을 승인했던 2007년~2009년까지의 경험에서, 지회 조직력이 존재했지만 현대차지부가 지회 투쟁을 통제하면서 투쟁을 확산하지 못하고 고립되었던 2010년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투쟁 기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집단조직화를 동시에 진행할 때 현대차 모든 노동자 투쟁은 가능하게 된다.

넷째, 부품사 노동자와 부품사 사내하청 노동자와 공동투쟁을 기획해야 한다. 2012년 핵심 요구는 공장안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기아자동차 주간연속2교대 시범실시기간 9개 부품사가 동시에 근무형태를 변경했고, 많은 부품사에서 근무형태변경으로 문제점이 발생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 결과가 많은 사업장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부품사 원하청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출하며, 부품사 노동자와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지난 1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현대기아 투쟁시점과 맞추기 위해 1차 총파업 일자를 7월 13일로 조정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 지부는 7월 13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일정을 봐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8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2012년 현대자동차 투쟁이 뇌관이 되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자본에 맞선 공세적 투쟁! 총파업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혁명**



JW지회, 단결로, 연대로 직장폐쇄 철회 투쟁 승리 비정규직 조직화와 더욱더 과감한 투쟁이 승리의 관건!

구재보

즐겁게! 자신있게! 단호하게! 끈질기게!



작년 10월 JW생명과학의 노동자들이 일어섰다. 생명과학과 한 울타리에 위치한 중외제약 노동자들과의 차별때문이었다. JW중외제약에는 이미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위원장이라는 자는 15년간 위원장직을 계속 차지하고 있었고, 얼마 전 치러진 위원장 선거에서 현 위원장과 맞붙은 노동자가 떨어졌다. 중외제약 자본은 선거에서 떨어진 노동자를 다른 계열사로 인사발령 했지만, 그는 홀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신청해 승리했다. 그리고 결국 JW생명과학의 노동자들을 규합해서 노조를 설립하고 전국화섬노조에 가입했다. 현 JW지회의 지회장이 바로 그다.

지회 설립 총회 과정을 통해 90여명이 지회에 가입했다. 자본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끈질기게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했다. 자본은 브릿지컨설팅이라는 업체를 고용했다. 브릿지컨설팅은 오자마자 조직 진단이라는 내용으로 전 조합원에 대해 개별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회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급기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교섭만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매주 교섭속보와 투쟁소식지를 제작 배포했고, 공장 앞 출근선전전과 식당 앞에서 중식집회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자본은 소식지를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장을 남발했다. 사내 질서를 흐트리기 때문에 소식지 배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쉬는 시간에 전체 조합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두고 근무지 이탈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감봉)를 때렸다. 또 라인 설비가 고장난 것을 두고 조합원이 고의로 고장냈다는 주장을 하며 대기발령을 때렸다. 지회는 이러한 탄압들



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다. 감봉 조치에 대해 조합원 전체가 식당 앞에서 대자보와 모금함을 만들어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이 모금운동에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함께 동참했고, 감봉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모금되었다. 또 대기발령 조치와 동시에 조합원들은 식당 앞에서 하던 집회를 사무동 앞으로 옮겨 규탄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사측은 일주일만에 대기발령을 철회했다. 첫 출근 선전전을 진행할 때는 때마침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참가단’ 동지들이 전국 순회 투쟁 도중 달려와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조합원 동지들은 처음으로 연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 주최로 열린 JW지회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100여명의 지역

동지들이 연대했고, 그동안 머뭇거렸던 조합원 동지들이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부분적, 공격적 직장폐쇄, 현장을 분리시켜라!

2월 22일은 지역의 노동자들과 처음으로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2부 근무중이었던 조합원 동지들은 생애 처음으로 4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하고 문화제에 참여했다. 문화제가 끝난 후 모인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듯 연신 환호성을 질렀다. 그동안 말 한 마디 못한 채 기계처럼 노예처럼 억눌렸던 삶으로부터 해방감을 맛보았던 것이다.



투쟁의 독으로 작용한 직장폐쇄 가처분 소송

자본의 직장폐쇄 단행 후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이렇다. ‘실제로 조합원들은
부분파업을 4시간 밖에 진행하지 않았

고, 직장폐쇄를 맞은 조합원 중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측의 직장폐쇄는 공
격적이고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측은 지회가 지
속적으로 잔업 및 특근거부를 하고 있으며 심각한 태업
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직장폐쇄를 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자 자본은 바로 다음날인 2월 23일 조합원 14명
에 대해 직장폐쇄를 때렸다. 이에 지회는 곧바로 4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하고 연대한 지역의 노동자들과 긴급
하게 직장폐쇄 규탄 집회를 전개했다. 자본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날인 24일에 22명, 27일에
2명을 추가로 직장폐쇄를 때렸다. 72명의 조합원 중 38
명은 공장 밖으로 겨나고, 34명은 공장에 남게 된 것
이다. 이렇게 공격적 직장폐쇄를 부분적으로 때린 자본
의 의도는 명확했다. 조합원들을 현장 안과 밖으로 분
리시키려는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투쟁에서 현장 안과
밖의 조합원들이 담당하게될 투쟁과 거기에서 나오는
서로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임금을 받고 못받고에 따
른 분열등을 노렸던 것이다. 따라서 지회의 전술 역시도
현장 안과 밖의 조합원들이 겪게 될 분리를 막아내기 위
한 것에 일차적으로 맞춰졌다. 지회는 곧바로 총회를 열
어 자본의 직장폐쇄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현장의 조합
원들이 임금을 받게 될 경우 임금의 15%를 직장폐쇄된
조합원을 위해 사용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투쟁 전술을 논의했고, 분임조를 새
롭게 편성, 격일마다 공장 안팎의 조합원들이 회의를 진
행할 것을 결정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법률이라는 것은 활용적 측면
에서 고민되고 제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률이 노
동자들의 집단적이고 직접적인 투쟁보다 우위에서 제
기될 경우 투쟁 자체를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한다. 투쟁의 요구
또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작년 야간노동 철폐를 요구
하며 투쟁했던 유성기업지회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
다. 유성기업지회는 야간노동 철폐를 걸고 투쟁을 시작
했다. 하지만 직장폐쇄와 공권력에 의해 공장 밖으로

겨난 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현장복
귀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그 때부터 유성지회의 요구
는 야간노동 철폐가 아니라 현장복귀와 직장폐쇄 철회
로 대체되었으며, 급기야 굴욕적인 법원 조정안을 받고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상경노숙투쟁 대부분의 일정은 연대투쟁이었다. 사진은 재능과 쌍용차, 대우자판 투쟁에 연대하는 모습

현장에 복귀했다. JW지회 역시도 가처분 소송 이후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그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소송결과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며, 그럴 경우 생계문제로 인한 조직력 훼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때문에 지금 당장의 일차적 목표는 직장폐쇄 철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직장폐쇄가 두 달 넘게 경과하면서 조합원 내부에서의 문제들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측이 의도한바 현장 안팎의 분열이었다. 심각할만큼 문제가 크게 대두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방치할 경우 심각한 조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심도 깊은 고민과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지회는 현장 안 조합원들이 순번을 정해 천막농성에 결합하고, 출퇴근하면서 천막에 들러 밖의 조합원들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연대투쟁에 적극 결합 등을 결정했다.

단조롭고 불투명하게 이어지는 투쟁 전술

노조를 만들고 모든 것이 첫걸음이었던 조합원들은 마냥 신기했고 활력이 넘쳤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투쟁의 단조로움과 불투명함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본사 일인시위, 계열사 노동자를 상대로 한 집회 및 선전전, 식약청 집회, 대시민 선전전, 지루하게 계속되는 반복적 교육, 교섭도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의 반응이 무뎌져 가고 있는 상황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투쟁을 한 가지 기획하고 실천했을 때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새로운 경험들은 그 불만들을 일정정도 해소시켜낼 수 있었다. 때문에 지회는 뭔가 새로운 투쟁을 씹빡하고 재밌는 아이디어 제출하듯 고민하기 시작했다.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전술이 제출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날 그 날, 혹은 일주일 단위로 프로그램들이 즉흥적으로 나오는 방식이었다.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진행했던 상경노숙투쟁은 흐트러져 있던 조합원들을 다시 한 번 세우기 위한 투쟁이었다. 상경노숙투쟁의 목표는 첫째, 27일 서울 본사 앞 집회를 힘있게 전개하기 위해서 둘째, 흐트러져 있던 조합원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곧추 세우고 현장 안팎의 조합원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셋째, 이 투쟁을 통해서 사측과 교섭자리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넷째, 조합원들에게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기 위해서였다. 조합원들과 함께 상경노숙 투쟁의 의미와 목표를 공유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함께 결함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천막농성장은 현장 동지들이 담당기로 했다. 상경노숙투쟁에서의 대부분의 일정은 연대투쟁이었다. 세종호텔노조, 쌍용차지부, 콜트콜텍지회, 재능교육지부, 대우자판지회, 기륭전자 분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K2코리아지회,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반대 투쟁 그리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열사문 화제에 결함했다. 그리고 27일 본사 앞 투쟁에서는 조합원 스스로도 놀라고 감격스러울만큼 연대가 풍성하고 화려했다. 투쟁을 마치고 돌아온 조합원들은 “노숙 투쟁 한 번 더 하자! 연대의 힘과 소중함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평가를 했다. 그리고 더욱더 과감하고 단호한 투쟁들을 해야한다고 제기하기 시작했다.

자본의 직장폐쇄 자진 철회

상경노숙투쟁을 마치고 돌아온 조합원들의 활력과 사기는 살아 숨쉬고 있었다. 더욱더 과감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던 중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자본은 5월 3일 24시부터 직장폐쇄를 철회한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사측이 밝힌 직장폐쇄 철회 이유는 첫째, 직원들의 경제적 곤란함을 해소하고 둘째, 노조의 쟁의행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첫째, 조만간 있을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사측이 패소할 것에 대한 부담감 둘째, 자본이 의도했던 바대로 현장 안팎이 분리되지 않았고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 이탈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점 셋째, 연대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으며, 더욱더 큰 투쟁을 할 것에 대한 우리가 직장폐쇄 철회의 진짜 이유다. 또 자본이 노조무력화 전략을 일정정도 선회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자본의 전략이 실패함으로 인해 나온 판단이라는 것이 중요



하다. 직장폐쇄 철회에 대해 조합원들은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했고, 한편으로는 기뻐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했다. 어리둥절했던 이유는 직장폐쇄가 갑자기 철회되었기 때문이며, 기뻐했던 이유는 직장폐쇄를 사측 스스로 철회시켰기 때문이며, 걱정했던 이유는 아직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며 사측의 탄압이 더 거세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합원들은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그리고 조합원 전체 모임을 열고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복귀 전술과 사측의 탄압 예상치, 그리고 대처방안과 현장투쟁 전술에 대해 토론했다.

일차전 승리

JW생명과학 자본과의 일차전은 조합원의 승리로 끝났다. 자본이 스스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조합원들이 기세등등하게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로지 노동자에게 생명과도 다름없는 단결과 연대 때문이다. 투쟁이 본격화된 시점(2월 23일)부터 단 한 명도 이탈자가 없을 만큼 조합원들은 끈끈하게 단결했다. 또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참가단’의 연대를 시작으로 해서 크지는 않지만 지역노동자들이 보여줬던 연대와 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유성지회,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보령화력환경지부, 프림파스트지부 등 지역 투쟁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대를 실천했다. 형식적인 연대가 아니라 연대하러 갔던 동지들에게 생기발랄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연대를 실천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연대였다.

앞으로 가야할 길

5월 7일 현장 복귀와 동시에 자본은 사무장 동지에 대해 대기발령을 때렸다. 복귀 조합원 전체에 대해서는 하루종일 GNP교육과 시험을 치르게 했다. 공장 밖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협박하고 있으며, 공장 내 66대의 CCTV로 조합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JW지회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지 일차전을 승리했을 뿐이다. 단체협약을 쟁취해야 하고, 민주노조를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자본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섭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JW지회는 복귀와 더불어서 노조를 인정받기 위한 5대 핵심 요구를 결정했다. ①노조사무실 보장 ②전임자 보장 ③조합비 일괄공제 ④공장 내 교섭 ⑤ 연대동지들의 공장 출입 보장이 그것이다. JW지회가 자본을 상대로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첫째 단결과 연대를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

둘째 생산에 타격을 미치기 위한 더욱더 과감하고 단호한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셋째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인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한국노총 중외제약노조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를 전개해야 한다. **역명**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 2막을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로 열어 나가자!

임천용

민노당을 통해 10년 넘게 진행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파산이 눈앞에서 분명해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결의로 정치세력화가 시작되었지만, 민주노총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제1막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 계급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개량주의, 의회주의 정당의 불가피한 경로다.

지난해 민노당이 국참당, 노심조와 합당하고 총선 비례후보 선출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더해져서 몰락 사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통진당의 부르주아 정당화가 이번 사태에 의해 가속화되지 않았다면, 대선에서 야권연대가 이어지고 그래서 '만약'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면 거기에서 더 큰 파산이 기다리고 있었

을 것이다. 현재 통진당 사태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만약'의 영역은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개량주의, 사민주의 정당들이 국가권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노동자계급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의회주의 정당들이 나아가는 기본 발전경로의 종착점이다.

의회주의에 결박된 통진당, 진보신당은 자본주의 체제의 개선을 목표로 자본가계급 내 한 분파와의 연대를 추구해왔다. 이들 정당들이 노동자 투쟁에서 권고안이라는 형태로 자본가계급과 타협을 권유하는 것은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한 이상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하는 야권연대를 옹호하고 실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들을 자본가 정당의 2중대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

항 속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것이야말로 사활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요즘 통진당 사태로부터 “진보정당”의 몰락을 설명할 때, 패권주의니 비민주주의적이니 하는 형식들을 가지고 자본주의 체제의 보수, 수선에 집착하는 의회주의 정당의 본질을 숨겨버린다면 이번 사태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단지 또 다른 의회주의 “진보정당”을 만들자는 공염불을 외치는 것뿐이다. 그래서 오래되기는 했지만 민주노총을 매개로 시작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사회주의혁명정당 건설운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에 맞선 혁명적 정치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개량주의 정치세력화의 시작 속에서 이미 노동자계급 배신의 씨앗이 발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통진당 사태는 선거를 통한 집권이라는 개량주의의 꽃이 피기도 전에 몰락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선언과 국민승리 21 시기

김영삼 정권 당시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의 노동악법에 맞선 민주노총의 96-97년 총파업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추동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노동자 국회의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노동자 정치의 진면목이었던 무기한 총파업과 거리에서의

투쟁은 96-97년 총파업 당시 수요파업으로 사그라졌고, 노동악법들은 98년에 다시 살아나기에 이르렀다. 총파업을 통한 노동자 정치가 왜곡되고 파괴되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은 정당이 담당한다는 의회주의 양날개론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다.



97년 국민승리 21 홍보위원회가 만든 권영길후보 포스터

97년 2월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98년 지방선거, 98-99년 당건설, 2000년 국회의원 선거 참여 등의 일정들을 구체화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등이 주축이 되어 민노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국민승리 21을 결성하여 권영길을 97년 대선후보로 추대하였다. 하지만 전국연합은 대선 한 달을 남겨놓고 정권교체, 민주정부 수립을 구실로 사실상 김대중

을 지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진보정치연합에는 이미 혁명을 공개적으로 포기한 노회찬 등이 있었는데, 이는 진보정당운동의 주요한 이론적 대변자들이었고 선구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진보정당” 운동으로부터도 너무 멀리 나아가버렸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론을 주창하던 세력들과 심상정 등의 중앙파에 의해 노동운동을 계급협조주의로 이끌어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98년 2월에는 정리해고 도입을 노사정 합의로 진행했다. 당시 배석범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물리적 투쟁이 아닌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고백했다. 노사협조주의로 점철된 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정치세력화 운동에 반대해서 전투파들은 97년 전국현장조직 대표자회의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갔지만 역부족이었다. 전투파들은 노동조합 장악에도 불구하고 국민파, 중앙파와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더해져 세력이 위축되면서 2004년에 해소했다. 노동자운동이 정치운동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전투적 조합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전투적 노동운동 진영은 스스로 사회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사회주의 세력들은 소규모 씨클로 머물러 있었고 전투적 노동자 운동을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끌 수 없었다.

이처럼 국민승리 21이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첫 단추는 개량주의자들, 김대중 “비판적” 지지론자들, 노사협조주의를 주창한 노동조합 관료들이 끼웠다. 이렇게 시작된 정치세력화의 15년 결과가 지금에서 선명하

게 드러나고 있다. 정치세력화의 주도자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열망이 올곧게 표출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당의 노동계급적 성격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정부” 10년의 시기에 노동운동의 전투적 부위는 거의 전멸하였고, 노사협조주의적인 노조관료들에 의해 현장은 장악되어 가고 있었다. 현장이 망가지는 것과 동시에 “진보정당”의 노동자 당원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성격은 더욱 더 우향우되어 갔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심지어 민노당을 통한 정치운동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정당에 가입하는 편을 택하기도 했다. 2012년 3월 5일에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 조합원 1000명의 입당원서와 함께 1만5천명의 지지서명을 가지고 민주당에 입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주노동당의 결성과 분당

98년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승리 21은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7명을 당선시켰으로써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민노당을 창당하는 바탕이 되었다. 선거에서 비판적 지지만 하면 되었던 민족주의 세력들, 1국 1당을 원칙으로 하는 민족주의 세력들은 2002년을 경과하면서 “전술적으로” 민노당에 대거 입당하였다. 이로써 언론에 오르내리는 방식으로 지구당 장악과 당권 장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내내 정리해고제, 비정규직법, 공기업 구조조정, 노동탄압 공격을 당했다.

이에 맞서 투쟁을 전개한 한국통신 비정규직, 발전,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세원테크 등 수많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거나 분신으로 항거해야만 했다. 모란 돌이 정 맞다는 이야기는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민주정부”때 시작되었다.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의 심화, 노동조건의 악화는 노동조합 조직물을 떨어뜨렸고 악순환은 반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총선에서 민노당은 10석을 차지하였다. 노무현 정권에 맞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열망이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민노당은 열우당의 2중대 역할로 한정함으로써 2007년 대선에서 창조한국당보다 못한 5위를 차지함으로써 패배하고 이듬해 총선에서 분당이라는 변수가 작용하지만 의석수가 5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2004년에 비해 2012년 총선에서의 13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의 연합으로 팔아버린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민노당이 열우당이나 민주당의 2중대가 된 것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특히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의 70만 표(3%)는 이명박의 압도적인 승리 예측 속에 나왔기 때문에 2002년 노무현과 이회창의 박빙 때 나왔던 95만 표에 비해 훨씬 적은 득표율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민노당 내에서는 당 대표인 심상정과 당을 실제 장악하고 있는 민주주의 세력 사이의 논쟁이 진행되었다. 특히 민노당 사무총장이 핵심당직자와 당원명부를 북한에 넘겨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심상정 대표를 위

시한 세력들은 중북 노선 청산을 주장하면서 2008년 2월 민노당 당대회에서 “일심회 관계자 제명 안건”을 상정했으나 투표에 의해 상정 자체가 무산되었다. 이로써 민노당 일부는 분당해서 진보신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중북 노선 청산 요구는 사실상 민노당을 탈당하기 위한 노회찬, 심상정 등 핵심 인사들의 선동 구호였다. 이 요구 때문에 노심조가 지난해 말 진보신당 탈당할 때, 당 유지를 원하는 진보신당 당원들로부터 민노당이 중북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투항한다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진보정당”들

민노당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진행될수록 노동자 투쟁에 대해 상급노조는 투쟁의 주체가 아니라 중재자의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2000년대 내내 그랬다. 특히 투쟁 사업장들은 노사정위원회 입성을 위한 방해꾼으로 여겨졌다. 2005년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에는 “과격 한 투쟁은 비판만 받고 쟁취한 것이 없다”며 노사정위원회 복귀 시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이에 맞선 전투적 노동자들이 단상점거투쟁을 전개하면서 가까스로 막아냈다. 이러한 노동조합 운동의 노골적인 노사, 노정 타협주의 흐름 속에서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4월에 금속노조 관료들이 3년째 진행되고 있던 하이닉스 비정규직 투쟁을 지속적으로 조직하는 대신 노동조합 깃발을 내리면서 보상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반대한 동지들이 대중적인 반대 흐름

을 조직해 나가기도 했었다.



이석행은 2007-9년 민주노총 위원장출신으로 송영길 인천시장 보좌관하다가 총선전 민주당에 공식입당해서 최근에는 쌍용차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금의 장기투쟁사업장들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자본의 힘이 노동계급을 완전히 압도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중재 같은 것조차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노동자계급 자신의 힘을 동원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내내 진행되었던 운동의 우경화 흐름은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더욱 더 악화되었다. 상급노조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들은 노동과 자본의 투쟁에 있어서 독보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자임하기에 이르렀다. KEC 공장점거 파업과 현대차 비정규직 공장점거 파업

해제를 위한 중재를 진행함으로써 파업을 최종적으로 파괴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장점거를 푸는 순간 자본측의 성실교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해고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희망버스 때 한진중공업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국회 환노위 권고안은 대중적 투쟁을 파괴하는 데 교과서적 모범을 보여주었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더 이상 끝기 싫어하는 투쟁을 정치권에서 권고의 형태로 정리시켜 줌으로써 투쟁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동시에 “진보정당” 정치인들은 정치적 해결 운운하며 성과로 챙긴다. 이명박 정권 내내 노동조합과 정당의 분업체계가 노동자 투쟁을 파괴하기 위해 작동했다.

반한나라당, 반이명박을 위한 야권연대는 야당들의 이러한 공동의 행동들로부터 무르익었다. 노동자 집회에 공공연히 참여해서 발언하는 민주당이 이제 이상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민주당이 노동계급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자본가 정당이 아니라 더 나쁜 자본가 정당에 비해서는 친구라는 인식이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에 의해 심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사실상 민주당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권에서 진행된 “진보정당”들의 야권연대의 최종적 결말이다. 그래서 지난해 내내 전개된 민노당, 국참당, 진보신당 사이에서 진행된 통합의 방식과 대상에 대한 논쟁은 각 당의 대의원대회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진행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야권연대를 둘러싼 각 세력 사이의 이전투구에 불과했다. 정치적 내용과 입장을 가진 투쟁이었다면 명료하게 진행되었을

것이지만, 명망가들 중심의 이합집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매우 소란스럽게 진행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국참당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본질적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조차도 반대하는 흥내만 내면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형식을 취했다. 민노당이 노동자들과 적대전선을 형성했던 열우당 후신인 국참당과 함께할 만큼 노동계급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따름이었다. 통합진보당은 노심조 세력과 민노당, 국참당이 함께함으로써 만들어졌다. 진보신당은 탈당한 노심조 대신에 총선을 앞두고 사회당과 함께 했지만 4.11총선 결과 국회의원 한 석도 얻을 수 없었다.

통진당 사태 - 의회주의 진보정당 운동의 파산

통진당 사태의 핵심은 의회주의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처참한 몰골을 드러냈다는

데 있다. 통진당은 한편으로 자본가계급의 하위파트너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유지시켜야만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서구의 사민주의 정당들이 100년 역사 동안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한국에서는 민노당 이후 10여년의 짧은 시기에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구에서처럼 독자적으로 정권을 잡거나 자본가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면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의 폭과 깊이는 훨씬 넓고 깊어질 것이다. 통진당 결성 과정과 민주노총의 통진당 배타적 지지로부터 발생한 분쟁들은 어련에 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의회주의, 개량주의 정당이 자본주의 체제를 방어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인류에 대한 학살이 자본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린 제국주의 시대 이후, 자본주의에 대한 개량이나 혁명이냐의 문제



가 곧바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개량주의 정당들은 개량의 축적이 사회주의를 앞당긴다면서 노골적으로 자본가들과 협력한 대가로 떡고물을 받는 데 만족해야만 했다. 이러한 개량주의 정당의 발전 과정은 시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노골적인 부르주아 정당으로의 귀결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었다.

통진당 결성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민노당 강령에 있는 사회주의라는 말조차도 삭제했다. 개량주의적, 의회주의적 수사에 불과했지만, 그마저도 거추장스러운 것이 빼버린 것이다. 그래서 강령적으로는 부르주아 정당의 충실한 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통진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신당의 경우에도 빠르든 느든 불가피하게 나타날 문제일 수밖에 없다. 진보신당은 선거 시기에 이미 야권연대를 진행한 바 있고, 지난해 말 진보신당 당 대표 출마 시 홍세화 후보가 야권연대 지속 의지를 밝혔고, 4.11 총선에서 통진당과 민주당에게 야권연대에 끼워줄 것을 애원하기도 했었다. 진보신당에게 있어서 통진당이 미끄러진 길에서 발을 빼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야권연대로 표현되는 자본가정당과의 단절이다.

통진당과 진보신당의 강령은 본질상 자본주의의 개선과 수리에 있다. 고통이 덜한 “합리적” 자본주의가 노선이다. 이러한 노선은 자본가계급을 필요로 하고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협조와 화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노선은 국가권력에 대해서도 수리, 개선하는 것이다. 억압기구에 대한 해체와 폐지가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다. 일례로 경찰, 검찰과 같

은 억압 기구들의 해체와 자본가 군대의 해체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러한 요구들은 통진당과 진보신당의 개량주의, 의회주의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도로 민노당이 아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자!

통진당도 진보신당도 아니라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어떻게 진행되어야하는가의 문제가 곧바로 제기된다. 국민승리 21부터 진행된 90년대 후반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사회주의 진영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사회주의 운동 세력 자체가 미약하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 개량주의 세력과 하나의 당에서 함께할 수 없었다. 전투적 노동자 운동진영이 민주노총 내 노사협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당 운동에 함께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했다. 그리고 취약한 사회주의 세력은 둘째 치더라도 당시에도 사회주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불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전과 선동은 비밀리에 주로 소규모적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간단히 말해 씨클릭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물론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회주의자 탄압과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노동계급 운동의 후퇴와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 운동의 파산에 직면한 사회주의 세력들의 자기반성인 동시에 긴급한 대응이기도 하다.

통진당 사태는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빠르든 늦든 민노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운동의 파산의 실례로 인식하게끔 작용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건강한 세력이 통진당에 함께해서 바뀌나가자고 하고, 어떤 이들은 노동에서 탈피해서 국민정당화로 나가자고 한다. 이러한 혼수에 대해 계급의식적인 노동자들의 대답은 노동자들이 통진당과 같은 의회주의 정당으로부터 단절하고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나서도록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진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배신한 사실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열망이 비아냥과 환멸로 돌아서게 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도로 민노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도로 민노당은 노동자들에게 비극 대신에 소극을 선사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문제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 새롭게 건설될 노동자 정당은 의회주의, 개량주의에 기반한 “진보정당”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정당 이외에 다른 것 일 수 없다. 한 사업장의 노동자 투쟁조차도 전제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자계급 투쟁을 조직하고, 의회에서의 잡담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을 선동하고 투쟁을 조직할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이 사활적인 과제로 다가온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영원불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역사발전법칙을 수용한다면, ‘진보’는 엄밀히 말해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 투쟁 과정에 가장 적합한 용어다. 사회체제의 변동은 언제나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했고, 점진적 변화의 합에 의한 변동 사례는 역사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쌍용차와 같은 노동계급의 투쟁들, 장기투쟁 사업장과 비정규직 투쟁들은 자본가계급과의 화해할 수 없는 계급투쟁이다. 자본주의 자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폭력적인 계급대립인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각각의 투쟁들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등 자본가 기구들을 동원해서 계급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에 맞선 노동자들은 자본가 야당과 “진보정당”들에 의해 타협을 설교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지 않는다면 노동자 투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사회주의 혁명정당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입장을 대변하고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적 투쟁 속에서 건설될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해서 작지만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자. **혁명**

프랑스 · 그리스 선거 이후 유럽 정치정세

이민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새로운 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약 백만명 정도가 2월 19일 스페인 전역에서 시위를 하였다.



프랑스와 그리스 선거가 한국에서도 많은 주목을 끌었다. 여기에 더해 독일 최대인구 지역인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주(州) 지방선거 결과도 한국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었는데, 이 세 선거 모두 유럽에서 불고 있는 좌경화 바람과 함께 현재 모든 나라에서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비쳐주는 사건이다.

세 경우 모두 선거에서 승리한 당이 유럽연합(EU) 재정협약 및 긴축 프로그램의 시행에 반대하거나(그리스에서 급진좌파연합), 또는 케인스주의 “성장 프로그램”으로 “긴축 정책을 수정할 것”과 금융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프랑스에서 올랑드, 독일에서 사민당).

그리스에서는 좌익개량주의 정당인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유럽 좌경화 바람의 주 수혜자가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멜랑송의 좌파전선(좌파당과 프랑스공산당의 선거연합)과 올랑드가, 독일에서는 사민당이 수혜자였다. 동시에 그리스에서 파시스트들이 성장하고 프랑스에서 극우 국민전선이 크게 세를 불리기도 한 선거였는데, 이는 만일 노동자운동이 현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내놓고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파

시즘과 인종주의가 정세를 장악할 수도 있는 실제 위험을 보여준다.

유럽의 좌경화 바람은 지배계급이 유럽 전체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이다. 이 유럽 위기는 그 자체가, 2008/9년에 발발해서 마찬가지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세계자본주의체제 위기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여타의 제국주의 지배계급들이 체제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은행 및 거대 독점자본에 대한 구제금융 등 각종 조치를 취해 왔지만,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다. 역사적인 차원의 자본 과잉축적 및 하락하는 이윤율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의 폭발성을 높여놓았다. 유로화와 국채에 대한 투기 물결은 이것의 표현이다. 자본주의 아래서 이 근본 문제는 오직 ‘폭력적’으로만, 즉 과잉 자본의 대대적인 파괴를 거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본성, 즉 서로 경쟁하는 자본들 및 민족국가들의 체계로서의 그 본성 자체 때문에 ‘

조화로운’ 방식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으로 자본들 간의 투쟁을 거쳐서, 즉 각 민족국가 부르주아지들 각자가 자신의 위기를 서로에게 수출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할 요량으로 벌이는 투쟁을 거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세계경제 자체의 재분할을 위한 투쟁에 의해서 오직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에서 사회당 올랑드가 승리하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위기는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위기를 전가시키기 위한 투쟁과 연동되어 있다.

현재의 유럽연합 위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유럽이 위기의 초점이 된 것은 그 동안 유럽연합이 자신을 하나의 조화로운 경제·정치적 단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취해 온 많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질적으로는 민족국가들의 연맹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독일 제국주의는 유럽(유럽연합, 유로존)을 자신이 통제하는 블록으로, 자신의 ‘뒷마당’으로 재조직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들을 반(半)식민지로, 또는 제국주의 하위 파트너로 종속시켜야만 가능하다. 독일한테 이를 위한 열쇠는 유럽연합에 대한 ‘지배’를 놓고 대등한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 프랑스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있다.

유로존 내 남유럽은 계속되는 깊은 공황(‘공식’ 경제 용어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경기후퇴’[recession])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프랑스는 GDP가 정체 상태에 있다. 반면 독일을 비롯한 여러 중북부 유럽 나라들은 당장 공황을 맞을 가능성은 낮다. 유로화의 대대적인 위기가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달리 말하면, 세계 공황은 유럽 전역의 불균등성을 더 크게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이 추세는 오로지 심화될 일만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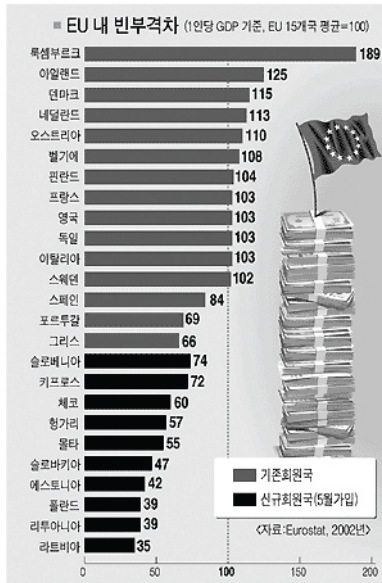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독일 메르켈 정부가 가혹한 긴축안을 강요하고, 특히 남유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규제완화”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등 유

럽연합은 또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사실상 자신들이 임명한 파파데모스 정부와 몬티 정부를 들어앉힘으로써 두 나라에 대한 훨씬 더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의 끈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러한 행보들은 유럽연합(좀 더 정확히는 유로존)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이 통제하는 블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독일 (그리고 프랑스) 제국주의의 전략적 의도를 비춰준다. 메르켈의 강경일변도, 즉 독일 정부가 가혹한 긴축안을 관철시키고자 취하고 있는 비타협적인 태도와 함께 유로화와 유로존을 지키고자 취하고 있는 단호한 결의도 바로 여기서 비롯한다.

“재정협약”은 독일 제국주의가 남유럽에 대해 유로존에 남아 있고 싶다면 더 큰 ‘희생’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희생은 잔인한 긴축 프로그램만이 아니다. 유럽연합 기구들이 남유럽 나라들의 예산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프로그램이다. 결국 이러한 틀 내에서 더 직접적으로 독일 제국주의가 통제권을 틀어쥐는 것으로 결과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협약은 전혀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못된다. 첫째, 재정협약으로 독일 자본은 특히 수혜를 보지만, 남유럽은 훨씬 더 깊은 경제위기와 의존 심화로 몰아넣는다. 이것은 유럽연합 및 유로존의 불균등성을 그 극한까지 몰아갈 것이고, 심지어 잠재적으로는 이를 넘어 그리스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의 ‘통제되지 않은 파산’과 유로화 이탈,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물결로 결과할 것이다. 둘째, “재정협

약”이 여전히 현 유럽연합 기구들 내에서 조직되고 있는데, 이는 보다 장기적인 견지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제국주의 강국들이 유럽연합을 정치·군사적 차원의 글로벌 파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필히 극복해서 보다 직접적인 통제·지배 형태로 대체해야 하는, 그러한 숙제이다. 유로본드의 도입도 이 방향으로 가는 주요 포석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 겉으로는 헌법상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독일의 보다 근본적인 속내는 보다 장기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더 큰 통합”을 보고 싶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연합 및 유로존의 깊은 내적 모순은 단지 유럽 자본가들의 “탐욕”과 “근시안적 태도”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유럽 강대국 지배계급들이 유럽 통합을 원하면서도 그들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들 간의 뿌리 깊은 경쟁관계로 인해 그것을 해낼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무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보다 약한 나라들을 종속

시켜서만, 그리고 노동자계급 대중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의해서만 오직 유럽을 “통합”시킬 수 있다. 즉 미래의 긴장과 붕괴·와해의 위협으로 찢겨진 “통합” 조치들을 강요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 특히 남유럽에서 대중적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노동자 민중들을 투쟁의 전선으로 결집시켜 놓았다. 그러나 또한 프랑스와 아일랜드, 체코 등에서도 대중투쟁이 분출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혁명적 정세로 치닫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에서 유로화 도입은 그 나라들의 수출 제품 가격을 낮추어줌으로써 성장 촉진제로 작용했다. 그 덕에 노동자계급과 특히 노동귀족층에 대한 지배계급의 일부 양보조치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 결과로 노동조합 관료들과 전통적 사민주의 정당들이 투쟁을 봉쇄하고 투쟁의 뇌관을 제거해낼 수 있었던 한편, 상대적 고임금의 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정 정도 신망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올란드의 “성장” 요구는 유럽 사민주의와 대규모 노동조합 연맹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요구일 뿐만 아니라, 현 공황에 대한 구제책으로 국가 부양을 통해 수요 증대를 꾀할 필요를 느끼는 다수의 유럽 정부들과 자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요구이기도 하다. 프랑스 제국주의도 그 같은 일정 정도의 양보조치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메르켈조차도 재정협약에 대한 독일연방의회 양원 모두로부터의 지지(무엇보다도 사민당의 지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 때문에 양보

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올랑드는 유권자들에게 “긴축 종식”을 약속했고, 독일사민당 지도부들도 “성장 정책”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들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2,3만 명 수준의 상징적인 “행동의 날”과 선거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 테두리 밖에서는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결집시킬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 왔다.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재정협약을 “수정”, 또는 일부 조세 개혁과 경기부양책으로 그것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부르주아 정부들(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제국주의 프로그램 조항들을 놓고 협상 테이블을 열자는 요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요구는 노동자계급 상당 부분의 기대(사회보장 강화 등)를 반영하는 요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요구들 통해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사민당이 기민당 같은 부르주아 정당이 아니라 노동운동에 여전히 강력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개량주의 정당, 부르주아 노동자 정당임을 과시하고 있다.

올랑드와 독일사민당과 여타 공식 노동운동의 개량주의 지도부들은 “재정협약”을 놓고 메르켈과 거래를 할 완벽한 준비 상태에 있다. 최종 합의는 프랑스·그리스 총선과 유럽정상회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나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때가 되면 협상테이블에서의 지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그리스를 더는 소외시키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파와 노동자운동은 사민주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오류를 피해야 한다. 하나는 지난 10년 가까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워낙 철저하게 장단을 맞춰 오는 바람에 더 이상 노동운동의 일부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부정당해 온 사민주의자들을 다시 받아들이 화해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관련한 그들의 행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올랑드 정부는 프랑스 부르주아지를 위한 정부이지 노동자계급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 올랑드는 프랑스 제국주의 국가의 이해를 방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올랑드의 반긴축 언사와 그가 공약으로 내건 반긴축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남유럽에서 노동자계급의 친구가 아니다. 그의 “유로본드” 요구는 ‘노동자계급적’ 또는 ‘민중적’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요구가 아니라, 세계공황을 기화로 해서 유럽연합을 글로벌 파워로 발돋움시키려는 유럽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여망을 반영하는 부르주아 정책이다.

프랑스(그리고 독일) 지배계급과 똑같이 올랑드도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에서 그 자신과 닮은 정부 — 부르주아 노동자정부 또는 1922년에 코민테른이 사용한 표현처럼 “가짜 노동자정부” — 가 구성되는 것조차도 두려워한다. 그리스 민중이 직면한 절박한 조건 하에서는 그 같은 정부조차도 유럽연합 상전들에 정면으로 저항하기를 바라는 수백만 노동자 민중들의 기대로부터 오는 거대한 압력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시리자가 승리할 경우 전개될 상황에 대비해 저들 지배계급만이 아니라 올랑드도 지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시리자 주도 연립정부는 이미 투쟁전선으로 집결해 있는 그리스 노동자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공장에서 노동자통제 기관들이 형성되었고, 지역에서 대중총회와 각종 실행위원회들이 만들어

진 상황에서 경찰과 황금새벽당 파시스트들로부터 이들 투쟁기관들을 방어할 노동자민병대가 건설되면 진정한 노동자정부 — 완전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과도적 단계를 대표하는 — 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정부는 1960년대와 70년대 이래 자본주의 유럽에서(당시에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에서도) 한 번도 구체적 가능성이었던 적이 없다. 지금 사회·경제적 위기가 얼마나 깊고 만연해 있는지를 웅변하는 단적인 증거이다.

유럽 자본의 충성스런 하수인으로서 올랑드는 그 같은 시나리오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그가 메르켈에 대해 보이고 있는 의견 불일치는, 긴축을 놓고 메르켈이 취하고 있는 도발적인 강경일변도가 그 시나리오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한다. 개량주의의 배신자적 역할, 즉 불타는 자본주의 집을 구조하기 위해 뛰어드는 소방수로서의 역할을 한 순간도 망각해선 안 된다.

다른 오류는 폭로·비판과 “경고”에 만족하고 마는 오류이다. 올랑드 같은 무리들은 그 어떤 혁명적 해결책에 대해서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속한 개량조차도 일관되게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올랑드나 여타 사민주의 정당들에게 표를 던진 수백만 대중이 자신들의 개량주의 지도자들과 단절해야 할 필요를 확신하게 되려면 단지 폭로와 비판만으로

는 절대 부족하다. 혁명가들의 주장만으로 대중들이 환상을 깨지 않는다. 설사 그러한 주장이 실제로 대중들의 광범위한 다수에게 미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아무리 맹렬한 폭로와 비판이라 하더라도, 혁명가들이 이들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투쟁에 나서고 대중을 투쟁으로 결집시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그러한 폭로·비판을 이러한 요구와 결합시키지 않는다면 대중은 여전히 수동적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공격에 맞서는 전 유럽적 차원의 공동 투쟁 요구를, 그리스혁명 및 각국 대중운동과의 연대를 위한 전 유럽적 규모의 공동행동 요구를 단지 ‘좌파’ 정당이나 좌파 노조에게만이 아니라 개량주의 정당과 대중적 노동조합의 평회원과 지도부에게도 똑같이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와 함께 유럽연합 및 유럽중앙은행의 긴축에 반대하는, 그리고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의 투쟁들과 연대하는 전 유럽 차원의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재정위기가 전유럽으로 확산된 가운데 5월 12일 스페인에서는 정부의 긴축 안에 반대하여 1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항의했다.

이번 선거에서 '전통적' 개량주의 정당들이나 좌익개량주의 정당들이 득세한 것은, 보다 전투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노동자들 및 운동세력들이 많은 나라들에서 투쟁을 총괄 조정하고 중앙집중화를 이루어낼 대안 구심을 세우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전 유럽적 수준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좌익개량주의자들과 자율주의-무정부주의 세력들은 전 유럽적 대안구심을 세우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차단했다. 기껏해야 단지 자신들의 프론트에 불과한 '구심'을 세웠을 뿐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범죄행위인데, 여기에는 프랑스의 NPA(반자본주의신당)나 포르투갈의 좌파블록이나 그리스의 시리자 좌익 및 안타르시아(반자본주의연합) 같은, 규모 있는 반자본주의 정당들과 전선체들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 가운데 어느 조직도 단 한 차례의 진지한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못했다. 그들의 세력으로 -- 세력들이 결합된다면 특히 --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이와 같이 유럽적 수준에서는 운동이 공황의 시작 때와 동일한 문제들에 부닥쳐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적들이 나서서 투쟁의 지형을 실제로 바꿔내기 시작한 상황임을 상기한다면 당시보다 어떤 면에선 더 불리한 조건이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유럽 기구들 일부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계급투쟁들과 정치생활들은 서로 간에 더 통합되어졌다.

이것은 투쟁이 제기하는 과제들이 훨씬 더 긴급해졌음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슬로건들을 중심으로 긴축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 모든 긴축안 폐기! 재정협약 폐기!
- 유럽 국가들의 부채 무효화! 은행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무상몰수, 노동자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또는 직장폐쇄와 정리해고 위협을 가하는 모든 기업을 노동자통제 하에 무상 국유화하라!
- "노동시장 규제완화" 반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협조항 일체를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하라!
- 유럽연합 전역에서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 연금 및 사회보장 삭감 분쇄!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퇴직연령 연장 반대!
- 최저임금, 실업수당, 연금을 모두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
- 민영화 분쇄! 교육^인프라^환경^사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전 유럽 차원의 공공사업 프로그램을 도입하라! 노동자통제 하에 수백만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자본가들의 이윤과 부자들의 부에 대한 대규모 과세를 통한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기금 마련!
- 파시즘과 인종주의 공격에 맞선 노동자정방대, 노동계급 지구별 자위조직 건설! 일체의이민 통제 반대! 유럽연합에서 일하며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 보장!
- 그리스혁명 지지 지원! 그리스 인민에 대한 일체의 수탈에 맞서 싸우자!

이 같은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도시와 지역에

서 실행위원회를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이 위원회들을 전국적, 전 유럽적 수준에서 총괄 조정하고 중앙집중화할 대안구상을 건설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모든 노동자 정당들 및 조직들에게 이를 지원하고 위의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한 시위와 파업 등 행동플랜을 내올 것을 호소, 촉구한다.

그리스에서는 지금 혁명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당면한 건축에 맞선 공동투쟁으로부터 권력쟁취 투쟁에 이르는 길을 안내할 혁명정당 건설이 긴급하다. 그리스에서 당면 투쟁과 노동자권력을 위한 투쟁은 이미 서로 맞닿아가고 있다. 당면 요구 투쟁과 혁명적 이행요구 투쟁 사이에 그 어떤 장벽도 허물어지고 간극이 급속히 좁혀지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이러한 정세가 곧 도래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위기는 제2라운드로 넘어가고 있다. 위기에 맞선 핵심 요구들을 위한 단호한 반격투쟁과 노동계급적 해결책을 자본가들에게 강제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지배계급과 그들의 국가기구가 이 투쟁을 분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따라서 투쟁으로 얼마간의 개량을 일시 관철시킬 수 있을지라도 최종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고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그것을 노동자평의회와 노동자민병대에 바탕한 혁명적 노동자정부로 대체함으로써만이 위기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길을 열수 있다.

유럽 위기는 글로벌 자본주의 위기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다. 오직 사회주의혁명만이, 사회주의유럽합중국 창설만이 전 유럽 대륙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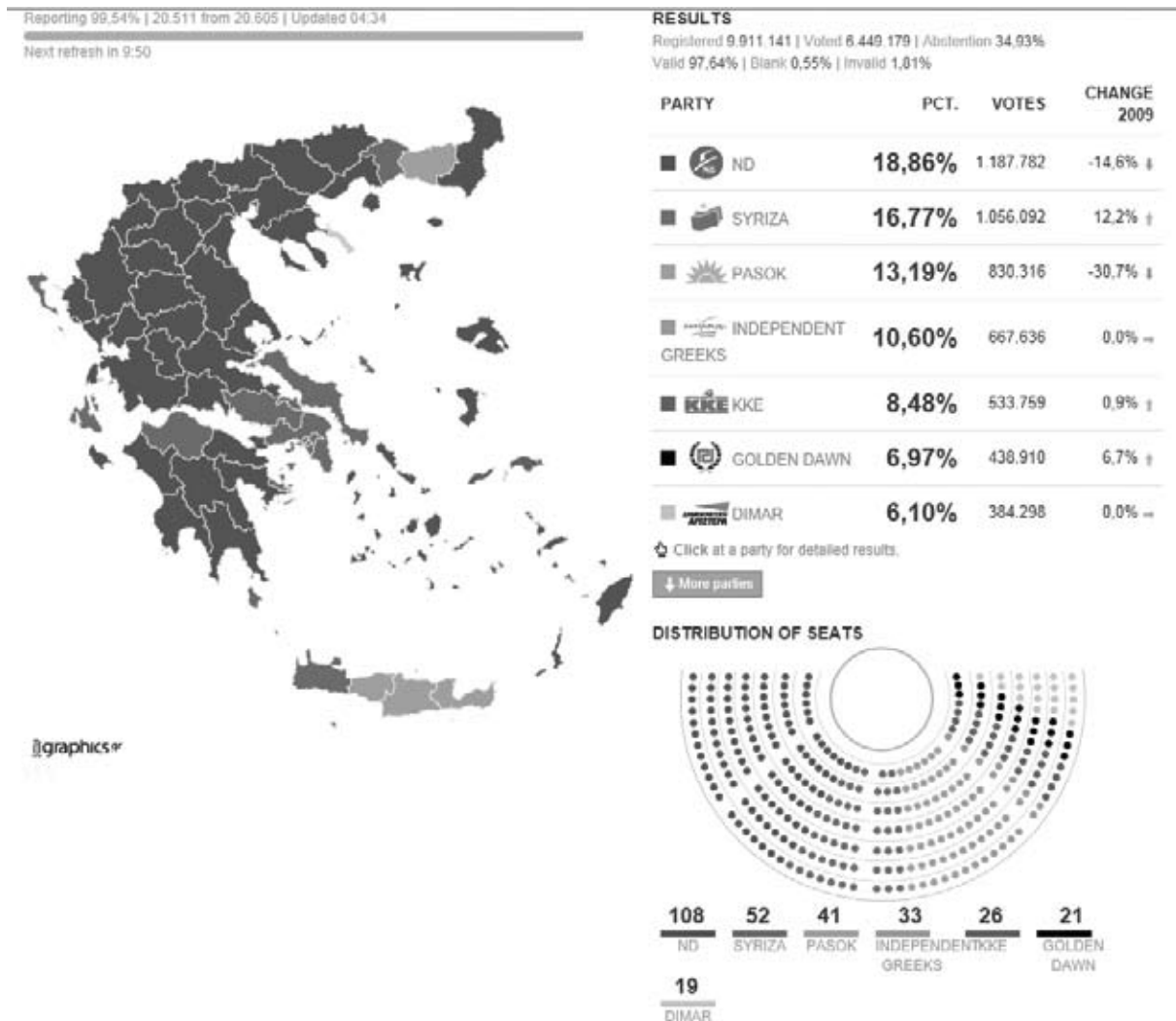
혁명



[그리스] 선거와 혁명전략

홍수천





각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 순서 - 신민당, 급진좌파연합(시리아), 사회당, 그리스독립당, 공산당, 황금새벽당, 민주좌익당

6월 17일 그리스 재선거에 유럽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스 파산이 그리스 일국으로 끝나지 않고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부가 들어설 것인지, 파산 사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귀추가 쏠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그리스

사태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난 5월 6일에 있던 1차 선거 결과는 현재 준혁명적 정세에 있는 그리스 계급투쟁 상황을 반영하여 기성 주류 정당(사회당과 신민당)이 패배하고 상대적으로 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이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종 결과는 어떤 정부도 구성하지 못한 채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재선거에서도 과반 정당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정조차도 1차 때 못

지않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연정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조건에서 해결책이 나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연정 참여에 소극적이다.

정부 구성 문제

현재 우파정당인 신민주당과 급진좌파연합 시리자(SYRIZA)가 1,2위를 다투고 있다. 선거 전 사회당과 연정을 함께 하며 긴축을 밀어붙였던 신민주당은 유럽연합(EU)과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강요하고 있는 긴축을 거부하면 파산을 면할 수 없고 유럽연합에서도 퇴출당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

신민주당은 1차 선거에서 시리자에 2.4% 앞선 18.9%로 1위를 했다. 제1당에게 50석을 보너스로 얹어주는 선거제도 덕에 총 300석 가운데 110석이 신민주당에게 돌아갔고, 16.5%를 득표한 시리자에게는 51석만 돌아갔다. 3%도 안 되는 차이 가지고 신민주당이 59석이나 더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신민주당이 긴축 고수 입장인 사회당(13.2%로 3위를 해서 39석)과 함께 다시 연정을 꾸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투표한 국민의 2/3 가까이가 긴축에 반대하는 당들에게 투표하여 “반긴축 정부” 구성이라는 국민적 의사가 확인된 상태에서 사회당 득표율까지 합쳐도 32% 밖에 안 되는 지지기반 가지고 정부를 구성해봐야 긴축을 밀어붙일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2차 투표에서는 파산과 유럽연합 퇴출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친긴축 정부”에 대한 과반 지지를 획득하겠다는 전략으

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는 2차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다투고 있고 선거에서 제1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시리자는 1차 선거 이전부터 민주좌익당(DIMAR; 시리자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져 나간 세력이 만든 정당)과 그리스공산당(KKE), 반자본주의연합(ANTARSYA) 등 집권 사회당 왼쪽에 있는 정당들에게 좌파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해 놓고 있다.(현재까지는 모두 거부하고 있다). 시리자는 이러한 좌파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긴축에 대해 “거부/ 재협상”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연합과 IMF가 긴축을 거부하면 파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설사 협상테이블이 열린다 하더라도 재협상으로 긴축 기조를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 그 때문에 그리스공산당은 시리자의 좌파연립정부 제안을 거부하며, ‘재협상’은 “인민들에게 독점자본 및 제국주의 연합과의 대결 없이도 인민들을 위해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조장”하는 공상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재협상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맞지만, 그러나 긴축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긴축만으로도 그리스 노동자 민중들은 이미 생존권이 벼랑 끝까지 내몰릴 대로 내몰렸다. 따라서 추가적인 긴축을 거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리해고, 임금·연금 삭감, 단협 파기, 공공복지 축소 등 긴축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긴축이나 성장(경기부양)이나’ 사이에서 맴도는 ‘경제 살리기’ 프레임을 깨고 ‘노동자 민중 살리기’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레닌이 〈임

박한 파국,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서 제기한 요구들과 같은 이행요구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부채 무효화 >유럽중앙은행과 IMF 등 국제금융자본이 그리스 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동결, 몰수하고 >대기업과 은행을 노동자 통제 하에 몰수 국유화하고 >여기서 마련된 기금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공사업을 벌여 실업을 해소하고, 생활 임금·연금을 지급하고 만신창이가 된 공공복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리스의 압박한 파국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행요구 프로그램을 -- 그 중에 몇몇 요구가 아니라 통으로, 하나의 총체적 프로그램으로 -- 즉각 실시해야 한다. 시리자는 긴축을 반대한다면서도 긴축이 몰고 온 파국적 상황에 맞선 이러한 이행요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 그리스의 파국적 상황이 “긴축 반대” 요구와 이행요구 강령 사이에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만리장성도 허물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당면 요구와 혁명적 이행강령 사이의 간극이 급속히 좁혀져 맞닿아 있는 상황임에도 긴축 반대 투쟁을 이행요구 프로그램과 연결시키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좌익개량주의 세력인 시리자가 이런 프로그램을 쉽게 받아 안을 걸로 기대해서가 아니다. 현재로선 긴축을 반대하는 대중들의 반긴축 여망이 많은 부분 시리자를 통해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리자가 제안하는 좌파연립정부를 “부르주아 정부”라며 거부하고, “독점자본 및 제국주의 연합과의 대결”을 주장하는 그리스공산당은 어떠한가? 임

박한 파국 상황에서, 혁명적 정세의 문턱까지 차오른 심화된 준혁명적 상황에서 그러한 “대결”을 넘어 위와 같은 이행요구 프로그램과 그것을 실행할 혁명적 노동자정부 수립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 그리스 주요 산별노조들에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공산당은 그 혁명적 연사에도 불구하고, 긴축에 맞선 하루 또는 이틀 총파업을 무기한 전면 총파업으로 확대하라는 요구를 지난 2년 동안 계속 봉쇄해 왔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양심적인” 애국적 소부르주아 및 부르주아들을 포함하는 “애국정부”를 주장해 왔다. 자본가계급의 비독점 분파와 연합하는 이러한 인민전선 정부를 내걸고 혁명적 노동자정부에 대해서는 거부해 왔다.

이행요구 프로그램을 실시할 혁명적 노동자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와 공장위원회, 노동자정방대와 노동자민병대 같은 대중투쟁기관들이 건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인 24시간 또는 48시간 시한부 파업을 넘어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실질적인 대중투쟁을 분출시킬 무기한 전면 총파업으로 확대시킬 때에만 그 속에서 이러한 혁명적 대중투쟁기관이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투쟁기관들은 기존의 자본가 권력과 대치하는 이중권력 상황을 조성할 것이며, 이 상황에서는 자본가 권력을 타도하고 혁명적 노동자정부를 수립하는 봉기를 일정에 올릴 수 있다. 현 그리스의 깊은 준혁명적 상황에서 이것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공황과 긴축과 계급투쟁

지난 5월의 1차 선거와 마찬가지로 6월 17일 재선거는 매우 중요한 정세적 배경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2년 여 동안 준혁명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는 지금 이 장기화된 준혁명적 정세가 중대한 고비를 맞는 국면에 이르렀다.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들은 잔인한 긴축을 강요하는 파판드레우 정부와 그를 뒤이은 파파데모스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계속 투쟁해 왔다. 주요 시위 때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 민중들이 거리로 나왔다. 24시간, 48시간 총파업도 여러 차례 벌였다. 노동자 민중들은 아테네의 신타그마 광장을 비롯해 주요 도시들의 중앙광장을 점거했다. 장기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장들도 많은데, 특히 작년부터는 그리스의 주요 산업인 철강산업을 비롯하여 병원과 신문사들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점거투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노동자 통제 아래 운영되고 있다. 다수의 지구들에서 주민위원회와 주민총회가 결성되었고, 현장의 평조합

원위원회들이 만들어져 지역과 사업장 단위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주도에 의한 투쟁들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투쟁들이 국지적 현상을 넘어 총괄 조정되고 전국화 되지 못한 채 여전히 지역과 사업장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리스 자본주의의 위기가 가져온 결과는 참혹하다. 노동자와 빈민들은 물론이고 농어민 같은 소부르주아 생산자들로부터 도시의 전문직과 소상공인들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중간계급들”의 생활수준도 급격히 저하되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리스 경제는 완전한 공황 상태이다. 2011년에 GDP는 7.5%나 감소했다. 상황은 더 악화될 기세이다. 수만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고, 건설업 수주가 2011년에 반 토막이 났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노동자계급이다. 자본가 체제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이 온통 전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실업자는 2008년 말 이래 60만 명이나 증가하여 현재의 실업률이 21%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과 여성들이 특히 실업으로 내

몰리고 있다. 25세 이하 인구의 반 이상이, 그리고 여성의 35%가 일자리가 없다.

그리스 정부는 최근까지 두 차례 “연금 개혁”(개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이 빈곤층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현재 퇴직 연령층으로 일자리를 잃은, 또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특히 연금 개악으로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놓여 있다. 연금 개악과 함께 전국 단위 임금교섭 체제도 사실상 폐지되었다.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 임금이 약 30%나 깎였다. 최저임금도 20% 삭감되었다. 성인 인구의 약 10%가 전혀 소득이 없다. 아테네와 그 인근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그리스 인구의 약 40%가 거주하는데, 현재 2만 명이 집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하고 20만 명이 무료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절대 다수 대중의 소득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인플레이가 계속 치솟고 있다. 특히 주요 도시들이 그러한데 집세 등 주거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그나마 아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에서도 임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종종 벌어졌다. 이것이 공장 점거의 방아쇠가 되고 있고, 나아가 노동자 통제 하의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생산물을 판매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업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사업장 점거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2만5천 명 규모의 소도시 킬키스 소재 한 병원은

그 동안 많이 소개되고 있는 주요 사례인데, 여기서는 간호사, 기능직, 사무직, 의사 등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이 2월 2일부터 3월 중순까지 병원을 점거하여 노동자 통제 하에 병원을 운영했다. 이것은 결코 유일한 사례가 아니다. 그리스에서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이 같은 점거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어떤 면에선 상황에 의해 내몰리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투쟁으로 철강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 4,500명의 철강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과 전국 단위 교섭 폐지에 반대하여 현재 7달 동안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파업투쟁이 전혀 흔들림 없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내부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고, 사측의 대량해고 발표 이후 지원과 연대가 늘어가고 있다.

이들 사례를 비롯하여 어디서나 노동자들은 해당 부문에서 종사하는 모든 인력 — 정규직·비정규직, 숙련·비숙련을 가리지 않고 모두 — 을 포괄하는 정기적 대중총회를 조직하고 있다. 여기서 투쟁위원회와 대책 위원회들, 대표자들이 선출되었다. 철강노동자들의 투쟁을 포함하여 많은 투쟁들에서 자발적인 지원대책위와 가족대책위도 만들어졌다.

작업장 현장 차원에서 노동자 통제 및 노동자 자주관을 위한 기층 평조합원 기관들이 세워졌다. 이들 기관은 보통 당면 대응을 위한 실제적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럼에도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화 및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고 단사와 부문을 넘어서도록 하는 데 명백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공동의 적 — 정부

와 사장들, 그리고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과 IMF 등의 금융자본가 집단들 —에 대항하는 연대 의식을 크게 강화시켰다. 그러나 전국적 차원에서는 노동총연맹(GSEE)과 공공노조연맹(ADEDY) 같은 주요 연맹 지도부들이 이러한 파업과 점거에 대한 지지 지원을 거부하며 관료들의 배신자적 역할을 드러냈다.

점거운동 자체가 갖고 있는 명백한 약점도 있다. 생존권 파탄과 대중의 참상에 대해 올바르게도 “체제”에 비난의 화살을 날리면서도 여전히 점거투쟁은 대부분 순수 경제투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역적, 전국적으로 점거투쟁들 간에 연결망을 구축하거나 다른 대중운동들과 연결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다. 개별 고용주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화하는 데서만이 아니라 정확히 “체제” 전체에 맞서 싸우는 데서도 그러한 연결이 필수적인데 현재까진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장의 대중투쟁기관들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조직 구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 투쟁기관들이 현 자본가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노동자평의회로 발전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점거 투쟁의 현실 자체가 이러한 필요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점거 투쟁이 사업장 수준에 머물러서는 그 투쟁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가들에 대한 물수를 단행하고, 노동자 통제 하의 비상계획에 맞춰 생산과 작업을 재조직하는 정치투쟁이 필요하다.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투쟁기관들을 통해 권력 장악으로 나아가게 해줄 정치투쟁의 고리가 결정적으로 빠져 있다. 투쟁의 긴급한 필요로 인해 노동자들, 특히 가장 능동적

이고 선진적인 노동자들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자본가국가 및 국제금융자본가기관들과의 피할 수 없는 전투에서 지침이 되어줄 전략과 전술, 즉 강령적 지도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기성제도권 정당들은 지금 퇴조하고 있고, 그리스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리스 노동자들이 부닥쳐 있는 주요 장애물이 있다. 대중의 당면 투쟁들을 자본주의 타도로 연결시키는 데 복무할 정치 지도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지도력의 위기가 노동자의 이해를 방어하는 자생적인 투쟁을 모든 면에서 약화시키고 있다.

대규모 노동조합 연맹들이 투쟁을 전국화 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연맹 지도부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무기한 총파업 호소를 일절 거부해 왔고, 하루 또는 이틀간의 시위행동 수준으로 총파업을 제한시켜 왔다. 마찬가지로 시리자와 그리스공산당과 민주좌익당 같은 개량주의 좌파정당들도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무기한 총파업과 노동자평의회 창설 같은 혁명적 투쟁 방법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ана키스트들과 자율주의자들은 투쟁대표사회와 평의회 같은 노동자민주주의 기관들을 통해 투쟁을 중앙집중화시킬 필요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극좌파”의 모택동주의나 트로츠키주의 그룹들은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노동자들을 개량주의 지도부들로부터 떼어내서 노동자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일관된 전략 전술

을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해 왔다.

체제 위기

이와 같이 대중투쟁이 분출하고 자생적인 급진화가 이루어지고 사회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 오랜 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중들이 유럽연합과 IMF와 유럽중앙은행(이른바 ‘트로이카’)이 강요하는 잔인한 긴축 프로그램에 대해 “긴축 거부”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싸울 지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한 정세전망과 함께 단순히 “반대”, “거부”를 넘어서는 포지티브한 프로그램을, 즉 행동강령을 어디로부터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대 주류정당인 중도우파 신민주당과 중도파 사회당은 지지 기반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각각 그 오른쪽과 왼쪽의 분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 (신민주당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져 나간 분파는 독립그리스당을 따로 만들었고, 사회당에서 왼쪽으로 떨어져나간 분파는 민주좌익당에 합류했다.) 이것은 지배계급의 내적 위기를 반영한다.

파판드레우 총리가 사퇴하고 그 자리를 이은 기술관료 총리 파파데모스는 어떠한 선거나 국민투표도 거치지 않은 채 의회에서 요식행위를 거쳐 선출된 총리로서, 사실상 유럽연합과 IMF 등의 국제 금융과두제에 의해 임명된 거나 다름없다. 파파데모스 정부는 5월 선거 이

전의 압도적 의회 다수파(신민당-사회당 의석)에 기반하고 있지만, 결코 어떤 의미에서도 “인민 의지”를 반영한 정부가 아니다.

이와 같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도조차 건너 뛰어버린 파파데모스 정부는 양대 주류정당인 사회당과 신민주당이 그리스 자본가계급 및 제국주의와 묶여 있는 긴밀한 끈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정부이다. 이것은 그 양대 정당이 그리스 주민의 소수를, 그것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소수를 대변할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바로 이것이 극우 준파쇼 세력인 LAOS당(인민정교회 연대)이 연정에서 급히 발을 빼고 자신을 전 그리스인들의 애국적 민족주의 운동으로 제시하고자 애쓰는 이유이다.

최근 몇 달간 사회당과 신민주당의 세 약화와 탈당 행렬은 단순히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는 비겁한 국회의원들 때문만은 아니다. 잔인한 긴축에 대한 ‘민주적’ 위임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지배계급의 내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스 지배계급과 국제 금융자본도 이들 정당의 수권 능력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스 자본가들과 은행과 잔존 독점 대기업들(선박회사들 같은)은 글로벌 금융자본과 긴밀히 묶여 있다. 그리스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체들도 국제 금융과두 세력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국채에 대해 투기해 왔다. 그리스의 대규모 선박회사 자본가들의 경우 그들의 이윤이 증세로 위협받으면 외국 국기를 달고 선단을 운영하

겠다며 협박하는 한편, 유럽연합과 IMF가 강요하는 긴축안은 그것대로 행복하게 노동자 임금 삭감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 바쁜 상황이다.

2008년 이후 세계공황으로 구제금융을 받았다가 지금은 국채와 통화의 도박을 걸고 있는 금융사와 은행들과 투기꾼들한테 그리스가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가 독일 제국주의의 헤게모니 하에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질서 재편을 위한 실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등이 실제로는 그리스에서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잔인한 긴축 조치를 강경하게 강요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스 국가와 그리스 자본주의의 지위를 말 잘 듣는 반(半)식민지로 재편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를 실험장으로 해서 남유럽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등은 그리스 국민에게 어떤 양보도 할 의사가 없다. 유럽연합 역내의 모든 나라 노동자 민중들에게 너희들도 같은 공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혹한 긴축 조치의 끈을 절대로 늦출 의사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에서 새로 들어서는 어떤 정부가 만약 드라마화(현 유로화 이전의 원래 그리스 통화)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금융과두세력이 국제 합작으로 그리스 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것이다. 국제



그리스와 독일의 재무장관, 유럽 재정위기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유럽 자본가계급 사이의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와 외환과 수출입에 대한 집중 포격으로 경제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국제 금융과두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그나마 밖에 있는 것보다는 덜 혹독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시켜주기 위해” 드라마화 복귀 같은 망상에 찬 민족주의적 프로젝트는 반드시 대실패로 끝나버리도록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하여 응징할 태세를 만반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민주”정부가 실패하면 유럽연합과 그리스 지배계급은 권위주의적 해결책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명백하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이주 노동자들을 비롯한 이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참주선동적 포퓰리즘적 인종주의 캠페인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 계급투쟁과 혁명의 운명은 긴축에 반대하여 그 자신의 대안 — “독-프 제국주의 지배 아래 유럽의 자본주의적 통합”을 대체할 사회주의

적 대안 — 을 위해 싸우는 유럽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한 배의 운명’인 상황이다.

권력 문제

극우 세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노동자와 청년층과 빈민들이 정치 스펙트럼의 왼쪽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점거와 파업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노동자 통제 기관 등 아래로부터의 평조합원 조직 등 기층 구조들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 전계급적으로 일반화될 경우 이러한 기층 구조들은 노동자평의회가 될 수 있는 조직 형태들이다. 혁명적 정세 그 문턱까지 차올랐음을 가리키는 실물적 증거들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좌파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이번 5월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시리자와 그리스공산당과 민주좌익당이 얻은 득표율(각각 16.8%, 8.5%, 6.1%)을 합치면 약 31.4%로 지난 2009년 총선 때 3당이 얻은 18%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양대 주류정당인 신민당과 사회당이 얻은 득표율 32.1%(각각 18.9%와 13.2%)와 엇비슷한 수치이다. 지배계급과 유럽연합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주아 언론들은 유럽연합과의 “협약”을 전면 부정할, 또는 “재협상”을 들고 나올 “좌파정부”의 위협을 연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까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권력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정부와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에 대항할

일관된 전략과 지도력을 제공하지 못해 온 좌파정당들의 정치가 아니다. 이들 좌파정당들이 6월 2차 선거에서 다수파가 되거나 또는 의회 내 최대 블록이 되어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경우 이들이 받게 될 엄청난 대중적 기대치와 사회적 압력이 지금 지배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공포의 근원이다. 그리스와 유럽의 지배계급들은 좌파에 대한 지지가 확대 강화되는 것을 깊은 우려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좌파정당 자신들은 선거 승리의 전망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에 빠져 있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시리자의 리더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좌파연립정부 제안에 대해 민주좌익당은 침묵과 동요가 뒤섞인 형태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리스공산당과 반자본주의연합 안타르시아는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시리자의 제안이나 이에 대한 다른 당들의 반응이나 모두 그리스 좌파의 뿌리 깊은 정치적 오류와 노동자계급이 직면한 지도력 위기의 깊이를 드러낸다.

5월 선거 이전부터 시리자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 내부 분열로 이미 코키노(Kokino[그리스어로 ‘빨강’이라는 뜻] ; 노동자인터내셔널건설위원회[CWI]의 그리스 지부)가 탈퇴했고, 모택동주의 세력인 KOE도 탈당이 예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시리자는 그 주류세력을 이루고 있는 시나스피스모스(Synaspismos ; 그리스어로 ‘연합’이라는 뜻)의 색깔이 더

욱 두드러져가고 있다. 시나스피스모스는 구 유로코뮤니스트들로서 지금은 프랑스·독일의 좌파당과 함께 유럽좌파당에 가맹해 있다.

시리자의 의원단은 지난 몇 달 간 긴축과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 프로그램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고, 긴축조치 폐기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부채 지불 일시정지와 함께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상황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트로이카와 부채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 시리자는 드라크마화로의 복귀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트로이카로부터의 일정한 양보를 받아내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시리자 주도의 정부가 구성될 경우 그 전략의 결과는 정부 정책이 노동자 민중들로부터의 요구와 자본가들과 제국주의로부터의 요구 사이에서 왔다갔다 동요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리자가 내걸고 있는 “반긴축” “반신자유주의” 정부가 그리스 자본주의의 토대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그리스 상황에서 대규모 독점자본의 몰수·국유화 요구조차도 시리자는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개량주의 정당으로서 의외일 것도 없지만 시리자가 말하는 “반긴축 정부”는 순수 의회적인 차원으로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 그 동안 수많은 그리스 역대 자본가 정부들을 그리도 잘 섬겨왔고, 지배계급 및 제국주의와 수천 개의 끈으로 묶여 있는 부르주아 국가기구에 대해 시리자는 “좌파정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것처럼 묘

사하고 있다. 트로이카의 요구를 따르길 멈추려는 사소한 시도라도 있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뒤따를 이들 트로이카와 지배계급으로부터의 사보타지와 공공연한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리자는 어떤 전략도,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민주좌익당의 반응

민주좌익당(DIMAR)은 시리자의 제안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제안 자체는 자신들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시리자에 대한 모종의 기피증 때문이다. 민주좌익당은 2010년 6월에 시리자가 사회당 정부에 대해 이른바 ‘종파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550명의 시나스피스모스 소속 당원과 4명의 의원이 탈당할 때 함께 탈당한 시리자 내 우파에 기원을 두고 있다. 탈당파들이 실제로 원한 것은 당시 총리 파판드레우와 동맹을 맺고 그의 정부를 트로이카와의 협상에서 왼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민주좌익당은 그리스가 유럽연합과 유로존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언제나 자신의 정치와 강령에서 키포인트로 설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트로이카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재협상”에 찬성한다.

민주좌익당은 최근에 세가 늘었다. 사회당에서 탈당한 세력들의 다수가(특히 이전의 당 지도부들, 의원들, 조합관료들) 어느 다른 좌파정당보다도 민주좌익당을 선호한 결과다. 민주좌익당이 기존에 사회당 통제 아래 있던 층들 속에서, 특히 노동조합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늘리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사회당 및 사회당에 여전히 충성하는 노동조합 관료들과의 모든 유대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 민주좌익당이 시리자와의 (특히 그리스공산당이나 안타르시아와는 더 더욱) 동맹에 스스로를 묶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에 민주좌익당은 “좌파정부”보다는 ‘개혁된’ 사회당 및 여타 중도좌파 정당들(아마 시리자도 포함해서)과의 동맹을 선호할 것이다.

그리스공산당(KKE)

이번 선거에서 8.5%의 득표율을 얻은 그리스공산당은 “선거 이후 당들의 연정으로 만들어지는 어떠한 정부도... 자본가의 필요와 이익, 유럽연합과 IMF의 요구를 따르게 될” 부르주아 정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근거로 좌파연립정부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스공산당은 이

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리자와 민주좌익당에 대해 몇몇 지점에서 올바른 비판을 제기하는데, 특히 이 두 당이 부채 무효화 및 즉각적인 지불 정지 선언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그리스공산당이 내놓는 대안은 무엇인가? 기회주의자들과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리스공산당은 1990년대 초에 신민주당과 소위 “반부패” 정부를 구성하지 않았던가? 그리스공산당이 시리자의 “반긴축” 정부가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에 기반한 여전히 부르주아 정부일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훌륭하다. 그러나 그리스공산당이 몇 년 동안 선전선동해 온 “애국정부” 요구는 어떠한가? 그러한 정부도 여전히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사적소유관계에 기반한 정부일 것이다. “애국정부”가 설사 그리스공산당의 프로그램에 따른다 하더라도 단지 자본의 독점 부분들만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그

러한 조치마저도 과연 서로 적대적인 계급들(“혁명적” 노동자들과 “양심적”인 애국 부르주아 및 소부르주아)을 각각 대표하는 당들의 애국정부(즉 인민전선 정부)가 과연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1930년대에 프랑스나 스페인에서의 인민전선정부들의 부정적 사례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



그리스 공산당 지지자들

인다. 그리스공산당이 제시하는 전략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는 전략이다. 왜냐하면 “애국적” 부르주아지가 여전히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실행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략의 연장선에서 당연히 당면 전술 문제에서도 같은 맥락의 오류에 빠져들고 있다. 시리자를 “기회주의” 세력이라며 반긴축 정부 구성을 거부하는 그리스공산당의 정책은 친긴축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행동에 거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긴축에 반대하는 정부 대신 긴축에 찬성하는 정부가 들어서도록 허용하고 있는 꼴이다.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노동자 민중들이 친긴축 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는데도 말이다. 이것은 1929-33년에 독일에서 나치에 대항하는 노동자 공동전선 결성에 최대 장애물이었던 독일공산당의 종파주의적인 “제3기” 정책의 조잡한 복사판이다. 당시 독일공산당은 개량주의 사민당과 그 당이 주도하고 있던 거대 노조들에 대해 기회주의라는 이유로 그들과의 만나치 공동투쟁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히틀러의 권력 장악에 길을 닦아줬다.

좌파연립정부 같은 정부 구성 문제에서만 종파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에서도 그러하다. 그리스공산당은 투쟁사업장 대표자들에 바탕한 전국 단위 공동투쟁기구를 만드는 데서도 “기회주의자들”과 공동전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발을 빼버렸고, 집회와 시위도 자신들이 단독으로 조직하는 경우가 아

니면 참가하길 거부해 왔다. “애국적” 부르주아와는 함께 해도 노동자운동 내 “기회주의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민전선을 위해 노동자 공동전선을 거부하는 것이 언제나 그리스공산당의 전략·전술에서 뼈대를 이루어 왔다.

그리스공산당은 그 동안 유로화 및 유럽연합 탈퇴 캠페인을 벌여 왔는데 최근 두어 달 전부터 “자본주의적 관계 아래서 드라크마화를 재도입하는 것은 대대적인 인플레이의 충격 하에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훨씬 더 급속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결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돌연’ 깨닫고서 탈퇴 입장을 완화시켰다. 그리스공산당의 유럽연합 탈퇴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는 <혁명> 창간 준비 6호에 실린 “그리스 혁명과 전 유럽 노동자혁명”을 보시오.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공산당은 “애국정부” 요구도 “인민정부” 요구로 대체했다. 인민전선의 좀 더 좌익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민정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어딘가에 놓여 있는 “반독점 단계”의 정부라는 것이다. 현실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이러한 인민정부를 위해 당면한 “반긴축 정부” 요구를 거부한다면, 현실에선 친긴축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고 이 정부에 대한 단지 제도권 야당으로 남는 것 이외에 그리스공산당한테는 다른 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리자에게 그리스공산당 때문에 반긴축 정부가 날아가 버렸다는 대중적 핑계거리를 만들 기회를 주는 한편, 시리자의 “긴축 거부”와 “반신자유주의 정부” 요구를 대중들의 눈앞에서 시험대 위에 올

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5월 1차 선거에서 시리자가 약진할 수 있었던 반면 그리스공산당은 담보 상태로 머물러버린 것이다. 조건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6월 재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스공산당의 전략에 대해 의아해 하며 노동자 조직들의 단결을 원하는 지지자들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던지 그리스공산당은 “약한 정부는 강한 인민을 의미한다”며 낙관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이것은 거의 범죄적인 자기만족적 수동성이다. ‘인민이 계속 전진해서 그리스공산당을 강화시켜주는 한에서는 정부를 누가 구성하든 그 정부는 약한 정부일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지난 파판드레우 정부도 약한 정부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현 파파데모스 정부도? 그 정부들이 거대한 대중투쟁에 부닥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 정부들은 대중을 궁핍과 도탄에 빠뜨리는 데 성공하지 않았던가? 정말 그리스공산당은 그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무르익은 혁명적 정세조건들이 그냥 흘러버리고 썩어문드러져서 대립물 -- 파시즘의 반혁명 -- 로 전화될 위험은 없는가?

권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 시기에 정부 문제에 대한 그리스공산당의 답변은 대기주의 그 자체다. 그리스공산당은 여타 개량주의 정당들을 대신할 혁명적 또는 “공산주의”적 대안이 전혀 못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공산당이 취하고 있는 그 같은 태도가 시리자나 민주좌익당 같은 당들의 지도부에게 투쟁을 회피할 구실을 주고 있고 당 내외에서 어떤

도전도 받지 않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사회당 지지를 고수하든, ‘중립적’이 되든, 시리자나 민주좌익당과 손잡든 아무 구애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다름 아닌 이런 그리스공산당의 대기주의적 태도이다.

중도주의 좌파의 “노동자정부” 요구

그리스공산당의 대기주의적 자세와는 달리 적어도 시리자의 제안은 선거와 정세가 제기하는 실제 문제 -- 정부 문제 -- 를 어쨌든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리자 왼쪽에 있는 자율주의자들이나 아나키스트들 같은 “극좌파”들도 이 문제에 대해 기피, 또는 기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리스공산당과 마찬가지로 같다. 그들은 한 걸음 나아가 “아무것도 바꿀게 없다”며 간단히 선거를 기각해버림으로써 스스로 정세적으로 완전히 무가치함을 드러내고 있다.

중도주의 좌익들 가운데 트로츠키주의를 자임하고 있는 코키노(CWI 그리스 지부)는 그리스공산당과 시리자와 민주좌익당 3당으로 구성되는, “사회주의 강령”에 입각한 “노동자정부”를 요구하고 있다. 코키노는 이렇게 해서 의회 내 다수파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그 3당이 단일후보명단으로 선거에 나가서 보너스로 얻어주는 50석을 획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코키노는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통제 하에 은행 및 대기업 국유화와 부채 무효화 같은 올바른 요구를 다수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코키노가 이들 부르주아 노동자당들에게

정부권력을 잡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만, 이들 개량주의 정당들이 “사회주의 강령”을 실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틀렸다. 더욱이 코키노의 요구에는, 예상되는 자본으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부가 반드시 기반해야만 하는 투쟁기구들, 즉 노동자평의회나 노동자정방대 같은 대중투쟁기관들과 관련한 요구안이나 제안이 일체 빠져 있다.

코키노가 말하는 노동자정부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지 않고서도, 노동자 민중을 무장시키지 않고서도, 현재의 각 작업장 단위 대중총회들과 주민총회들을 소비에트 같은 평의회로 확대시키고 이 평의회들을 중앙집중화 시키지 않고서도, 이들 평의회들로 국가기구를 대체시키지 않고서도, 이 모든 것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사회주의 강령을 실행할 수 있는 정부이다! “노동자정부”를 이런 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중도주의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자본주의연합(안타르시아)

5월 선거에서 1.19%를 득표하여 2009년 총선(0.36% 득표)에 비해 나름대로 약진한 반자본주의연합 안타르시아(ANTARSYA)는 위에서 우리가 제시한 바와 같은, 해고 금지, 생활임금, 부채 무효화 등 반긴축 요구와 함께 노동자통제, 몰수·국유화 등의 이행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안타르시아는 이러한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해 “전체

근로민중의 봉기, 반자본주의 혁명”을 호소한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현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타도하고 그 자리에 노동자 민주주의와 노동자권력을 세움으로써 자본주의와 단절하는 길이다... 노동자, 지식인, 창조적 민중들의 공동전선이 지도력을 떠맡는다면 우리는 사회적 생산력을 집단적으로 사용하여 이윤 논리와 시장, ‘경쟁력’과 환경 파괴 등과 단절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안타르시아가 취한 입장은 완전히 혼란 그 자체다. 안타르시아는 시리자와 그리스공산당과 민주좌익당이(여기에 더해 노동조합들이) 노동자계급 대중의 압도적 다수를 대표하고 있다는,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긴축을 거부하며 그로부터의 탈출구를 이들 정당을 통해 찾고 있다는 사실을 간단히 무시한다. 노동자들이 잘못 알고 있으며, “그들의” 당들이 그들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간다.

지금 초미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배신당하고 패배당하기 전에 어떻게 노동자들을 그들 지도부로부터 단절시켜낼 것인가이다. 단지 그 지도부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자들의 환상을 깨고 새로운 지도부를 형성해 내는 데 결코 충분치 않다.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이 유럽연합과 IMF 등 금융과두세력을 비난하곤 있지만, 현재 그들의 정책과 지도부는 “근로민중의 봉기”와 “반자본주의 혁명”을 가로막는 가공할 장애물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헐어낼 것인가이다.

혁명적 전략은 ‘폭로 + 대중투쟁 결합’ 그 이상을 하

는 것에 기반해야 한다. 안타르시아는 공동전선을 촉구하지만, 그 공동전선은 “체제와의 단절과 혁명을 원하는 모든 자들의 공동전선”이다. 이것은 안타르시아의 목표에 이미 동의하는 자들과의 공동전선이다. 그러나 그건 그리스 노동자계급이 필요로 하는 공동전선이 아니다. 지금 그리스 노동자계급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개량주의건 혁명주의건 긴축을 거부하길 원하는 모든 세력들의 공동전선이다. 안타르시아 자신이 바라는 단절과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지금 안타르시아가 해야 할 것은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들에게 대중적 공동전선을 결성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촉구가 그 당원들 및 조합원 대중들과 그들 지도부 모두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전국 단위만이 아니라 각 지역 단위로도 긴축 거부 공동전선이 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공동전선은 임금·연금, 일자리, 단협, 복지 등 일체의 삭감 및 직장폐쇄에 맞서 싸우고, 조직노동자들과 함께 실업노동자, 학생, 연금 수령자들을 투쟁으로 결집시키는 것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현재 현장과 지역 차원에서 아래로부터 건설되고 있는 대중총회를 통해 투쟁대표자회의를 선출해야 한다. 종파주의를 거부하는 혁명가들은 이러한 대표자회의에 모든 노동자당들 소속의 인사들과 이 당들 외부의 인사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 끌어들이려고 해야 한다. 경찰 탄압과 함께 신나치 황금새벽당이 급속히 세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역 차원에서 노동자·청년들의 정당방위대 건설이 지금 긴급히 필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전선이 개량주의 지도부들의 대

중 장악력을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인 투쟁전선이 될 수 있으려면, 이들 지도부들이 공황에 맞서 모든 수준에서 단결하도록 선동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는 전선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동에는 이들 지도부들에게 ‘자본가 정당들과 단절하라’, 그리고 ‘긴축을 거부하고 사장들과 부자들과 국제 금융자본가들에게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노동자정부를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본가 국가의 군대와 관료기구가 아니라 현장과 지역의 대중총회들, 투쟁하는 노동조합들, 청년과 실업노동자 등으로 구성되는 모든 투쟁대표자회의, 평의회들에 의존해야 하며, 여기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대중적인 민병대를 창설하여 노동자정부의 포고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 인민의 다수(65%)가 긴축 거부에 투표했다. 이것은 신민주당-사회당 긴축 정부가 계속해서 인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막으라는 인민 위임권이 내려진 것으로 봐야 한다. 의회 소수와 정부(즉 여소야대 정부)가 되더라도 부채를 무효화하고 국제 금융과두세력과 단절하는 조치부터 취한다면 인민 다수의 동조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정부는 노동조합과 대중총회들, 청년과 실업노동자, 소농민, 파산한 소상공인 등의 대중적 결집에 의존하여 국가기구와 자본가 정당들의 사보타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개량주의 지도부들은 동요하고 배신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도부를 지지해 왔던 노동자들이 결집하여 혁명적 세력들과 어깨 걸고 나선다면 이러한 동요와 배신을 견제할 수 있고 나아가 권력을 노동자와 청

년층과 소농민의 수중에 가져다 줄 진정한 반자본주의 혁명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개량주의 정당들을 지지해 온 노동자들을 그들의 기회주의 지도부(시리자)와 종파주의 지도부(그리스공산당)로부터 떼어내서 혁명 지지 쪽으로 전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능동적인 혁명전략이 지금 사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스 노동자계급이 권력쟁취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까지처럼 현 지도부들에 의해 계속 봉쇄된다면, 파쇼 세력들이 급속히 힘을 키울 것이고 혁명을 향해 무르익어 가는 정세는 곧 썩어 버릴 것이다. “와인이 식초로 바뀔 것이다.”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혁명 세력들은 시급히 자신의 노선과 전술을 다시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훨씬 더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극좌파들

안타르시아는 스파르타쿠스그룹(OKDE-Spartacos)과 사회주의노동자당(SEK) 같은 혁명주의를 자임하는 10개 극좌파 그룹들이 결성한 연합조직이다. 이들 극좌파 그룹들은 안타르시아를 통해 하나의 연합체로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조직으로서의 독자적 정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들 그룹들 거의 모두가 지금 정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응방안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다. 그리스공산당처럼 이들 극좌파들도 기회주의의 위험성을 두려워하여 어떠한 정부 참여도 배제해 왔고, 개량주의 좌파정당들을 겨냥한 어떠한

전술도 — 좌파정당들이 의회 다수를 이뤄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전술도 — 발전시키지 못해 왔다. 그냥 “좌파정부”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만을 되풀이 하는 수준이다.

극좌파들은 투쟁을 정부 타도와 봉기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와 긴축에 맞서는 전체 노동자운동의 “광범위한” — 시리자와 그리스공산당을 포함하는 — 전선을 건설할 것을 되풀이해서 촉구하고 있다. 극좌파들이 많은 약점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조직들에게 당면한 공격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결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나 시리자와 그리스공산당과 민주좌익당 등 좌파정당들이 의회 다수를 획득할, 또는 소수와 정부(여소야대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좌파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처할 필요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오류이며 자멸적인 태도이다. 긴축과 정부에 맞서는 투쟁에서는 허용되는 개량주의자들과의 공동전선이 정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인가?

개량주의자들을 대체할 혁명적 대안을 세우고자 하는 극좌파 세력들은 (기회주의적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 사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용기 있고 명확한 정책과 전술이 필요하다. 개량주의자들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 혁명가들은 개량주의자들에게 자본가 정당을 배제하고 정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량주의자들에

게 노동자계급운동의 주요 요구안들과 정부에 의해 공격 받고 있는 모든 노동자 민중들의 주요 요구안들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시리자나 그리스공산당이나 민주좌익당의 개량주의 전략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혁명가들은 개량주의자들이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 요구를 구부리고 적들에게 양보하려는 것에 대해 경고를 보내야 한다. ‘좌파정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유포해선 안 되며, 이들 정당들이 일관된 혁명적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동시에 이들 정당이 그리스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상당 부분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말이지 이들 정당은 대다수의 노동자 민중들을, 특히 가장 능동적이고 투쟁하는 부위를 대표한다.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이들의 지지율 상승을 이와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다. 이들이 노동자계급의 현 지도부이다. 극좌파들이 노동자들을 그 자신의 강령 쪽으로, 예를 들어 ‘노동자 통제 하의 국유화’를 위한 투쟁 쪽으로 전취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전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만이 노동자들을 그들의 현 개량주의 지도부로부터 단절시켜 낼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 정당의 강령은 노동자계급에게 어떤 답도 줄 수 없는 강령이다. 민주좌익당은 조건만 맞으면 언제나 사회당과의 협조를 선호한다. 시리자는 부패한 그리스 국가기구들에 바탕을 두고 유럽

연합 및 IMF와 잘 지낼 수 있는 개량주의 정부를 원한다. 그리스공산당은 합헌적 수단에 의해 “인민권력”을 들어서게 할 수 있을 의회 다수세력으로 자신들이 성장하기만을 오직 기다리고 있다. 그 때까지는 전 노동자 운동 차원의 어떠한 공동투쟁도 차단한다.

이들 정당의 파멸적인 기회주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민중들은 이들 쪽으로 이동해 왔다. 왜? 이들이 지난 몇 년간의 대중투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했고, 그 가운데 중요한 투쟁들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다른 의회 정당들과는 달리 이 당들은 긴축을 비롯하여 국제 금융과두제가 강요하는 것들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 극좌파들은 개량주의 강령과 전략의 약점들을 인식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아직 그 약점들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 대중들에게 선거는 현 긴축 정부를 몰아내는, 그리고 그 정부의 복귀를 막는 수단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좌파정당들이 이를 막기 위해 싸울 것이고, 선거에서 당선되면 정부권력을 쉽게 신민당과 사회당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물론 극좌파들이 이들 좌파정당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환상에 경고를 발하는 것은 옳지만,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서 “자신의” 당들에게 정부권력을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혁명가들은 이것을 환영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 좌파정당들을 폭로할 것이고 그들을 시험대 위로 올려놓을 것이다. 이와 같이 좌파정당들로 구성되는 정부로 떠밀리는 것을 싫어하는 그리스공산당과 민주좌익당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개량주의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시험대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부를 촉구하는 것은 그들 좌파정당들에게 “긴축 거부”만이 아니라 “몰수·국유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명확한 요구안들을 거는 것과 결합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사업장 현장의 다양한 평조합원 조직들과 투쟁위원회들, 주민 대중총회들 같은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조직들에 기반을 둘 것, 그리고 이 투쟁 조직들을 총괄 조정하고 지역과 광역과 전국 단위로 중앙집중화 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과 결합되어야 한다. 철강노동자들과 여타 점거파업 노동자들이 창조해 낸 조직들, 광장점거운동 속에서 만들어진 각종 네트워크들, 그리고 주민총회들이 이미 그 같은 노동자평의회들의 중앙집중화를 구축해 낼 토대를 공급하고 있다.

이것은 “좌파”정당들이 선거에서 단지 상대적 다수만을 확보할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당들에게 소수파 정부 -- 즉 공약한 것들을 이행하고 자신의 강령을 실행에 옮기기를 원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중투쟁 조직들의 지지에 기반해야 하는 그러한 정부 -- 로 통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동일하게 이 경우에는 그 당들의 노동자계급 지지자들도 정부에 들어간 “자신들의” 당들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자신들의 기관을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다른 가능성

그러한 정부가 이루어지게 될지 여부는 선거 결과와 함께 개량주의 정당들에 대한 대중의 압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현재 그리스공산당과 시리자와 민주좌익당의 정치를 놓고 보면 그러한 정부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사 그들이 의회 다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더 높은 가능성은 트로이카와 그리스 자본가들을 대항하여 공세를 이어갈 정부를 노동자들이 맞게 될 가능성이다. 따라서 제2라운드의 공격에 직면하여 효과적인 반격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다.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포함하는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저항과 투쟁을 전국화, 일반화하여 당면한 공격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 부채 무효화! 유럽연합과 IMF가 강요하는 일체의 긴축 프로그램 중단! 지방정부들의 부채 무효화!

△ 전국 단위 단체교섭과 최저임금제 원상회복! 이와 관련한 노동악법 철폐! 일체의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 모든 기업의 회계장부 공개! 은행과 국가의 모든 계약 및 거래 공개, 부자들에 대한 누진과세!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과세 폐지!

△ 물가폭등에 맞선 식품과 주거, 기타 생필품을 위한 가격통제위원회 구성! 임금 및 복지수당에 대한 물가연동제 실시!

△ 저렴한 신용을 비롯하여 농어민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조치 즉각 실시!

△ 은행, 대기업, 대지주, 제국주의 금융자본가들(투자회사들)에 대한 무상몰수! 직장폐쇄한 모든 사업장들에 대한 노동자통제 하의 국유화와 모든 해고자 원상회복!

△ 노동자통제 하의 중앙은행! 대규모 산업에 대한 민주적 계획 및 노동자통제 하의 공공사업 프로그램!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정부가 필요하다. 현 정부를 끌어내릴 대중총파업에 의해서만 이러한 노동자정부 형성이 가능하다. 또한 노동자평의회와 정당방위대 같은 기관에 자기 기반을 둘 때에만 위와 같은 조치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정부는 그리스 내부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를 반혁명적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노동자정방대, 민병대로 노동자 민중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그리고 반혁명의 무장 해제를 위해 경찰, 보안정보기관을 해체하고 병사평의회를 통해 군사령부의 지휘권과 통제권을 분쇄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정부는 그리스 경제와 사회의 사회주의적 변혁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첫날부터 투쟁을 국

제화하는 것에 착수해야 한다. 일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스탈린주의의 역사와 그 붕괴가 증명하듯 불가능하다. 그리스에서 일국 사회주의 건설은 단지 반동적인 트라우마로만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 혁명은 유럽에 거대한 파장과 효과를 미칠 것이다. 어떤 경제위기보다 더 그것은 제국주의·자본주의 유럽연합을 뒤흔들 것이다. 그리스 혁명은 유럽 사회주의혁명을 일정에 올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프랑스와 독일 같은 보다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노동자들에게도 그리스 혁명은 노동자들이 승리할 있다는, 경제와 사회를 합리적으로 재조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오늘 이러한 투쟁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스에서만 이 아니라, 전 유럽에서 그리스 노동자들과의 연대행동에 착수하는 것을 통해, 유럽연합 및 유럽 지배계급들의 긴축 공세에 맞선 전 유럽적인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유럽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유일하게 생명력 있는 영속적 해결책으로서 사회주의유럽합중국을 위한 투쟁을 제기하는 것을 통해 지금 바로 그러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혁명**



[자료] 노동자정부 전술에 대하여¹⁾

코민테른 제4차 대회에서는 노동자정부 전술을 놓고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논의의 초점은 개량주의 정당과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 간에 정부 구성을 놓고 경합하는 나라들에서 어떤 전술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놓여 있었다. 어느 당이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코민테른은 노동자정부 슬로건이 “공동 전선 전술로부터 불가피하게 따라 나올 수밖에 없음”을 승인했다.

심지어는 이와 다른 경우의 나라들에서도 그 슬로건은 “일반적 선전 슬로건으로서 어디서나 실천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말하자면, 노동자정부가면 노동자 조직들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고,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의 이해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노동자 조직들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공산주의적 선전의 기본 구성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슬로건을 어떻게 전술로 사용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는데, 4차 대회에서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해내지는 못했다.

그 후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 논의는 5차 대회에서 궤도를 이탈해 버렸고, 그 뒤에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이 부르주아지와의 공공연한 연합(인민전선)을 위해 그 슬로건을 기각시켜버리면서는 논의 자체가 중단되어 버렸다.

그러나 4차대회의 심의안과 테제들에는 혁명주의자들에게 진정한 “노동자정부”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들이 무엇인지가 나타난다.

“노동자정부의 최대 임무는 프롤레타리아트를 무장시키고, 부르주아 반혁명 조직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생산 통제를 도입하고, 주요 과세 부담을 부자들에게 넘기고, 반혁명 부르주아지의 저항을 분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노동자정부가 가능한 경우는 오직 대

1) 이 자료 글은 해외 좌파 잡지 <Permanent Revolution> 1호에 실렸던 글 'The Workers' Government'를 번역한 것이다. <http://www.permanentrevolution.net/?view=entry&entry=397>

중들의 투쟁 속에서 탄생하는 경우, 그리고 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자 조직들 - 노동대중들 중 가장 억압받는 부분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들 - 의 지지를 받을 경우일 뿐이다.”

이것이 혁명주의자들이 쟁취하고자 하는 정부 유형을 묘사한 것이라면, 비혁명적 노동자 정당들에 대한 공동전선의 일환으로 노동자정부 슬로건이 제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슬로건은 대수학적 성격[백지수표의 경우처럼 거기에 누가 무엇을 써넣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즉 세력들의 역관계와 투쟁에 의해 내용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을 가진다. 혁명주의자들에게 이 정부는 부르주아지와의 혁명적 전쟁을 선포하는 정부이다. 그러나 개량주의자들에게 이 정부는 부르주아 체제를 관리하는 정부일 것이다.

“진정한 노동자정부의 구성, 그리고 혁명적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의 존속은 결국 격렬한 투쟁으로 이어지며, 중국에는 부르주아지와의 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노동자정부 수립” 슬로건에 혁명주의자들이 부여하는 내용이라면, 그 슬로건이 공동전선으로서 제안될 수 있으므로 개량주의자들 및 개량주의 지도력의 영향 하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 슬로건에 비혁명적 내용을 부여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따라서 4차 대회는 그러한 ‘노동자정부’ 레테르가 붙여질 가능성이 있는 5가지 정부 유형을 식별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 번째 가능성은 “자유주의 노동자정부”였다. 사회주의를 공언조차도 하지 않는 노동당 정부가 이 경우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들어섰던 노동당 정부가 그 사례였고, 영국에서도 곧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런 경우일 공산이 컸다. 두 번째는 “사회민주주의 노동자정부”인데, 독일에서 존재했던 사민당 정부가 여기에 속했다. 이 두 경우 모두 “부르주아 노동자당 정부”였으며, 현실에서는 부르주아지와의 은밀한 연합이었다.

코민테른은, 혁명적 공세를 피하기 위해 부르주아지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정부들이며, 혁명주의자들이 이러한 정부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줄 수 없지만, “그러한 정부조차도 객관적으로 부르주아 권력의 해체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음”을 승인했다.

이는 그러한 정부가 노동자들의 대표체로서 권력에 오르면 애초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나아가도록 강제되며, 그럼으로써 지지 노동자들의 기대와 요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러한 정부는 필요하면 어디서든 부르주아지와 한 편이 되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개량주의 정당에 대한 대중의 환멸을 또한 가속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노동자·빈농 정부였고(당시 동유럽 나라들에서 가능했던 정부), 네 번째는 혁명주의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노동자정부(즉 노동자 공동전선의 정부적 표현)였다. 이 두 경우 모두 혁명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부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혁명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요성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노동자들, 즉 사민당 소속 노동자들, 기독교 정당 소속 노동자들, 무당파 샌디칼리스트들 등등과 함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일정한 조건에서는 그 리고 일정한 보장이 갖춰진다면, 공산주의적이지 않은 노동자정부를 지지할 태세가 되어 있다. ……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형의 정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참가할 수 있다. 이들 정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대표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가는 역사적으로 불가피한 이행 단계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부가 구성되는 곳에서는 그러한 정부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가능한 노동자정부 형태는 혁명주의자들이 자신이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단 하나의 “순수한” 노동자정부 형태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같은 것이었다.

노동자정부들에 대한 코민테른의 유형 분류는 오늘날 다소 시대착오적인 지점이 있다. 구래의 “자유주의 노동당”과 사민주의 정당은 하나로 수렴되었고, 그에 따라 두 유형의 “부르주아 노동자 정부들”도 하나로 “융합”되었다.

또한 4차 대회에서 채택된 노동자정부에 관한 테제에는 이미 1922년에 발전하기 시작한 코민테른 내부 투쟁의 흔적을 띠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코민테른의 타락을 수반하였다. 예를 들어 지노비예프는 노동자정부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동일시하고자 하였다. “노동자정부”는 단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동의어”일 따름이라는 그 같은 해석은, 노동자정부 슬로건이 공동전선 제안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지점을 그 슬로건에서 제거해버리는 해석이다. 지노비예프의 사용법으로 보면, 그 슬로건은 오직 최후통첩주의적으로만, 예를 들어 사민주의 정부를 겨냥하여 최후통첩주의적으로만 제기될 수 있었다.

이러한 최후통첩주의는 그 기회주의적 대립물로 쉽게 전화될 수 있다. 스탈린과 부하린은 “노동자 □ 농민 정부”를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라는 역사적으로 퇴물이 된, 따라서 반동적인 개념과 동일시했을 때 바로 그랬다.

이것은 결정적인 점, 즉 그러한 정부는 강령적으로 볼 때 부르주아 정부라는 점을 모호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스탈린과 부하린은 중국에서 그러한 정부의 구성을 강력적으로 필수적인 혁명 단계라고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러한 정부는 트로츠키가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혁명의 길에 놓인 주 장애물”이며, 따라서 노동자정부 전술에 대한 부정이다.

코민테른 테제에 담긴 그 같은 느슨한 정식화들에 내재하는 위험은 세 번째 및 네 번째 노동자정부 유형과 관련하여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이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코민테른은 공산당원들이 그러한 정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해 놓았다. 일단 코민테른의 동의가 절대적 전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정부에 들어간 공산당 소속 각료들이 가장 엄격한 당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노동자 혁명 조직들과 가장 긴밀한 접촉을 맺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산당 소속 각료들이 절대적 독자성과 비판의 권리를 허용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혹은 여타 이유들로 인해 공산주의자들이 이러한 노동자 정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4차 대회가 있는 지 일 년도 안 되어 문제가 터졌다. 독일 내에서 사민당과 독립사민당이 장악한 지방정부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리고 그 지방정부들에 공산당원들이 들어간다면 어떤 조건으로 들어갈지를 놓고 분열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독일공산당은 파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노동자정부 전술의 올바른 사용법은 러시아에서 2월 혁명과 10월 혁명 사이의 몇 달 간에 볼셰비키가 보여준 실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볼셰비키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넘길 것을 요구했을 때 사실상 그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조직들에 바탕을 둔 정부, 즉 나중의 용어법으로 말하면 노동자정부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볼셰비키는 그러한 정부를 구성할 실제 세력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규정해 놓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 요구는 “대수학적”이다. 정부 구조의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정부가 소비에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정부의 정치적 임무들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즉각적인 평화,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 모든 은행의 국유화, 토지를 농민에게,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한 국가 무장력 (즉 소비에트 민병대)의 사용 등.

이러한 조치들이 최소한의 필수적 요구들이라는 인식을 노동자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볼셰비키는 마침내 이러한 인식 쪽으로 노동자들을 획득함으로써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에 대해 이러한 강령(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훨씬 더 큰 압력을 조성해내는데 성공했다. 볼셰비키는 이러한 압력과 함께 “부르주아지와 단절하라!”라는 요구를 결합시켰다. 그러나 멘셰비키는 그 강령을 실행하는 것도, 부르주아지와 단절하는 것도, 자신의 근거를 소비에트에 두는 것도 다 거부하였다. 볼셰비키가 조성해낸 압력은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에트 내 멘셰비키의 다수와 지위를 급속히 파괴해 나갔다.

권력이 실제로 소비에트로 넘어갔을 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소비에트 정부는 스스로의 근거를 소비에트 권력에 두고 필수적 조치들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당들, 즉 볼셰비키와 사회혁명당 좌파로 구성되게 되었다. 볼셰비키는 권력 장악에서 소비에트의 역할을 물신화시키지 않았다. 7월의 날들 이후 볼셰비키가 소비에트에서 내쫓기고나서 볼셰비키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요구를 접어버렸다. 대신에 레닌은 공장위원회를 노동자정부의 권력 기반이 될 수 있는 조직 형태로 보기 시작했다. 코르닐로프 사태 이후 소비에트가 다시 민주화되고 나서야 소비에트는 다시 볼셰비키 선전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

코르닐로프 쿠데타 동안 볼셰비키는 반동에 대항해 “부르주아 노동자정부”를 무조건적으로 무장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기서 볼셰비키의 목적은 혁명이 진

전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준비를 가능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계속해서 멘세비키를 권력에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파산과 계급적 배신이 노동자 계급의 다수에게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지는 정확히 케렌스키(당시 부르주아 노동자정부[임시정부] 수반)에 대한 “교수형 집행인의 올가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것은 실제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정부 형태가 되었던 또 다른 노동자정부를 위한 길을 닦았다.

볼셰비키의 노동자정부 전술 사용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들의 필요에 답하면서 동시에 노동자 계급 국가권력에 대한 필요를 제기하는 즉각적 조치들로 구성되는 “행동강령”을 내거는 것.

2) 이 강령(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부로서 노동자정부가 제기된다. 처음에는 대수학적으로, 그 정부의 정확한 구성은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노동자 정당들에게 부르주아지와 단절하여 이러한 노동자정부를 구성하라고 요구한다. 단 정부의 방어와 지지를 노동자들의 독자적 투쟁조직에 의존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4) 개량주의자들이 대중의 지지를 아직 잃지 않고 있는 한 혁명주의자들은 반동에 대항해 개

량주의자들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고 완전한 독자성을 유지한다.

5) 개량주의자들이나 중도주의자들에 의해 구성된 정부지만 소비에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 혁명주의자들은 반동에 대항해 그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방어할 것이다. 그러한 정부가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한 혁명주의자들은 봉기에 의해 이 민주주의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6) 이 전 과정에 걸쳐 혁명주의자들은 자신의 강령 및 조직 상의 독자성을 지켜나간다. 또한 노동자 계급의 전위 및 그 배후의 노동자 다수가 혁명의 필요를 인식하는 쪽으로 획득되자마자 혁명주의자들은 국가권력 장악에 나서야 하는 바, 혁명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신의 목적의식을 지켜나간다.

오직 현실 사회세력들의 충돌만이 노동자정부 요구에 정확한 “신수학적” 내용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17년에 소비에트 2차 대회 이전의 올바른 슬로건은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였던 데 비해 2차 대회 때는 “볼셰비키·사회혁명당좌파 정부 수립”이 올바른 요구였다.

개량주의자들에게 소비에트에 바탕을 둔 정부를 구

성하라고 하는 요구가 노동자정부 전술 사용의 중심 요소이긴 하지만, 그 요구는 언제나 정치 강령(정치적 프로그램)에 종속되어야 한다. 소비에트가 대의체인 한 소비에트는 혁명주의가 다수파일 수 있는 것만큼이나 반동이 다수파일 수 있다.

소비에트의 존재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1918년 11월 독일혁명에서 부정적으로 입증된 바이다. 거기서 권력은 노동자·병사 대표자 평의회에 수중에 있었다. 1917년 2월의 러시아에서처럼 그 평의회들은 권력을 그들의 개량주의 지도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사민당 지도자들인 에베르트와 샤이데만이 막스 폰 바덴 공과 연합하여 왕정을 구해내려 한 그들의 시도가 실패하고 난 뒤에 선포한 정부는 노동자평의회에 기반을 둔 공화주의 정부였다. 그것은 그 형태에 있어 노동자정부였다.

그러나 그것의 정치적 내용은 부르주아 노동자정부, 즉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공세를 봉쇄하고 중국에 파괴하기 위한 부르주아지와의 은밀한 연합이었다. 사민당 지도자들은 평의회에서 그들이 받고 있는 지지를 이용하여 그들의 권력 기반을 국회와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 의회적 기구로 이전시켰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 정부의 형태를 그 내용에 조응하도록 바꿔놓는 데 성공했다. 이제 부르주아지와 의 공공연한 “인민전선” 연합을 이룬 개량주의자들은 1919년 한 해 내내 그들의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전위세력을 테러하고 말살해 나갔다. 여기서 혁명적 전위세력이 노동자 다수로부터 고립되어 있던 상황을 교묘히 이용했다.

1920년 3월의 카프 폭동은 개량주의가 계급들 사이를 오가면서 책략을 부릴 그 능력이 절대적 한계점에 몰리게 될 때 어디까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 주었다. 부르주아 군대가 개량주의 지도자들인 에베르트와 샤이데만과 노스케를 버렸을 때 당시 행동에 나선, 그리고 부분적으로 무장한 노동자들에 의해 이들은 계속해서 권력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레기엔이 쿠데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정부”를 제안했을 때(그가 의도한 것은 ‘부르주아 노동자정부’였다.) 에베르트 등 이들 사민당 지도자들은 그 제안이 자신들을 노동자계급으로부터의 너무 큰 압력 하에 놓이게 할 것임을 눈치챘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동자평의회를 정부의 기초로 공공연히 선포하는 것은 사민당 스스로가 볼 때도 자신들이 실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기대치만 노동자들 사이에 조성해 놓는 꼴이 될 것이었다. 이러한 전망에 직면하자 사민당은 부르주아지와의 새로운 연합을 이루는 쪽으로 선택하였다.

일단 새로운 정부가 권력에 확고히 안착하자 국방군이 동원되어 노동자평의회들을 무장 해제시켰다. 레기엔의 제안 당시에 공산당은 그러한 ‘노동자정부’의 구성을 원리적으로 반대했고, 거기에 맞서 혁명의 필요성을 들이밀었다.

이것은 사민당이 곤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고리에 걸린 사민당의 고리를 풀어주는) 끝난 된 종파주의적인 대응이었다. 이때에 노동자정부 전술을 올바르게 사용했다면, 그것이 가져다주었을 효과는 분명하다. 그

러한 노동자정부의 정치 프로그램, 즉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관철시켰을 것이다. 무장한 노동자 평의회법 제화, 자유의용군의 해산, 소비에트 러시아와의 즉각적인 동맹,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전쟁 배상에 대한 반대.

이 모든 것이 실행되었다면 레기엔의 길에 장애물을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동시에, 공산당이 노동자 정당들로 구성된 정부라는 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반동에 맞서 그러한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방어하는 태도를 취했다면 이것은 공산당으로 하여금 사민당 소속 대중들과 더 긴밀히 접촉할 수 있게 해주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개량주의자들에 대해 부르주아지와 연합을 구성하지 말라는 압력을 더 강화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량주의자들이 부르주아지와 연합을 해버렸을 경우 노동자들은 개량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고 무장 해제시키려 하자마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독자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었을 것이다.

러시아에서보다 자본주의 선진국들에서 개량주의가 노동자계급에 대한 더 큰 장악력을 가지고 있고, 그 중 독일의 개량주의는 이 점에서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혁명가들로서는 독일의 경험이 제공하는 교훈들을 학습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방어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량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정부와 관련하여, 그것이 형태상 부르주아 입헌정부(즉 부르주아 노동자정부)건

혹은 형태상 노동자 조직들에 기반한 정부(노동자정부)건 혁명주의자들은 반동에 대항하여 (필요한 경우) 무장을 하고 그 정부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지지는 오직 혁명의 길을 취하는 노동자정부에게만, 즉 ‘진정한’ 노동자정부를 규정하는 핵심 조치들을 실행에 옮기는 정부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 코민테른과 제4 인터내셔널이 그랬듯이 우리도 부르주아 노동자당들이나 중도주의자들이 그러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음을 입증시켜 보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행강령>>이 설명하는 것처럼, “완전히 예외적인 환경들(전쟁, 패전, 재정 파탄, 대중들의 혁명적 압력 등등)의 영향 하에 스탈린주의자들을 포함한 소 부르주아 정당들이 그들 스스로 하고자 했던 것 보다 더 멀리 나아가 부르주아지와 단절하는 길로 가게 되는 이론적 가능성을 미리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사민주의자들과 스탈린주의자들이 부르주아지와 단절한 “진정한 노동자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이러한 만에 하나의 이론적 가능성을 트로츠키가 승인한 것을 가지고서 그의 아류 지지자들은 자기들 멋대로 왜곡시켰다. ‘그러한 사민당과 스탈린주의 공산당들을 포함하는 정부가 노동자정부이다’ 라는 식의 명제로 둔갑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사회당-공산당 정부가 부르주아 노동자정부라는 의미에서가 아닌 어떤 다른 의미로 노동자정부인 것처럼 말한단거나, 또는 영국 노동당에 의한 노동자정부 구성이 그 자체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한단거나 하는 것은 가장 비겁한 기회주의이다.

우리는 그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정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코민테른 4차 대회 테제의 정신은 아주 분명한 것이었다: “노동자정부”란 다음과 같은 것을 실행하는 정부를 가리킨다. 부르주아지를 무장 해제시킨다. 생산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통제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에 착수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강행하고 정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그들 자신의 조직들을 통해 무장시키며 이들 조직에 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진다.

우리가 노동자정부 “요구”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공동전선의 원리들에 맞춰서 혁명주의자들과 비혁명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지키

거나 강화시켜내기 위해 정부 수준에서조차도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제안이 곧 노동자정부 “요구”에 담긴 실천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여타의 모든 정부 형태들은 “부르주아 노동자정부”로 지칭되는 것이 정확한 용어법이다. 명백히, 노동자정부를 직접적인 요구로 제기할 지 여부는 정세 조건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권력 문제가 제기되는 혁명적 위기의 경우들이 아니라면 혁명주의자들은 ‘노동자정부’를, 진정한 혁명적 노동자정부에 관한 선전으로 제기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정부를 구성한 개량주의 정당들에게 부르주아지와 단절하고 노동자의 이해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하라고 요구한다. **혁명**



[기|교]

아방가르드

현재 현대차지부 및 기타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간의 1사1조직 통합논의가 원.하청 공동투쟁의 기제로 작용하여 아층의 투쟁동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면 굳이 1사1조직 통합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1사1조직의 통합이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동력을 파괴하고 관료주의, 조합주의에 의한 흡수통합 이라면 그 1사1조직 통합은 재고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1사1조직 통합이 완료된 시점인 현재 기아차 이동우 동지가 조합원 인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기아차지부의 사례에서 1사1조직 통합논의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번 4월 기아차 대대에서 드러났듯이 유독 비정규직 지회 부지회장이었던 이동우 동지만 조합원 인정이 되지 못하고, 해고자 복직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동우 부지회장이 2,3차 하청 조합원

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치열하게 원 하청 시측 자본과 싸워왔기 때문이다. 2.3차 하청 조합원과 계약직을 노조에 가입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동우 동지에 대한 조합원 불인정은 기아차지부의 입장이전에 사측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동우 동지는 투쟁의 핵심이기에 시측과 그에 순응하는 기아차지부 관료들은 기를 쓰고 이동우 동지의 조합원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동우 동지는 2004년에 입사했고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에서 2,3차 하청노동자로 2005년 기아자동차 비정
규직지회가 건설되면서 선봉대 중대장과 상집간부등의
활동과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을 역임하였다. 2005년
도에 비정규직지회가 단협을 체결했는데 그 과정에서
2·3차 업체 노동자들이 배제되어 2·3차 노동자들의
단협체결과 2006년 비정규직지회 임투를 위해 투쟁하
는 과정에서 해고되었다. 07년 점거파업을 이유로 원

하청 사측에 의해 고소, 고발 당하였으며 이랜드 이젠택 연대투쟁과 촛불투쟁에 결합했다는 이유로 2년6개월의 옥고를 치루었다. 2007년 점거파업 당시 100여명의 구사대에 의해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였다. 가장 치열하고도 헌신적인 사람에 대해 조합원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사측과 공조해서 철저하게 ‘이동우 죽이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아차지부 노조 집행부는 2007년 1사1조직 통합을 주도하며 비정규직 노조를 파괴했던 사람들이다. 지난 4월 기아차 대대의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통을 터뜨리게 하였다. 이들은 이동우 동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매도하며 김수억, 이상욱, 윤주형 3인의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만 처리하자고 주장하였다. 대대에서 기아차지부 대의원 A씨는 윤주형 동지에 대해 대의원의 신분으로 조합원에 대해 폭언 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조합원 활동이 아니라며 비난 하였다. 그가 말한 조합원이란 협력업체 사장의 친인척이며 전직 관리자였던 사람이다. 그는 3년 동안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생산공정의 변화와 주야간 전환배치를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노조를 탄압하던 사람이다. 노조의 2년여의 투쟁 끝에 그는 주임에서 면직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공정변화와 주야간 전환배치를 노동조합 분회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 그들이 매도하는 윤주형 동지의 폭언이란 대의원 신분으로 회사 측에 항의하며 작업거부투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그로인해 해고당한 것이다. (그가 엄연히 노조를 탄압하던 사측 관리자였는데도 불

구하고 조합원 가입이 된 배경이 있다. 2008년 1사1조 직 통합에 의한 기아차지부 관료들의 직가입을 통해 그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협력업체 사장의 친인척이기도 하지만, 기아차 집행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노회(기아 민주노동자회) 중앙집행위원장의 매형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윤주형 동지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왜곡하고 조합원들간의 폭언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또한, 기아차지부 대의원 B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왜 하지 않았는가 따지면서 오히려 해고자복지 투쟁에 대한 문제를 개인적이고 법적인 문제로 국한시키며,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해결해야 될 해고자 복지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 결국, 해고자 복지에 대한 문제는 김수억, 이상욱 동지에 대한 안전은 요구안으로 이동우, 윤주형 동지에 대해서는 집행부 사업으로 안고 가겠다고(사실상 기아차지부 집행부는 이동우, 윤주형 동지에 대한 해고복지안 상정을 거부하였다.) 기아차지부 집행부는 이 안전에 대해 날





(왼쪽사진) 해고자전원복직 1인시위. (오른쪽 사진) 이동우 동지에 대한 조합원 인정.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희망광장과 투쟁사업장 그리고 조직단체들의 연서명이 이어졌다.

치기 처리 하였다.

윤주형 동지 비토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기아차지부 관료는 어용인지 민주노조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들에게 도대체 아군은 누구이고 적군은 누구인가? 이러한 일들은 비밀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들 관료들은 사측자본과 안정적인 상생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에 사측자본과 타협하고 사측자본의 이해와 논리가 그대로 관철되는 것이다. 물론, 정규직 활동가나 정규직 조합원들 중에는 원청자본과 용역깡패들의 폭력침탈에 공동대응하며 비정규직투쟁을 도운 사람도 많다. 여기서는 기아차지부 정규직 전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기아차지부 노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관료를 비판하는 것이다. 기아차지부 노조간부들 중에는 실제로 사측과 타협하며 뇌물수수 5000만원으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자도 있다. 그는 기아차지부 노조간부였으며 기노회(기아 민주노동자회)의 수장이기도 하였다. 법원의 2차 판결이 날 때까지 그들은 사측의 조작과 탄압이라고 극구 부인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이 되고나서야 그를 제

명시했다. 이는 이동우 동지와 극명히 대별되는 사건이다. 그들 기아차지부 집행부 관료들이 얼마나 야전인수 격이고 사측자본과 타협적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지난 5월11일 발행된 기아차지부 합성특보에는 주간2교대, 임금단협안에 대한 요구만 있을 뿐이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1사1조직이고 누구를 위한 통합 이었는가? 2008년 사측의 탄압이 격렬해지는 시점에서의 1사1조직을 위한 기아차지부의 직가입 총용은 전부터인 기아비정규직지회를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는 파괴행위였으며 사측자본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사기극이었다. (현재 사내하청분회로 재편한 사내하청분회는 상집간부구성부터 각종쟁의행위와 교섭요구안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금속노조는 지난 2007년 3월 26일 ‘금속노조 전국 지 회장 수련대회’에서 15만 산별협약과 교섭구조 통일을

주었다. 어용세력들은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했던 정규직 활동가들에게까지 테러를 자행하였다. 여기에 정규직 조합원도 가담하였다.

4. 김모 조합원의 증언: 2007년 8월 31일 당시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아직까지도 그 충격이 남아있다. 그 때 당시 구사대로 나섰던 사람들이 관리자가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이라는 사실에,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던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충격이 너무 컸다.

5. 2007년 9월17일 어용세력과 구사대들의 연대대모
에 대한 폭력행위중 기아차지부 중앙위원 목격. 화성지
회 상집간부도 폭행에 가담.

6. 2007년 이동우 동지가 어용세력과 구사대 100여 명에게 폭행당할 시 삼십간부가 이를 말리려 했으나. 쌍 욱을 퍼붓던 노조 전간부 한사람이 “저 새끼 끌어내” 라고 말하니 100여명이 구타.

7. 금속노조 지도부는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의 징계를 회피하며 증거제시를 요구하였다. 기아차지부의 직가입 규약위반 및 비정규직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금속노조 지도부는 책임회피와 방관으로 일관하였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마찰과 대립으로 규정하였으며, 1사1조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 직가입 공세: 비정규직 지회 파괴행위

1) 2007년 3월 13일, 기아차 지부 화성지회(이하 화성지회)는 소속지 합성을 통해 “비정규직지회와는 조직 대통합을 이루고, 비조합원의 경우는 직가입 형태로 적극 조직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화성공장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기아차지부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 “예전과 같은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직 대통합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조직 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조직사업을 진행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아차지부와 화성지회가 말하고 있는 “예전과 같은 현장의 혼란”이란 비정규직지회의 독자 파업을 말한다.)

기아차지부 집행부의 이러한 초기의 입장표명조차 사실은 립씨비스였으며 이들은 직가입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1사1조직과 관련하여 “해당단위의 결정에 따른다.”는 금속노조의 규약에 따라 비정규직지회에 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지부 집행부는 집단적 직가입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입원서를 새로 쓰라.’며 협박했다. 이것은 탈퇴하지도 않은 금속노조에 개별적으로 다시 가입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이다. 또한 이들은 비정규직지회의 조직전환 총회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철저히 개별적으로 비정규직 지회를 흡수통합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초기의 직가입자 100명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광주, 소하리에는 한명도 없었고 사측 구사대나 어용들도 있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규약을 위반하는 기아차지부 관
료를 압박하거나 징계하기는커녕 그들을 두둔하였다.
이는 기아차지부 관료와 금속노조의 관료가 한통속 이



2~3차 사내하청 노동자나 식당, 청소노동자들도 가입 대상인가요?

물론입니다. 기아자 사내식당 파견업체인 현대투드는 화성공장에만 221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또 샌쥬리얼이라는 청소업체는 115명 중 55명이 조합원입니다. 노조 규약과 지부 규칙에 따라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로 노조 가입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2~3차 하청노동자, 식당·청소노동자들도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비정규직 단위의 파업권도 보장되나요?

금속노조는 규약 제 69조 ‘쟁의행위 결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단위의 쟁의결의 및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 지부, 본조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현장파업권을 금속노조가 규약에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6월3일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뿌려진 1사1조직 선전물

라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2008년 6월 3일 결의대회에서 “비 정규직에게 정규직 노조 가입의 문을 연 기아차 1사1조 직의 사례”라는 제목의 선전물을 통해 기아자동차의 1사1조직 사례를 모범사례라고 극찬했다. 실제로 보장되지 않는 사내하청분회의 파업권이 보장되며, 2·3차 하청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기극을 선보였다.

권○ 조합원 : 직가입자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사이에 인간차별이 너무 심하다. 어제는 기아차지부 대의원 선거 후 직가입자들이 비정규직지회를 이겼다고 축하파티를 하더라. 기아차지부 대의원 선거 때 당선된 직가입자들 중에 비정규직지회 투쟁을 파괴하는 데 나섰던 사람들이 많다. 하청업체 사장들이 데려와 현장에 심어놓은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김○○조합원: 본조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파괴했던 사람들이 직가입하고, 대의원 후보로 나가는 문제라도 해결해주었으면 좋겠다. 어용은 어용이다. 직가입한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또다시 노동조합을 떠날 것이다. 실

질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금속본조에서 공문 보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지회가 힘이 약해져서 당하고 있다. 사측은 8월부터 9월, 10월까지 온갖 핑계를 대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월급을 부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사측에서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파업을 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직가입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 현재 직가입자들은 비정규직지회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 직가입을 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체교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도부에게는 체포영장이 떨어져 있고, 직가입으로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 사측만 기세등등하다. 금속 본조에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지금 현장은 노동조합이 세워지기 이전과 비슷하다. 힘이 없다. 임금문제로 사측에 항의를 해도 사측은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거나 아예 요구를 외면해버린다. <기아 비정규직지회 파괴사례에 대한 자료출처: 사회주의 노동자 신문>

직가입 공세를 통한 기아차지부의 비정규직지회의 흡수통합은 사측 자본의 논리에 부합되는 노조파괴행위 그 자체였다. 항상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

창간호 발행에 즈음하여 - 〈혁명〉과 함께 혁명정당 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나가자!

전 세계적 차원에서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이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2011년 세계는 그 이전 시기와 분명 달라진 시대상을 분출시켰다. 북아프리카 중동에서의 혁명운동, 유럽에서 일반화된 광장점거운동, 자본주의 심장부 미국에서 터져 나온 ‘점령하라’ 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한국에서도 희망버스, 희망광장 운동 등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들 운동들은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다. 길게는 지난 30여년 이상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파탄과 짧게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공황이 낳은 역사적, 정치적 산물이다. 한국의 그것도 지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한편으로는 그들 지도부의 관료화와 특히 의회/개량주의 노선에 대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계급이 극단으로 몰고 간 양극화 현상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남발에 대한 반발과 분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지금 전 세계 지배계급은 지도력의 위기를 맞아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공황, 즉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유로존)에서의 재정위기, 국가부도 위기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흔들고 있다. 위기 그 자체가 노동자계급에게 저절로 기회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위기가 자본주의 붕괴로 곧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미 지배계급의 일원으로 행사하고 있는 개량주의 지도부의 지도력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대적전선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형성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자본과 노동 사이의,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적대관계가 날로 강화, 노골화되고 있지만 개량주의 지도부가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 사회주의 세력의 잘못된 전략/전술, 강령 없는 운동주의, 대기주의와 종파주의로 인해 노동자계급은 그 엄청난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본지를 통해 현 시기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대안 정세 구심, 대안 지도력을 형성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에게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비록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여 이를 실현시키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제시한 정치적 방향과 전술적 대안은 여전히 옳다. 통진당 사태가 터져 나온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 중요성이 커졌다. 통진당 결성을 전후로, 특히 통진당 사태가 전면화 된 뒤에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와 움직임이 새롭게 일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 선진노동자는 혁명진영과 함께 이 계기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 또 다른 의회/개량주의 정당이 통진당을 대신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주장을 혁명적 행동강령으로 정식화하는 것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평조합원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을 사회주의혁명정당 건설로 이끌어야 한다. 패배주의를 떨치고 지금 여기에서 혁명운동과 혁명정당 건설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

본지가 그동안의 준비호 단계를 마무리하고 이제 창간호로 나왔다. 정세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준비에 머무를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노혁추는 우리를 던져 노동자계급에게 주어진 과제를 앞장서서 실천할 것이다. 본지가 우리와 노동자계급을 연결하는 일차적인 통로가 되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본지의 창간을 축하하는 귀한 말씀을 보내준 동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2년 6월 1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운영위원장 **고민택**



〈혁명〉, 이렇게 실천하자!!

혁명!, 노혁추의 정세지 제호이다. 노혁추는 출범부터 당 건설체를 자임하고 자신의 임무를 당 건설을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실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 실천의 방안 중 하나가 정세지를 통한 개입과 노동자 계급 속에서 선진노동자들을 규합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분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 시간동안 노혁추가 정세지 〈혁명〉을 통해 벌인 정세개입은 일정의 성과도 있지만 일정한 아픔도 경과하였다.

이제 창간호의 발간을 통해 노혁추는 지난 활동을 반추해보고 앞으로 벌여야 할 실천을 진지한 고민 속에서 실천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신을 노동자 계급속에서 지도력을 가진 조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그 시작이 혁명의 창간호 발간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바라건데 혁명지가 단순히 월간정세지가 아닌 정세의 큰 줄기를 제시하고 이 줄기로부터 작은 가지들을 뻗어 노동자 계급 속에서 지도력을 확보하는 당건설의 자임체가 아닌 실제적인 주도력을 가진 조직이 되기를 바란다.

노혁추의 회원으로서 창간호 발간을 축하하며 혁명지가 지나는 공백인 현장에서의 긴박하고 생생한 소식들이 앞으로는 실리기를 바란다. 정세지로 출발한 혁명지가 앞으로는 현장에서의 소식들을 통해 전국의 선진노동자들이 개별현장이 아닌 전국적 시야를 가지고 단위사업장에서, 단체에서 자신의 실천을 하나의 기조를 가지고 벌여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실제 혁명지의 창간 목적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내가 있는 현장, 지역에서의 생생한 투쟁소식들을 기고할 것을 결의한다. 전국의 혁명독자동지들도 기고를 통해 많은 동지들과 자기 생각, 실천에서의 고민들을 공유하고 당 건설을 위한 투쟁에 동참하기를 부탁드린다.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정당 건설하자!!
노동자 계급의 힘으로 자본주의 철폐하자!!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충남지역위원회(준) 회원 이지윤

정세월간지 〈혁명〉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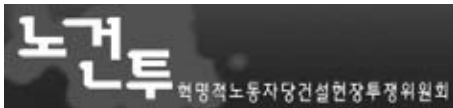
“야합과 노사협조주의로 치달는 노동운동판을 뒤집어엎는 노혁추의
전진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 철도노동자이자 〈노동자의 책〉대표 이진영

“우선 창간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준비호를 접해보면서 여러번 읽어야 이해될 정
도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창간호가 발간된다니 반갑기도하고 소장의 가치를 느낄
근간에 노동자정당임을 자칭하던 변질된 집단의 부끄러운 행태를 보면서 흔히 쓰이
는 요즘말로 멘탈붕괴를 느꼈습니다. 물론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지만 역겹기까지 할 정
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노혁추는 부디 노동자공심에서 흔들리지않는 뿌리로 거듭나길 바라며 더불어 탄탄
한 이론을 넘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여러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실천하는 현장
에서도 발수 있을 기대합니다.”

- 현대차지부 김훈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함께 하면서 이 투쟁을 자 본주의 철폐와 노동자계급 해방세상
을 향한 투쟁으로 이끌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노동자혁명당 군
비모임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쌍용차와 비정규직투쟁 등 투쟁 현장 곳곳에서 함께 하는 모습을 봤고, 이를 확장시키
려는 노력도 〈혁명〉지 준비호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정세나 노동운동의 흐름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노동계급과 함께 하는 사회
주의혁명정당 건설이 앞당겨지길 바라며, 창간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울산에서 용석록

정세월간지 〈혁명〉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정세월간지 '혁명' 창간을 축하합니다.

자본주의는 세계대공황의 늪으로 점점 더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투쟁도 점점 더 거센 불길이 되어가는 지금, 한국에서도 노동자 대중투쟁의 불씨를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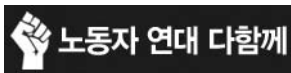
노동자계급의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앞당깁시다!

'혁명'이 노동자계급과 함께 호흡하며, 나아갈 길을 밝혀 주는 귀중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노동자 혁명당 추진모임 동지들의 정세월간지 '혁명' 창간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노동자계급투쟁의 한복판에서 함께 싸워나갑시다!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의 정세월간지 〈혁명〉 창간을 축하하며

아랍 혁명과 '점거하라' 운동 등 세계 자본주의에 맞선 도전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혁명〉이 창간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고름 범벅의 좀비 자본주의가 여전히 인류의 피를 빨아먹으며 생명을 연장하는 지금 상황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쌍용차 노동자 죽음의 행진 앞에서 우리는 치미는 분노와 슬픔을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혁명〉이 자본주의와 지배자들의 맞선 혁명가들의 대안과 전략, 전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지윤(‘노동자연대 다함께’ 운영위원회를 대변하여)

정세월간지 〈혁명〉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노동해방실천연대

“혁명” 창간을 축하합니다.

벌써 세계자본주의가 대공황 상태에 접어들어 여러 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자본주의는 이 공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대공황은 전세계적으로 거대한 반자본주의 투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다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노동자계급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대연합, 야권연대 등 노동자계급을 무장해제시키는 배신행위는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으로 노동자계급을 분기시키고, 노동자계급 속에서 사회주의 사상과 이론을 확산시켜나가기야 합니다. 이번에 창간하는 “혁명”이 한국 사회주의자들의 과제에 부응하는 풍부한 사회주의 사상, 이론지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황정규(해방연대 사무처장)

사회주의
노동자신문

〈혁명〉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이 태동한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합법주의·개량주의·스탈린주의를 넘어 노동자 대중 투쟁에 기반 한 혁명적 운동을 결의했던 20대 청년들도 어느 듯 머리가 희끗희끗한 장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현실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노혁추 동지들을 비롯해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전통을 잇고 있는 동지들도 이제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운동이 뚜렷이 후퇴하면서 운동의 원칙보다는 조급함이 분열과 이합집산을 강제하고 우리의 운동을 제자리에 맴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운동의 성격은 변화하고 있는데 조합주의와 민중주의운동의 잔재들이 아직 우리 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야 말로 길게 보고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의 것을 반복하는 것보다 현실의 변화는 무엇이고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합니다. 사회주의 운동에서 논쟁다운 논쟁이 이미 죽어버린 현실에서 〈혁명〉을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논쟁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사회주의노동자신문

동지들! 함께 투쟁합시다!

가칭)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과 함께 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활동을 통해 반드시 노동자혁명당을 건설할 의지가 있는 동지들은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소극적인 반대를 넘어
자본주의 세상을 끝장내기 위하여
혁명의 깃대를 굳게 움켜 쥐고, 붉은기 높이 들시다!
노동자계급의 권력을 쟁취하여, 착취와 억압 없는 세상으로 전진합시다!
동지들! 더 이상 머뭇거림을 멈추고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을 향해 힘차게 함께 합시다!

[후원 및 정기구독 계좌]

농협중앙회 040-12-245042 (양효식)

(반드시 저희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신 후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 및 독자기고]

E-mail : wrp@jinbo.net

전화번호 : 02) 6348-8318

(신청하시면 답메일을 드리거나 전화통화하여 구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에 반대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자 정당이 또 다른 의회·개량주의 정당 건설로 귀결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정치투쟁에 나서야 한다. 혁명정당 대신 초기 민노당을 복원하는 수준으로, 또는 좌파 시민주의 정당 정도로 귀결된다면 민노당 파산의 궤적을 — 이번에는 압축적으로 급속히 — 되풀이 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야권연대 구도로 다시 빨려들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노동자 정당 건설이 혁명정당 창당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은 그냥 당위가 아니라 노동자 독자 정치세력화/ 새로운 노동자당 건설이 성공하기 위한 유일한 담보 조건이다.”

— ‘〈혁명〉 창간호를 내며’ 중에서 —